

인천형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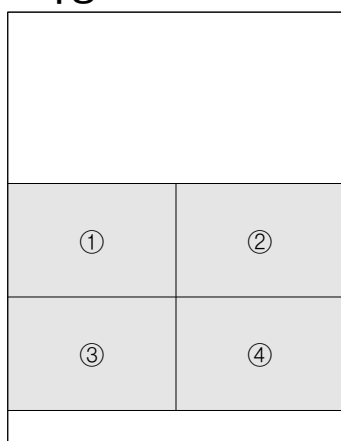
2024

일러두기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명칭과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었다. 기존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의 보통명사가 법률·행정 용어로 바뀌게 되면서 명칭의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문화유산’으로 표현한 법률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대상을 ‘유산’*으로 통칭하여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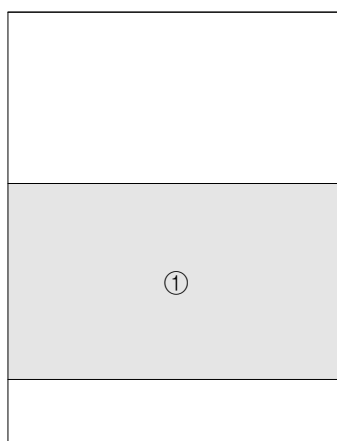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유네스코한국위원회)

표지정보



뒤

- ① 각국조계지계단
- ② 차이나타운 거리
- ③ 인천아트플랫폼
- ④ 긴담모퉁이집



앞

- ① 1940년대 중구 관동 일대,
출처: 「인천시사」(2002)

제 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4. 7.

(주)신화엔지니어링

자 문 위 원			
인하대학교	김경배	교수	(활 용)
인천시립박물관	손장원	관장	(건 축)
성균관대학교	윤인석	명예교수	(건 축)
연세대학교	이연경	교수	(건 축)
인하대학교	정일섭	교수	(행 정)
인천문화재단	문화유산센터	홍인희	과장 (사 학)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문화체육관광국	김충진	국장	
문화유산과	최정은	과장	
유산정책팀	김진석	팀장	
	한규복	주무관	

목 차

1. 과업의 개요	1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나. 과업의 범위	4
다. 과업 수행 체계	7
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체계 조사	9
가.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관련 법령 및 체계	11
나.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사업 현황	19
다. 한계점 도출 및 지역유산 제도 개선 방안	25
3. 국내·외 지역유산 관련 체계 검토	27
가. 국내·외 지역유산 관련 제도 검토 및 분석	29
나. 국내 지역유산 제도 문제점 및 대안 도출	43
다. 시사점 분석 및 지역유산 제도 고려사항	49
4. 인천형 지역유산 개념 정립과 기본원칙	51
가. 인천형 지역유산 개념과 기본원칙, 차별성	53
나. 인천형 지역유산의 관리방향, 보존, 재현 및 기록화 기준 및 방법	57
다. 인천형 지역유산의 유형화 방안	67
5. 인천형 지역유산 후보 선정	69
가.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자산 등 비교분석을 통한 부동산 지역유산 후보 선정, 목록화	71
나. 동산·무형 지역유산 후보 선정, 목록화	76
다. 우선 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활용 방안	77
6. 인천형 지역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81
가. 인천형 지역유산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요소	83
나. 인천형 지역유산 보존 및 관리 방안	84

7. 관광자원화 및 제물포르네상스 지원 등 활용방안	97
가. 시민 친화적, 참여형 활용 방안	99
나. 지역유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	100
다. 제물포 르네상스 검토 및 연계 활용 방안	103
라. 국가유산 및 타 관광 상품 등 연계 활용 방안	105
8. 시민 소통형 지역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113
가.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유산 기준 설정 및 후보 발굴	115
나. 시민 소통과 참여형 보존·활용 및 관리 방안	117
9. AI 첨단기법 등을 활용한 장기 미래 목표	121
가. 국가유산청 장기 사업추진 방향, 관리정책 분석	123
나. 인천시 지역유산 정책 방향과 목표, 비전	130
다. 단계별 실행계획, 자원확보 방안, 국비연동 방안	131
10. 인천형 지역유산 실행 제도 정비 방안	143
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제정안	145
나. 지역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149
다. 지역유산 관련 조직 및 인력 정비 방안	150
라. 유관기관, 민관 협력 방안	152
부록	
가. 보고회 주요의견 및 자문의견서	157
나. 참고문헌	170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다. 과업 수행 체계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오늘날 도시는 급속한 현대화로 인한 ‘유산’의 멸실·훼손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고조로 보존·관리와 활용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1961년 「문화재보호법」을 시작으로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지정·등록유산 제도를 통해 오랜 역사를 지니며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밖의 비지정유산은 훼손 및 멸실의 위기에 놓여 있음
- 인천광역시에는 다수의 시민이 기억하는 사건, 인물, 이야기들과 역사·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미래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정부의 자치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비지정유산이 존재함
-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전역의 비지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기적인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함

2) 과업의 목적

-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의 성공적 추진으로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유산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리·활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유산 관리·활용 방식으로 시민의 자긍심, 주체성, 지역 정체성 고취와 인천광역시의 문화잠재력 강화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나.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
- 유·무형의 비지정유산

2) 시간적 범위

- 인천 개항 1883년부터 형성된 후 30년 이상 지난 비지정유산

3) 과업 내용

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

- 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관련 법령 및 체계
- 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프로그램(사업)
- 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체계 한계점 도출 및 근대문화유산제도 운영 개선 방안 도출

나) 서울 등 타시도(해외사례) 근대문화유산(미래유산) 관련 체계 검토

- 가. 타시도(해외사례) 근대문화유산 관련 제도 검토 및 분석
- 나. 타시도(해외사례) 근대문화유산 제도 문제점 및 대안 도출
- 다.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제도 수립시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도출

다)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개념 정립과 기본원칙 제시

- 가.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의 개념, 범위, 기본원칙, 타시도와의 차별성
- 나.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의 관리방향, 보존, 재현 및 기록화 기준 및 방법
- 다.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의 유형화 방안 등

라)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후보 선정

- 가.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2,194개)에 대한 검토 및 건축자산 등과 비교분석 등을 통해 근대문화유산 후보 선정, 목록화

나. 무형 근대문화유산 기초 조사 및 후보 선정, 목록화

다.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중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관리 대상 선정 및 개별 관리·활용 방안 제시

※ 후보 선정 및 목록화는 서류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후보 대상 추천 및 선정을 위해 반드시 시민 추천(의견 수렴) 방안 추진

마)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제시

가.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요소에 대한 조사

나.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방안

1) 유형별 보존 가이드라인 제시

2) 보존대상 근대문화유산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바) 관광자원화 및 제물포르네상스 지원 등 활용방안 마련

가. 시민 친화적, 참여형 활용 방안 제시

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다. 제물포 르네상스 검토 및 이와 연계한 활용 방안 모색

라. 문화재 및 타 관광 상품 등과 연계한 활용 방안 제안 등

사) 문화재청 추진사업과의 연계 방안 제시

가. 문화재청 사업 방향 및 주요 추진 사업 파악 및 분석

나. 인천시 근대문화유산 관련 연계 가능 사업 발굴

다. 연계 가능 방안 및 추진 방법, 절차 등 제시

라. 문화재청과의 사업 연계를 위한 활용 PPT, 동영상 등 관련 자료 작성 제출

아) 시민 소통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제시

가. 시민참여를 통한 근대문화유산 기준 설정 및 후보 발굴 등

나. 시민 소통과 참여형 보존·활용 및 관리 방안 제시

다. 근대문화유산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시민 설명회 개최

자) AI 등 첨단기법 등을 활용한 장기 미래 목표 제시

- 가. 문화재청 장기 사업추진 방향, 관리정책 등 분석
- 나. 인천시 근대문화유산 정책의 방향과 목표, 비전 등 설정
- 다. 단계별 실행계획, 재원확보 방안, 국비연동 방안 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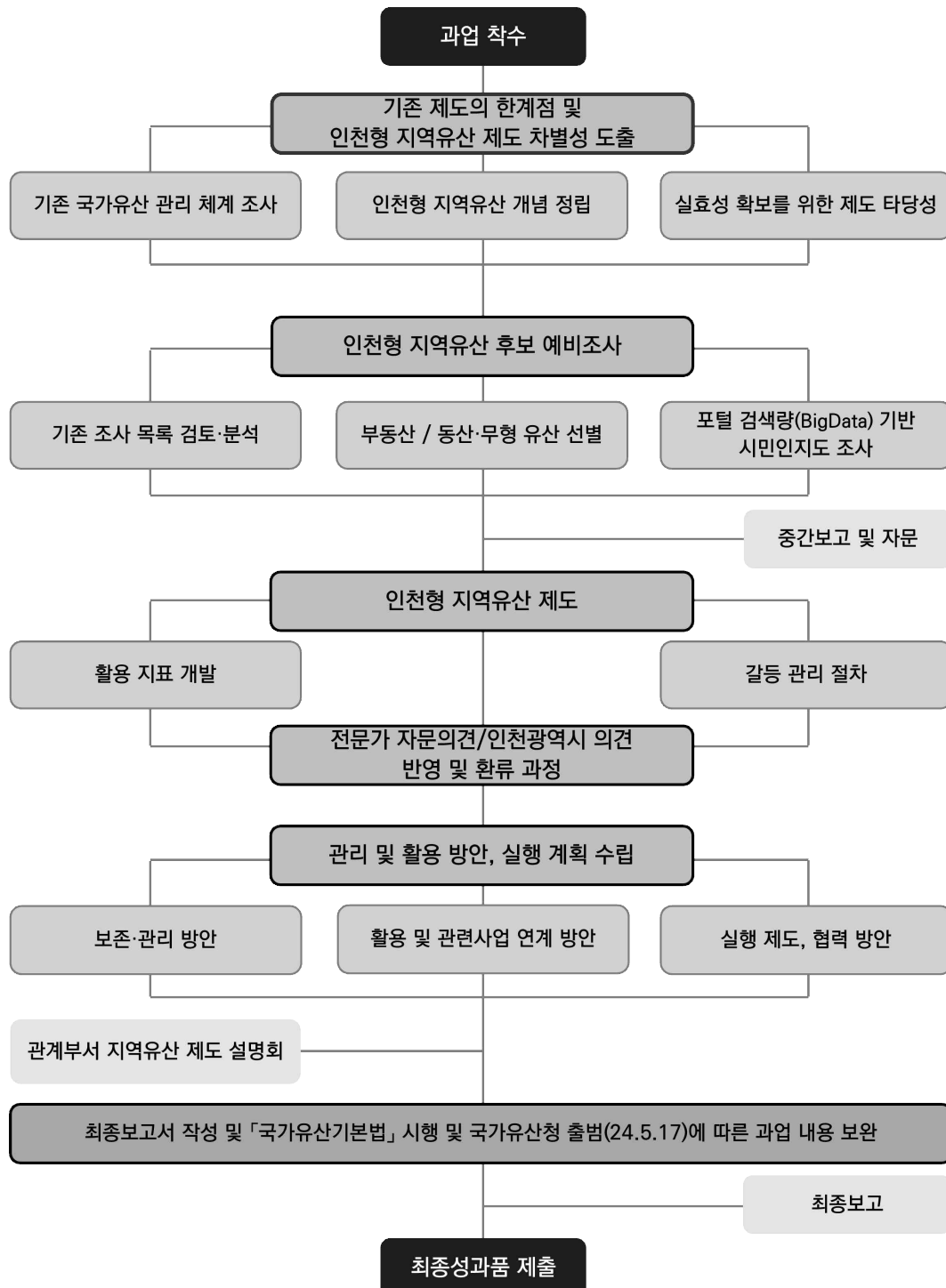
차)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실행 제도 정비 방안 마련

- 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제정안
- 나. 문화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다. 문화유산 관련 조직 및 인력 정비 방안
- 라. 유관기관, 민관 협력 방안

※당초 과업 착수 당시의 과업내용서 상으로는 ‘근대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으나 수행 과정에서 ‘지역유산’으로 개념을 정립하면서 용어 변경, 해당 장에서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함

다. 과업 수행 체계

1) 과업 수행 체계도



2) 과업 수행 일정

- 과업 수행 기간 : 2023. 5. 31. ~ 2024. 8. 13.
- 과업 중지 기간 : 2023. 11. 23. ~ 2024. 7. 11.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명회 의견 수렴 및 반영
 - 제물포 르네상스 및 국가유산 제도 등 과업 관련 사업 및 법규 고려

구 분	2023년							2024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과업 착수 및 착수보고	■													
기초자료 수집	■	■	■	■										
활용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	■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	■									
종합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									
관리·활용 세부지표 검토					■	■								
관리 및 활용 방안 수립						■	■							
갈등 관리 절차 도출							■	■						
제물포 르네상스 주요사업 연계방안 실행 계획, 사업 예산 계획								■	■					
국가유산 추진 방향 반영										■	■			
설명회											■			
보고서 작성 및 보완												■	■	■
최종보고														■
성과품 제출 및 준공														■
업무회의 및 자문회의		○				○		○		○	○			○

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체계 조사

- 가.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관련 법령 및 체계
- 나.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사업 현황
- 다. 한계점 도출 및 지역유산 제도 개선 방안

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체계 조사

가.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관련 법령 및 체계

1) 국가유산 보호 법령 연혁

가) 일제강점기

- 조선총독부는 1916년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과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등 문화재 관리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고적 조사와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함
- 주요 목적은 출토된 유물과 지표조사로 확인된 문화재를 정리 보존하고 식민지 조선에 전시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체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었으며, 1915년 12월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재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1916년부터 고적 조사계획을 조직적으로 추진함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등 문화재 관리 법령은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전까지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음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등 일제강점기 문화재 관련 법령과 관리행정은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의 문화재 법제와 관리체계를 수용한 것으로 일본 근대 문화재 제도의 연장선에 있음¹⁾

나) 해방 이후

- 1933년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을 유지하였고, 미군정기(美軍政期)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해당 법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1947년 9월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 1950년 1월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이 있었으나 폐기됨
- 이후 일제강점기 문화재 관리 법령을 대체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시도가 계속되었고, 1952년 정부는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임시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 6·25로 훼손된 고적 등의 복구공사와 국보고적의 긴급한 보존대책 수립,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인

1) 김중수,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2쪽.

식하여 새로운 문화재보호법 입안을 추진하여 1955년 정식으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가 구성되어 1958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와 문화재 전담기구 설치문제 등으로 1960년 「문화재법(안)」으로 대체되었으나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자, 정부는 1960년 10월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국무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후 11월 10일 국무원령 제92호로 공포·시행함
-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문화재 관계 법규라는 의의가 있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약 1년간 운영됨²⁾
- 최종 확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전문 7장 73개조 부칙 3조로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공포·시행되어 광복 이후 1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4년 만에 한국의 새로운 문화재 법제가 제정되었음

다)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은 일제강점기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재 법제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비교할 때 법률 명칭, 목적, 문화재 정의와 지정문화재 관련 조항, 법률 구성 등에서 매우 유사하며, 현재까지도 현저한 유사성을 보임³⁾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정의, 문화재 보호정책, 보호기반 조성과 같은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의 유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문화재 분야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1962년 제정 당시에는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지정문화재 보호에 한정하였으나, 1970년에는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보호 제도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문화재 보호 제도 도입
- 1982년에는 1970년에 도입된 국가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보호제도를 폐지하고, 지정문화재의 지정·관리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도로 구분하는 제도로 개편함
- 2001년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허가 중심의 지정 제도에서 신고·권고를 중점으로 두는 완화된 보호수단으로 비지정문화재 중 근대시기 건조물과 시설물의 보호를 시작하였고, 2005년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2017년 유형의 문화재로 등록 대상이 변경됨

2) 김종수, 2019,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193-194쪽.

3) 김용철, 2020,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 미술사학연구 제408호, 220-224쪽.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유형은 지정문화재인 국가지정문화재를 국보·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로 분류하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지정문화재 외에는 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일반 동산문화재의 직접적인 보호제도를 갖추게 되었음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중요문화재로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
-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됨
- **문화재자료** :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 **등록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천연기념물 성격은 제외) 및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 **매장문화재**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 포함)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지질학적 가치가 큰 유형의 문화재
- **일반동산문화재**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서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 고문서, 서간, 서각,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등 역사상·예술상·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단일법 체계에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문화재 법령 개정을 계속하였으나, 법령 규정 내용의 방대성과 복잡성 초래, 2000년 이후 사회적으로 고도지역의 광역문화재 보존, 시민참여를 통한 문화재 보호, 안정적인 문화재 보호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강하게 요구됨
-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 유형별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 제정의 분법화에 착수하여 종전 단일법 체계를 복수법 체계로 전환함⁴⁾
 - **고도보존·육성법** : 「문화재보호법」의 지정제도로 문화재분포지역이 넓고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높은 옛 수도지역(고도) 주민은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강한 규제와 제한을 받는데, 2004년 3월 고도지역의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함께 고도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특별법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문화유산국민신탁법** : 「문화재보호법」의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는 사유재산권 침해

4)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국보·보물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8, 11-14쪽.

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사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부족 등으로 한계에 봉착, 2006년 3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시민의 힘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특별법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보호의 특성상 문화재 예산은 사전예측이 어려워 안정적 재원의 조달 필요, 2009년 6월 「문화재보호법」 특별법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 「문화재보호법」 분법화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매장문화재 및 문화재수리 항목이 분법, 2015년 무형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법하여 독립법률로 제정
- **매장문화재법** : 2010년 2월 종전 「문화재보호법」의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수중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보완하여 문화재보호법과 독립된 별도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 **문화재수리법** : 2010년 2월 종전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및 하도급제한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과 독립된 별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무형문화재법** : 2015년 3월 종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호는 무형문화재 범위가 협소하고 원형 유지에 따른 박제화된 전승에 머물러 새로운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새로운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 독립된 별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법령 체계는 현행 법령과 분법한 3개의 법률, 사회적 수요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률 4개로 구성되었는데, 제정 이후 6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분법과 개별법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제정 당시 틀을 유지한 채 당면한 문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⁵⁾

구 분	법 률 명	제정시기
문화재보호법 분법	문화재보호법	1962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5년
사회적 수요에 따른 개별법 제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4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06년
	문화재보호기금법	2009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2011년

문화재보호법의 분법과 개별법에 의한 법령 체계

5) 주강원, 2023,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홍익법학 24(2), 220-224쪽.

라) 국가유산기본법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의 개정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고 있으며, 60년 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21세기 문화재 관련 법제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됨
- 현재의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 채택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
-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취지를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라는 용어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기존의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힘⁶⁾
-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⁷⁾
- 기존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각각의 국가유산을 규율하는 법으로 기능함
-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이 유형 문화유산을 규율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무형유산은 현행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자연유산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
- 근현대문화유산은 기존의 등록문화재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재편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6) 문화재청,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2023. 4. 27. 보도자료

7)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2024. 5. 17. 시행) 제1조(목적)

법률(12)	대통령령(15)	부령(10)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출처: 국가유산청, 2024. 5. 30. 기준)

2) 국가유산 유형 및 성격

- 「국가유산기본법」은 포괄적인 국가유산의 정의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의 유형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를 밝히고 있음
-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은 다시 개별법에 따라 세부 분류를 정하고 있는데,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등 3가지 유형, 자연유산은 명승, 천연기념물 등 2가지 유형, 무형유산은 전통적 공예·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그 외에 지정·등록 주체에 따라 국가 지정·등록유산과 시·도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매장유산 등으로 분류하며, 소재지에 따라 국외소재국가유산을 정의하고 있음
 - **국가지정·등록유산** :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구분	정의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자연유산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과 유형별 정의

기 존				변 경 ('24.5.17.부터)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 기본법」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재				「문화유산법」(개정)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사적지 등			자연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법」(제정)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문화재(전통공연, 공예 등)				무형유산	전통공연, 공예 등
		「무형유산법」(개정)				

구분		문화재						비고
분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유형별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등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경치 좋은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	국가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 자료
	시도	**유형	**민속	**무형	**기념물	**기념물	**기념물	
등록	국가	국가등록	국가등록	-	국가등록	-	-	
	시도	시도등록	시도등록	-	시도등록	-	-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지정	국가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	국가	-	-
	시도	-	-
포괄적 관리	**향토·지역(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분류 변경(출처: 국가유산청)

나.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사업 현황

1)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정비 및 관람객의 관람 환경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산청에서 주관
- 국가유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은 후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는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국가지정유산의 보수정비는 국비 70%, 국가등록유산의 보수정비는 50%의 보조율을 지원받게 됨
- 국가유산은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신청 제외되며, 특별점검, 정기조사, 수시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당해 국가유산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하도록 국가유산청 지침에서 규정함

지원대상	지원내용
당해 국가유산 수리	•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의 복원, 보수, 보존처리, 치료 등의 행위
토지·건물 매입	•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국가유산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발굴조사	• 연구, 유적의 정비,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장국가유산을 조사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산 보호 시설 및 조치	• 국가유산을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국가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국가유산 기록화 및 연구	• 국가유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 발생에 대비하거나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기타 용역 등의 사업
국가유산 관리시설	• 국가유산을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안내·방범 등의 시설
국가유산 관람편의시설	• 국가유산의 관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
국가유산 부대시설	• 국가유산과 일체를 이루는 주변 시설
국가유산 가치 증진	• 국가유산 공개를 전제로 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등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
국가유산 경관정비	•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조성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출처: 국가유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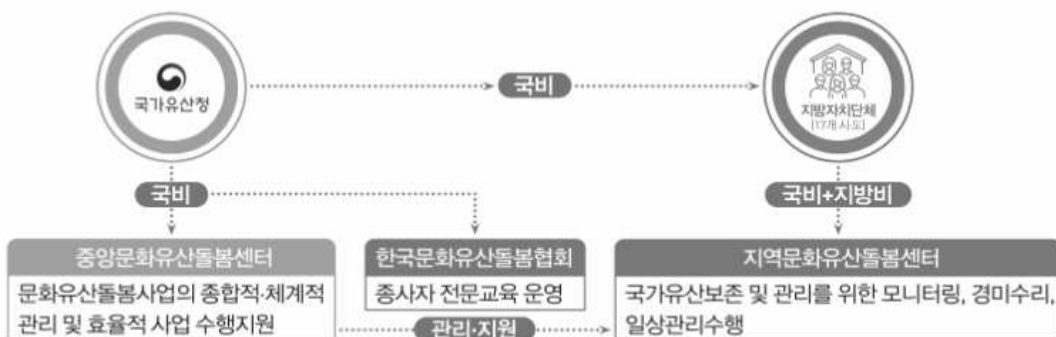
2) 문화유산돌봄사업

- 국가유산의 상시 관리를 통해 훼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국가유산의 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의 신속한 보수 및 재해 발생시 응급 조치, 쾌적한 국가유산 관람환경 조성 및 주변 경관 등을 보존하는 사업
- 국가지정·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을 우선 관리하며, 추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비지정유산을 관리할 수 있음
-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용규정」에서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업무 범위와 운용 절차 등을 규정하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국가유산 관람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행을 목적으로 함

사업범위



사업 체계도



문화유산돌봄 사업 범위 및 체계도(출처: 문화유산돌봄)

3) 국가유산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을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고자 국가유산청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
- 국가유산 행정의 인력, 예산, 조직 등의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유산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국민 모두가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된 국가유산을 찾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즐기으로써 국가유산을 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함께 하고자 추진
- 국가지정·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뿐만 아니라 비지정유산까지 포함하여 국가유산 보존 활동을 시행할 수 있음

구분	세부내용
주변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곳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쓸고, 닦고, 가꾸는 활동 • 지킴이 활동 가운데 본래의 근본취지에 가장 잘 부합되는 활동이자, 최우선적인 기본 활동으로, 산간오지 등에 떨어져있어 지속적인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국가유산, 유적 등에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활동
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과 그 국가유산의 올바른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위한 잠재적 환경요소 등을 활동의 대상으로 삼아, 예방적 차원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니터링 •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활동인력이 대상 국가유산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보존관리·관람여건·관람문화·행정제도 분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활동
소개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소개와 홍보활동을 통한 결과물(교육효과)로써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 즉 ‘보호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정해진 학습 또는 연수과정을 통해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지식집약적인 활동’ 또는 ‘국가유산분야 사회교육활동’으로 분류됨 • 풍부한 내용소개도 좋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국가유산소개 및 홍보활동이라는 점이 활동의 원칙
협약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 전문기관 등과 국가유산지킴이 참여·후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 2020년 기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간 61개 활동 중 영리법인 46개, 공공기관 12개, 비영리법인 3개 활동 중

국가유산지킴이 주요활동(출처: 국가유산지킴이, <https://jikimi.khs.go.kr/>)

4) 국가유산 활용사업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활용이라는 정책 아래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향유권 신장, 국가유산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생생국가유산,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유산야행, 전통산사문화유산 등의 활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은 2008년부터 “국가유산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방침으로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국가유산 관광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
- 문화유산야행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이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주변의 국가유산과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8개의 테마로 야간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
-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생생국가유산, 문화유산야행이며, 생생국가유산은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등 5개 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문화유산야행은 중구에서 운영하여 지역 특화 교육·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⁸⁾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대표사례
생생 국가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자고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여 국가유산이 역사 교육의 장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 • 유형·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 국가유산들을 활용한 공연, 체험, 교육, 답사, 스테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프로그램 	국가 및 시도 지정·등록 유산 (비지정유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중구, <세계가 만나던 곳, 인천개항장> •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독립의 그 날로 시간여행>
문화유산 야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이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국가유산 야간관람(개방), 체험, 공연, 전시 등 국가유산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 • 국가유산을 품고 있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특색 있는 야간 문화를 만들어가고, 무형유산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경험 	국가유산 및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 부산, <피란수도 부산 문화유산 야행>

2024 국가유산 유유자적 활용사업(출처: 국가유산청, 2024 국가유산 유유자적)

8) 인천광역시, 2023, 2023년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18쪽.

-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 인천의 근대문화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사업은 중구의 생생 국가유산 ‘세계가 만나던 곳,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등 2개 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4개 군·구는 자연유산 또는 백제, 조선시대 등 전통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인천광역시 중구의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은 2016년 ‘개항장 밤마실’을 시작으로 8회 이상 개최되었고 2023년까지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됨⁹⁾
 - 2023 인천개항장 문화유산야행은 개항장 라이팅쇼(미디어아트쇼), 시민 참여 개항장 패션쇼, 140인의 플래시몹, 야행마니아아카데미 등 주민주도형 축제 프로그램 다수 운영
 - 로컬프리마켓, 개항장먹투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항장 내 상권과 상생 도모 평가, 용기 내 챌린지(다회용기 지참하기), 개항장 에코 프렌즈(대중교통이용) 이벤트, 야행 최초 다회용기 도입 등 친환경 캠페인 등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의 근대문화와 관련된 활용사업은 모두 인천광역시 중구에 한정되어 있어 중구 이외 타 군·구의 지역유산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 필요함

구분	사업내용	주관
세계가 만나던 곳, 인천개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인천 중구 개항장 일원 • 목적 : 개항장의 숨결이 살아있는 근대문화유산과 관내 무형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가치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 내용 : 장소 미션 활동을 수행하며 근대문화유산을 주도적으로 답사하는 체험 및 인천 개항시기 세계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개항시기 사교 문화를 배우는 강연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유산야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 목적 : 문화유산 야간향유 기회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내용 : 문화유산 야간 개방, 도보 탐방, 문화유산 활용 체험프로그램 등 	인천광역시 중구

2024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유유자적 활용사업 현황(출처: 인천광역시)

9) 인천관광공사 2023. 12. 18. 보도자료

(https://www.ito.or.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1152&bcd=report&pgno=1)

5)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및 비지정유산 활용사업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지정·등록유산 2개소와 비지정유산 1개소 총 3개소를 대상으로 활용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구)제물포구락부는 인천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유산이며, 인천시민애집은 인천광역시 등록유산인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활용하고, 지정·등록되지 않은 비지정유산인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긴담모퉁이집’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 위탁을 통해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을 위한 전시공간, 쉼터, 전시·체험·교육 콘텐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 인천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천시티투어는 순환형노선 프로그램인 인천 레트로노선과 테마노선 프로그램 월미도투어, 강화힐링투어 등을 통해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와 근대시기의 유산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구분	사업내용		주관
구)제물포 구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산 : 인천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위치 :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제물포구락부 아트갤러리, 전시·체험 콘텐츠 등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인천시민 애(愛)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산 : 인천광역시 등록유산• 위치: 중구 신포로39번길 74• 차담이 있는 시민강좌, 제물포정원 프로젝트 등		
신흥동 옛 시장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지정유산• 위치 : 중구 답동로 12번길 10• 전시관, 관람객 쉼터, 재현, 탐방로 거점공간 등 운영		
인천시티 투어	순환형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레트로노선 : 답동성당,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상상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 등 근대유산과 송도 전시관·쇼핑시설 순환	인천 관광공사
	테마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미도투어 : 월미공원, 한국이민사박물관, 월미유람선• 강화힐링투어 : 강화 소창체험관&조양방식	

2023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및 비지정유산 활용사업 현황(출처: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다. 한계점 도출 및 지역유산 제도 개선 방안

■ 지정·등록 국가유산 위주의 정책

- 국가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며, 그 외 시·도의 국가유산 보호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 시·도 지정유산 또는 시·도 등록유산, 국가유산자료 등으로 구분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음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조항에서 지정·등록되지 않은 비지정유산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제도 필요

-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유산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토문화유산(향토유적, 향토유산, 향토문화재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와 같은 비지정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함
-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강화군,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 등지에서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유적, 지역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비지정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비지정유산의 관리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였음
- 다만,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에 소재한 비지정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산 및 지원 체계에 관한 근거가 미흡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관리체계가 요구됨
- 인천광역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대내외적 여건과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의 요구, 일반 시민의 의견까지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

3

국내·외 지역유산 관련 체계 검토

- 가. 국내·외 지역유산 관련 제도 검토 및 분석
- 나. 국내 지역유산 제도 문제점 및 대안 도출
- 다. 시사점 분석 및 지역유산 제도 고려사항

3. 국내·외 지역유산 관련 체계 검토

가. 국내·외 지역유산 관련 제도 검토 및 분석

1) 국내 지역유산 관련 제도

가) 중앙부처

(1) 국토교통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제도

- 2015년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정의(「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
 - 제2조(정의) 제1항에서 「문화유산법」 또는 「자연유산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건축자산’은 유산 및 문화유산에 비해 실용가치를 중시하고 경제성 증진을 고려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능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¹⁰⁾
-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제정 이전에 별도의 자치조례를 통해서만 추진해왔던 한옥 또는 근대건축물에 관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¹¹⁾
- 건축자산 제도의 수립 주체는 국가(국토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이며, 국토교통부에서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지자체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운영됨
- 건축자산 제도의 주요 추진 절차는 지역 내 소재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흥 시행계획 수립
- 광역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거나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건축자산 중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의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 조세 감면, 기술 및 재정지원과 관계 법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1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3쪽.

11) 건축공간연구원,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우수건축자산은 예술적·역사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가치가 멸실·훼손될 위험이 있어야 함
- 「문화유산법」 또는 「자연유산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향토문화유산 조례’와 유사한 목적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호응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며,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지 못한 대상물의 관리나 보호 방법에는 한계를 가짐¹²⁾

장	내 용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 및 철거 등)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재 등록 신청)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제5장 한옥의 진흥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제35조(우수사례 발굴·시상)	
제7장 보칙	제36조(건축자산 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8조(보고 및 감사) 제39조(비밀 업무의 의무)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과태료)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12)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41쪽.

(2) 국가유산청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¹³⁾

- 해당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이전 2020년부터 5개년을 목표로 수행된 연구로, 연구의 배경에서 구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의미와 특징이 반영된 법과 제도를 보완, 보호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음
- 기존의 ‘건조물’, ‘명승’, ‘근대건축물’, ‘역사문화환경’ 등 특정 대상물 중심이 아닌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전국에 산재하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문화자원의 조사와 결과물의 DB 구축,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함
- 역사문화자원은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공공자원을 지원하는 활용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가치 증진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근본적 조치로 판단¹⁴⁾
-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제정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 「문화재보호법」 혹은 상위법에 “국가유산(문화재)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유산(문화재)을 역사문화자원으로 지정”하고, 보호와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연차 (착수연도)	조사 및 목록화, DB 구축 대상지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1차(2020)	대구, 경북, 강원	개념 정의, 관리 및 활용 기본방향 제안 향토유산자원 표준 조례 가이드라인 마련
2차(2021)	서울, 인천, 경기	향토유산자원 표준조례 제정 및 주체별 활용 방안 마련
3차(2022)	부산, 울산, 경남, 충북, 충남	법제화를 위한 추진 방향 마련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추진전략 마련
4차(2023)	광주, 전남, 제주	역사문화자원 관련 법 제·개정안 마련 비도시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추진전략 마련
5차(2024)	전북, 대전, 세종	역사문화자원 관련 법 제정 또는 관련 법 개정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구축방안

국가유산청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체사업별 추진 내용

13)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14) 문화재청, 2020,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법제화 방안 연구

나) 지방자치단체

(1) 근대문화유산 및 근대건조물 보호 조례

-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을 비롯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에 의해 지정·등록되어 보호받는 국가유산을 제외한 비지정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보호 대상은 주로 근대 시기에 조성된 건조물, 기념물 등 유형적 유산에 집중되어 있음
- 2024년 5월 17일 시행 「국가유산기본법」 이전 구 「문화재보호법」을 반영한 조례로 정의와 대상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 표기는 그대로 수록
- 서울특별시 근대문화유산을 시작으로 전주시, 파주시 등이 근대문화유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문화자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외에도 근대건조물, 특화거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는 기존의 지정·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문화재) 중 지역의 기억, 정체성을 표현하는 근·현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함
- ‘근대문화유산’ 또는 ‘근대건조물’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19세기 개항기’를 시점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지정된 것으로 정의함

조례명	정의*
서울특별시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근대문화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 • 서울 근대문화유산: 서울특별시 근대문화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근대문화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근대문화유산
전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
파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 파주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파주시 근대문화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 • 파주시 근대문화유산: 파주시 근대문화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근대문화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파주시장이 선정한 근대문화유산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향수와 애정이 담긴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것으로서 광주광역시 문화자원선정위원회가 역사적·예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함 • 광주시 문화자원: 제1호에 따른 문화자원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광역시장이 선정한 문화자원을 말함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역사·학술·예술·기술 분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중 공주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로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및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19세기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된 것으로서 아래 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는 제외 1.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2.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3.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는 제외 • 개방형 근대건조물이란 근대건조물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시설로서 주 용도가 박물관·전시관·생활관·체험관·교육관·휴게공간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개항기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로 접어든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시에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

지자체별 근대유산 관련 보호 제도

* 2024년 5월 17일 시행 「국가유산기본법」 이전 구 「문화재보호법」을 반영한 조례로 정의와 대상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 표기는 그대로 수록

(2)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제도

- 미래유산 제도는 기존의 전통적 시대를 배경으로 유형적 자원에 한정되었던 향토문화유산 등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 시기의 형성된 기억, 이야기, 생활문화 등의 무형적 자원을 포함한 개념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¹⁵⁾
- 미래유산 제도는 전국에서 2010년 서울특별시가 최초 도입한 제도로, 서울 미래유산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미래유산의 주요 대상이 근현대 시기 형성된 유산임을 밝히고 있음
- 조례에 따르면 ‘미래유산’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대상에서 제외됨
- ‘서울 미래유산’이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함으로써 ‘미래유산’과 조례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을 구분하고 있으나, ‘미래유산’과 ‘서울 미래유산’ 모두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가치를 인정받은 것을 대상으로 함
- 미래유산 제도의 한계점으로는 미래유산을 기존 국가유산과 동일한 시각으로 인식하고, 기존 국가유산 활용방식을 답습한 획일적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세분화되고 있는 미래유산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안 부족을 들 수 있음¹⁶⁾

15)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4월 기준, 공주시, 대전광역시, 동해시, 부산광역시, 부여군, 서울특별시, 원주시, 의정부시, 전라남도, 전주시, 창녕군, 청주시, 파주시에서 자치조례 시행 중에 있음

16) 서울연구원, 2023, 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방향, 2023.09.07.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지자체 조례*	정의 및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유산 :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 서울 미래유산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선정 • 미래유산 심의 및 선정·취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두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둠 •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미래유산 :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및 소유자 등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 • 건축자산 :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둠 •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활용을 위한 홍보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후 3년 이내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 훼손 시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유산 : 근·현대 파주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 파주시 미래유산 :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 •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둠 •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가치 등을 기록하고 홍보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유산 :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 부산 미래유산 :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 •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둠 •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유산 : 근현대 청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 청주 미래유산 :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 •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청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둠 •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가치 등을 기록하고 홍보하여야 함

주요 지자체별 미래유산 조례 주요 내용

*조례 최초 제정·시행 연도순

2) 국외 지역유산 관련 제도

-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등록 제도는 20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기존 도심과 건축물이 파괴·훼손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1913년 프랑스의 「역사기념물에 관한 법」 제정에 이어 1966년 미국 「국가역사보호법」, 1947년 영국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으로 각각 제정·시행, 아시아에서는 1996년 일본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등록유형문화재 제도 도입¹⁷⁾

국가	대상 및 기준, 주요 내용
프랑스 역사적 기념물 (1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 개념인 ‘역사적 기념물’의 대상이 확장되면서 근현대문화유산 포함 • 초기 등록에 머무르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정이 전제되었으나, 현행 등록 제도에 대한 인식은 지정보다 경미한 보호조치로 변화 • ‘등록’은 신고로 현상변경 가능, 주변 보호는 ‘지정’과 동일하게 사전 허가 필요 • 보존에 필요한 유지보수 공사의 실시 비용을 총 공사비 40% 범위 내 지원
영국 등재건축물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필수적으로 충족하는 완공 30년 이상의 건축물 대상, 법적 기준 5가지와 일반원칙 5가지 명시, 3개 등급으로 구분 관리 • 대상은 대부분 건물이지만, 교량, 기념비, 조각, 전쟁 기념물, 풋말 등도 포함 •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승인 후 진행,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형사범죄 • ‘국가유산기념기금’ 등을 통해 9가지 종류별 보조금 지원, 공식 보조금 외 타 공공 기관 또는 재단에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 • 등재건축물 외에도 임시등록제도, 임시보존건축물 고시 제도를 통해 보호
미국 유적지 국가등록부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미역사보존법」에 의해 근·현대 유산을 포함하는 유적지 국가등록부 운영 • 50년 이전(50년 내도 가능) 구역 또는 지구, 장소 또는 유적, 건물, 구조물, 물체 • 등록 기준은 사건, 인물, 디자인 및 공법, 자료적 가치 등 4개 항목 중요성 평가 • 연방정부에서는 개인 소유자에게 어떤 규제도 없고 매각, 수리, 처리 가능하나 주·지역 정부마다 규제가 상이함 • 수리·개조와 등록 신청을 위한 연방 보조금 지원, 민간, 주·지역 정부에서도 지원
일본 등록문화재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후 50년이 지난 건축물, 토목구조물 및 기타 공작물로서 ①국토의 역사적 경관에 기여 ②조형의 규범 ③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신고제와 지도 조연 등 느슨한 보호조치로 기존 지정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 • 현상변경 등 외관의 변경이나 이축 시 신고는 필요하나, 규제 강화는 없음 • 문화청에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한 기술적 지도, 현상변경 신고에 대한 지도 또는 조연·권고, 공개 등에 관한 지도·조연 등 기술 지도 요청 가능

국외 근대시기 형성된 유산 관련 관리제도

17) 문화재청, 2021,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35-104쪽.

가) 프랑스

(1) 역사기념물 제도¹⁸⁾

- 프랑스의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제정한 「역사기념물에 관한 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음
- 프랑스의 유산 개념에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현대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 논의는 없었으며, 유산 개념이 확장되면서 근현대문화유산이 포함됨
- 19세기에 조사한 각종 건축유산을 중심으로 역사기념물을 포함한 유산을 보호·관리하는 토대가 되었고, 국가가 보호·관리하는 역사기념물은 총 4만 3,000건에 이르며, 등록(Inscription)된 것과 지정(Classement)된 것으로 구분됨
- 하나의 건축유산이 역사적·예술적·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문화부 장관이 인정할 때 국가는 역사기념물로 지정
- 비록 이와 같은 정도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히 입증될 때에는 일종의 광역자치단체장(레지옹)의 명령으로 역사기념물로 등록
- 역사기념물 지정·등록을 위해 사전에 학술적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각 레지옹(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한 문화사업국의 학예연구사가 사전 학술적·기술적 검토를 하고, 등록·지정 대상으로 신청함
- 법 제정 초기에는 역사기념물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관리하였으나 1943년부터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980년대 초 행정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하면서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역사기념물과 주변의 보호·관리제도가 도시·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함
-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관리 제도는 당초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관리 방식의 기초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18) 이수진·류제현, 2019,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1913~2016, 문화재 52(2), 94~111쪽.

(2) 20세기 유산 인증 제도

- 프랑스 문화통신부에서 1999년 법령 발효, 20세기 도시·건축유산에 대한 기초연구와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하에 제도 운영¹⁹⁾
- 대상은 1900년에서 1975년 사이에 건립된 교량, 주택, 공공건물, 종교 건물, 광장, 관광시설 등이며, 20세기 유산 인증 대상이 이후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고 있음
- 주요 운영 내용은 라벨을 부여하여 인증하며, 라벨은 건축물과 도시의 일부분에 지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하는 대상과 그 외의 대상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로고 형태의 명판을 부착하여 기념물임을 인증²⁰⁾
 - 지방정부에서 관련 연구자, 건축가, 건축학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조직하여 20세기 유산 인증대상 목록 작성, 보존가치 도출
 - 작성된 목록은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과 실무팀 조사를 통해 작성, 지역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레지옹)장에 의해 승인
 - 광역자치단체장 승인 후 20세기 유산 라벨 부착, 홍보 사업 추진
 - 20세기 유산 인증대상 목록에 대해 지역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연 1회 이상 개최
- 법적 차원의 보호 또는 보존 조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은 해당하지 않고 라벨 제작 및 부착은 소유주가 부담
- 20세기 유산으로 인증되면 프랑스 문화통신부 포털에 등록하여 홍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전시, 출판, 방송 등의 시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코스 및 산책로 개발 등 운영



프랑스 20세기 유산 인증제도 라벨링 사례(출처: 서울연구원, 2013)

19) 문화재청, 2021,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102쪽.

20) 문화재청, 2022,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나) 영국

(1) 등재건축물 제도

- 영국은 1947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의 권리는 건물소유자의 재산권보다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건축물의 등재는 소유자 동의 없이 보상을 동반하지 않고 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건축적 의장이 뛰어난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장이나 역사(驛舍), 병원건축, 감옥 등 사회경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물도 포함²¹⁾
- 영국 법으로 시행, ‘등재(Listed)’는 보존 명령이 아닌 해당 건축물의 뛰어난 가치를 기리기 위한 인증(Identification) 절차에 해당함²²⁾
- 등재건축물의 대상은 법에 근거하는 건축적·역사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일반적으로 완공 30년 이상으로 한정하나, 특별한 경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을 등재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은 법적 기준과 일반 기준 및 원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총 3개로 구분한 등급 기준을 적용함
 - 법적 기준 : 건축적 가치, 역사적 가치, 집단적 가치, 개별 요소의 가치
 - 일반 기준 및 원칙 : 연대 및 희귀성, 미학적 가치, 선별성, 국가적 중요성, 보수상태
 - I 등급 : 두드러진 (건축적, 역사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 II 등급 : 지역적 중요성을 넘어서 특별히 중요한 건축물
 - III 등급 : 특별한 건축적, 역사적 건축물²³⁾
- 등재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변경 등의 행위는 내·외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 이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위법행위로 간주함
- 지방자치단체는 등재건축물 또는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수리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금 또는 융자 지원의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이러한 보조금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21) 윤선자, 2011,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방안 연구, 한국근현대사 연구, 2011(57), 195-221쪽.

22) 문화재청, 2021,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97쪽.

23) 문화재청, 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309쪽.

(2) 지역자산 공동 소유 운동

- 영국은 근대 산업혁명 과정에서 공유재의 사유화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는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과, 1970~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고질적인 ‘유럽 동맥 경화증(Euroclerosis)’에 시달리며 재정 위기와 지역 공공서비스의 중단사태를 겪으면서 지역공동체로의 자산 이전과 소유권에 대한 제도 도입²⁴⁾
- 2011년 「지역주권법」에 의해 지역에서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은 비록 소유주라 할지라도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다는 강력한 규제를 제도화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역사와 가치를 가진 중요한 공동체 자산이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 매각되어 파괴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²⁵⁾
- 지역자산 기준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주 용도가 지역사회 사회적 복지와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 제도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자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강행 규정을 신설, 목록에 등록된 자산을 소유주가 매각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방당국에 보고하고, 지방당국은 지역공동체에 바로 공유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²⁶⁾
- 지역에서 가치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이를 팔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지역공동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우선참여권, 지역공동체 근린계획권, 지역공동체 자산개발권, 지역공동체 사용신청권 등 5가지의 권한을 부여하며, 중앙정부에서 투자기금을 마련하고 복권기금을 지원 기금으로 할당²⁷⁾
 - 지역공동체 전문 지원 기관 설립, 지원사업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과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및 법령 제언 등의 연구활동 진행
 - 2021년~2025년 마을공동체 소유권 기금 2,500억 원 규모 지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주도를 끌어내어 장기적으로는 공공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지역자산을 직접적으로 지키고 가꾸어나갈 수 있음

24) 전대욱, 2015, 지역공동체 소유권과 자산화 전략, 지방자치FOCUS 103, 2쪽.

25) 충남연구원, 2016, 영국지역주권법의 사례, 열린충남 77, 74-83쪽.

26) 김건, 2017, 지역자산을 커뮤니티 소유로, 영국의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 건축과 도시공간 26, 70-75쪽.

27)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료실, “영국 마을공동체 자산화 현황과 그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법”, 2023. 7. 10. (<https://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6&boardNo=9351&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68>)

다) 일본

(1) 문화재등록 제도

- 일본은 1996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문화재건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고제와 지도, 조연,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만한 보호조치를 채택함²⁸⁾
- 일본이 영국의 등재 건축물 제도와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은 문화적인 차이와 등록제도 도입의 시간적 차이에 원인이 있는데, 1990년대에는 1940년대와 비교하여 개인의 소유권 주장이 강하였기에 영국과 같은 강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었고 2001년 일본의 문화재등록제도와 유사한 등록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본식 등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여겨짐²⁹⁾
- 제도 시행 당시에는 건조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4년 제도 개정을 통해 건조물 이외의 문화적 경관, 생활 및 생산 관련 공구·용품 등의 제작기술 등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속기술까지 대상에 포함하였음³⁰⁾
- 등록문화재의 등록 절차는 소유자 또는 주민단체가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문화청이 선정할 수 있고 모든 경우에 문화청과 소유자 사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중개하도록 함
-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 등록 후보 대상에 국고 보조사업을 통한 조사와 기타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며,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자문안 작성, 문부과학대신의 문화심의회 자문, 문화심의회 전문조사회 조사 의뢰 등을 거치는 등록 절차를 밟게 됨
- 일본의 문화재등록 제도는 신고제로 운영되어 신고사항만 존재하고 허가 사항은 없으며, 국고 보조를 받더라도 우리나라의 등록유산 제도와 달리 허가로 변경되지 않음
 - 신고규정 : 멸실·훼손 또는 망실·도난 시 10일 이내 신고, 소재 변경 시 소유자가 서면으로 신고, 현상변경 30일 전까지 문화청장관에게 신고, 수출 시 30일 전까지 문화청장관에게 신고
- 보호 및 지원사항으로는 보존·활용에 필요한 수리 등 설계감리비의 1/2 국가가 보조하며, 세제 혜택,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8) 정민섭·박선희, 2006,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향에 관한 연구, 컨벤션 연구 14, 38-39쪽.

29) 윤선자, 2011, 앞의 논문.

30) 문화재청, 2010, 주요국 문화재보호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2010, 5쪽.

(2) 근대화 산업유산 인정 제도³¹⁾

-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지역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던 근대화 산업유산의 가치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화 산업유산 인정 제도를 운영하였음
- 근대화 산업유산 인정 대상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도막부 말기~전전(戰前))에 형성된 산업유산으로 건축물 외에도 획기적인 제조품 및 해당 제조품의 제조에 이용된 설비기기, 이들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 및 관련 복원물이나 모형 등을 포함
- 시민 공모를 통해 일본 전역에 산재하는 근대화 산업유산을 수집하였고, 소유자가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근대화 산업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유산 활용 위원회’를 설치
- 2007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575건을 인정하고 산업사·지역사를 바탕으로 상호 연계하여 ‘근대화 산업유산군 33’을 공표, 2008년에는 ‘근대화 산업유산군(群) 속편 33’을 발표하였는데, 2007년에 지정된 산업유산을 바탕으로 산업 분야와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고, 2년간 총 1,115건의 근대화 산업유산이 인정됨
- 인정된 근대화 산업유산은 근대 산업사, 지역사에 관계되는 근대화 산업유산을 빠짐 없이 취합하여 정리하거나 문화적인 우열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모된 근대화 산업유산을 중심으로 이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임
- 근대화 산업유산은 법제화된 제도는 아니며, 현상변경에 대한 제한사항이나 공공지원은 없으나, 근대화 산업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활용 사업 지원방안 도출, 보존·활용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음



일본 근대화 산업유산 33 인증 표식

31) 서울연구원 해외출장노트,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조사”, 2014.12.1.
(<https://www.si.re.kr/node/53264>)

나. 국내 지역유산 제도 문제점 및 대안 도출

1) 타·시도 지역유산 갈등 사례

가) 서울 체부동교회

- 서울 서촌 체부동교회는 프랑스와 영국의 근대건축 기법을 발견할 수 있는 희소한 건물로, 일대의 랜드마크로 평가받고 있었으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운영이 어려워짐
- 일대가 관광지화되면서 외국 자본가에게 민간 매각 위기에 놓이게 되자, 교회 내부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배당을 보존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교회 유지가 어려우므로 민간에게 매각하고 이전하자는 의견이 대립
- 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청에서 민간에서 제시한 매입가보다 낮은 공공감정가에 매입하여 예배당 보존을 요청하였으나, 시 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됨³²⁾
- 교회 공공매입 제안 2년 만인 2015년 서울특별시 공공매입 완료, 건축자산 제도를 적용한 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2017년 선정,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시민에게 개방하여 활용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협약 결과
소유자	교회	1931년 건립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배당 보존	공공감정가 서울시 매입 협의
		교회 유지가 어려우므로 시세대로 매각하고 이전	
사업자	민간 (외국인)	예배당 매입(50억) 제시	
행정관청	서울시	시세 절반 수준의 공공감정가(26억) 제시 이후 매입 결정 지연	우수건축자산 선정, 문화예술공간으로 개방

서울 체부동교회 갈등 개요



서울 체부동교회 전경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활용

32) 중앙일보, “서촌 체부동교회의 눈물”, 2015.2.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165149>)

나) 목포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 일본 전통 사찰의 전형적인 양식인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의 조성연대는 193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해방 후 정광사라는 한국 불교의 사찰로 운영되다가 1957년부터 목포중앙교회로 운영이 변경됨
-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이 위치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인회에서는 광장·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식 잔재인 종교시설 철거를 요구함
- 시민단체에서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가치가 있는 근대유산을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고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은 보존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 소유자 교회 측에서는 건축물 노후화, 가치가 없어 시청이 매입하여 철거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목포시청은 주차공간 부족, 소유자 의견 반영, 건축물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여 주차타워 계획안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사회 여론이 높아지자 철거 계획 취소
- 이후 2009년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고, 목포 근대문화역사거리가 전국 최초로 공간 단위 국가등록유산이 되면서 근대유산이 문화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고,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은 오거리문화센터로 활용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협의 결과
소유자	교회	노후화되고 가치가 없어 시가 매입하여 철거	시 매입
지역주민	상인 등	일본식 종교시설 존치 반대, 주차장 부지 확보 요청	주차장 조성
시민단체	시민대책위원회	대체 부지 매입하여 건물 보존 및 문화예술공간 활용	건축물 보존
행정관청	목포시	주차장 면수 부족(30면), 가치가 없는 건축물로 철거	철거 계획 취소
중앙부처	국가유산청 (문화재청)	국가등록유산 예고('04), 재등록 예고('07)	국가등록유산 등록

목포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갈등 개요



목포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전경



오거리문화센터 리모델링 활용

다) 광주 구 전라남도청 별관

- 구 전남도청을 철거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었고, 시민단체에서 건물 원형 유지가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방송 공개토론회 등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게 됨
- 2009년 별관 건물 일부분을 보존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부분 철거하여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용
- 2016년 헬기 사격 흔적으로 원형 보존 논의가 재개되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형 보존사업 협의 추진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비고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 도청 포함 항쟁 관련 건물 원형 보존	2009
	오월어머니회 등	복원사업에 대한 정부 관심 촉구, 원형 복원 운동 재개	2016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당초 설계지침대로 사업 추진	2009
		이후 일부분 보존하는 설계안 합의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 설립, 복원사업 추진	2016

광주 구 전라남도청 갈등 개요



광주 구 전라남도청 부분 철거 후 전경

라) 청주 청주시청

- 청주시 시청사를 두고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주시청 본관 존치를 결정하였으나, 이후 청주시청의 구 청사 철거를 놓고 시민단체와 청주시청 간 갈등 발발
- 청주시청 신 청사 건립 과정에서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구 청사를 보존하는 최종설계안을 선정하였으나,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되면서 이전의 단체장 결정이 번복되고 시청 구 청사 보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됨
- 국가유산청의 존치 권고 및 공론화 절차 이행 요구에 따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기록화 및 1층 난간 등 일부 구조체를 이전하여 보존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구 청사는 보존 부분을 제외하고 철거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는 시청의 행정을 비판하고 있음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비고
행정관청 (소유자)	청주시청(민선7기)	시청 존치를 전제로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2018
	청주시청(민선8기)	안전등급 미흡, 유지관리비 과다, 왜색 논란 등 철거	2022
시민단체	청주시청보존협의회	국가등록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로 보존 주장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정밀안전 D등급, 유지관리비, 일본식 양식으로 철거	
중앙부처	국가유산청(문화재청)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로 존치 권고, 시 철거 결정에 공론화 절차 이행 요구	

청주 청주시청 구 청사 갈등 개요



청주시청 구 청사 전경



청주시청 구 청사 철거 현황

2)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갈등 사례

가) 중구 구 인천세관 창고

- 수인선 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인선 출구 부지 내 위치한 구 인천세관 창고군의 철거 문제가 대두됨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 인천세관 창고건물의 보존 여론이 확산되었고, 민·관 협의를 통해 해체 후 이전 복원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2012년 규모를 축소하여 별도 부지에 이전 복원하게 됨
- 2013년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고, 수인선 신포역 출입구 디자인에 구 인천세관 건축물의 형태를 반영하는 등 옛 장소성을 지키기 위한 주요 합의가 이루어짐
- 구 인천세관 창고건물의 이전 위치는 관세청 소유의 부지로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개방 요청에 2021년 인천광역시와 관세청의 협의로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됨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협약 결과
소유자	관세청	복원한 세관창고 내부 미개방, 별도 활용 없음	공원 조성 지원 관세청 부지 민간개방
사업자	철도시설공단	시간적·예산 여건으로 수인선 기존 노선 유지	역 출입구 디자인 반영
시민단체		세관 창고 보존을 위한 노선 변경/ 개방 요구	
행정관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원형 보존 요구에 이전 복원 결정 이후 개방 요구에 관세청 협의 추진, 공원 조성	이전 복원 결정, 역사공원 조성

구 인천세관 창고 갈등 개요



구 인천세관 벽체 이전 과정



인천세관 역사공원 조성(2021년)

나) 동구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일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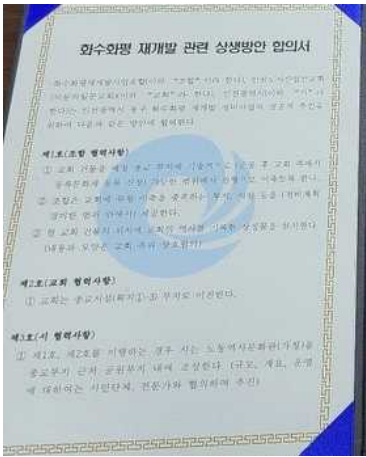
- 동구에 위치한 일꾼교회는 1970년대 동일방직 인분투척사건 등으로 잘 알려진 여성 노동운동 근대사 산실로, 2021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주최·주관하는 제19회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노동 선교의 요람, 인천 민주화 운동의 사적지 인천도시산업선교회’로 대상을 수상하며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음
- 공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낙후된 주거환경 재생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더불어 화수화평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개발 부지 내 위치한 따른 일꾼교회는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광역시, 재개발조합, 교회가 참여한 이해관계자 조정회의를 6차례 개최함
- 이후 인천광역시가 중재하는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교회 건물을 재개발구역 내 종교부지로 이전하고 현재 교회 건물의 위치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에 이르게 됨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협의 결과
소유자	일꾼교회	60년 역사의 근대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존치	교회 이전 합의. 원 위치 상징물 설치
시민단체	범시민대책위		
사업자	재개발조합 (지역주민)	화수화평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한 철거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갈등 개요



화수화평재개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상생방안 합의서

다. 시사점 분석 및 지역유산 제도 고려사항

1) 국내·외 지역유산 제도 관련 시사점 분석

- 국내에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제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업 등 전통적인 유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적 자원 또는 자산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대건조물, 근대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등 자치조례를 통해 행정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협의 절차와 과정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국외에서는 제도 밖의 유산을 면 단위의 역사문화환경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을 제시하고, 주민참여의 제도화, 다양한 지원 체계, 전담부서 개설 등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국외의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국가들은 비지정유산을 지정·등록 유산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자원으로 고려한다는 점과 제도 바깥의 민간 차원에서 일반 시민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및 행정 지원, 시민참여 부문에서 크게 대비됨
- 세계적으로 ‘유산’의 범위가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대상을 포함하여 유·무형의 것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공공과 민간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닌 양측에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지정·등록유산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 고려사항

- 지역유산 제도와 관련하여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유산의 보존과 철거에 관한 갈등 형성 과정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의한 지역유산 훼손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역유산의 보호 여론이 형성됨
 - 이해관계자 : 공공과 민간(행정관청과 시민단체), 민간과 민간(소유자와 시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간)의 대립
 - 갈등 내용 : 1차적으로 개발사업과 훼손 및 멸실, 2차적으로 보존 조치 이후 활용 여부
-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소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는 주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유산의 보존에 동의하며, 행정관청에서는 공공매입을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소유자가 거부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해관계자 설득 과정을 거쳐 지역유산의 보존과 도시재생 차원의 기반시설 정비와 개발이 공존하게 됨
- 반면, 지역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 보존과 개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지역사회가 분열하게 되고, 고발부터 농성까지 물리적 충돌로 격화되는 양상
- 갈등이 심화하는 주요 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중재자 또는 결정권자 역할에 놓인 행정관청의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단체장의 교체로 인한 정책 기조의 변화 등 주로 행정관청의 역할이 지역유산의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렇듯 공공 행정에서 주도하는 지역유산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의 역할은 지역유산을 둘러싼 갈등 조정을 중재하고 일관된 정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간과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지역유산의 보호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연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인천형 지역유산 개념 정립과 기본원칙

- 가. 인천형 지역유산 개념과 기본원칙, 차별성
- 나. 인천형 지역유산의 관리방향, 보존, 재현 및 기록화 기준 및 방법
- 다. 인천형 지역유산의 유형화 방안

4. 인천형 지역유산 개념 정립과 기본원칙

가. 인천형 지역유산 개념과 기본원칙, 차별성

1) 근대문화유산의 개념

- ‘유산’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예술활동 등을 통해 생성된 모든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함
- 특히 개화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 등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근·현대 시기의 문화적 소산을 ‘근대문화유산’이라 통칭함³³⁾
- 근대문화유산은 전통적 유산과는 달리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그 양식과 기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근대문화유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됨
- 조성시기가 현재에 가까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나, 전통적인 개념의 국가유산보다는 보존가치가 다소 낮게 인식되고 있음
-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은 법률·행정 용어로 재편되면서 인천의 근대문화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용어와 개념 정의가 필요함

2) 근대시기 비지정유산의 보존 및 활용 필요성

-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보다 체계적인 국가유산의 관리를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정하게 되는 국가 정책 대전환을 맞이하게 됨
- 「국가유산기본법」을 필두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에 의한 지정·등록유산의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보호 대상은 주로 우리나라 근대사 이전의 전통적인 문화유산 위주로 치우쳐져 있음
- 인천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광역대도시는 급속한 현대화로 근·현대시기 형성된 유산의 멸실과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대시기 역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과도기적 시기이자 근대문화가 도입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유산’은 격변의 근대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

33) 문화재청, 2006,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7쪽.

- 지역의 근대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유산’을 지켜나가는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임

3) 인천형 지역유산의 개념과 정의

가) 인천형 지역유산 개념

- 1883년 개항으로 인천은 근대 문물이 물밀듯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는데, 제물포 연안에 외국인 거주지인 각국 조계지가 형성되고, 외국 양식의 건축물이 들어서며 근대화로 인해 도시공간 구조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짐
- 따라서 인천 지역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이루어진 개항을 기준으로 전근대 시기의 전통적 국가유산과 차별화된 ‘인천형 지역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함
- 근대시기 인천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겨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유·무형의 것
- 도시의 변화를 가장 크게 반영하는 건축물, 토목구조물 등의 건조물, 지역적 상황과 시민의 특성이 결합하여 대표성을 가지게 된 상품이나 음식을 만드는 기술, 문화적 활동을 통해 산출된 예술품이나 생활을 보여주는 공산품을 포함하는 물산, 사람들의 활동 흔적이 쌓인 공간적 단위로서 시장, 산업단지, 공원, 마을 등의 장소까지 해당
-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의 행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준 의식이나 언어와 같이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민속놀이나 축제 등과 인천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노래 등의 이야기나 노래가 포함된 행위, 인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건까지 포함됨

나) 인천형 지역유산 정의

- 인천광역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경관적·예술적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
- 인천광역시를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기억하고, 인천시민의 애환, 생활과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는 것

4) 인천형 지역유산의 범위와 기본원칙

가) 시·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의 지역유산
- 시간적 범위 : 1883년 인천 개항을 기준으로 형성된 지 30년 이상의 지역유산

나) 제도적 범위

- 국가지정·등록유산 또는 인천광역시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아 현행 「국가유산기본법」 제도 아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지정유산을 대상으로 함
- 기존 ‘문화재’ 개념의 중점보호주의에서 탈피하여 지역유산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대상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대장주의 제도 지향
- 그중에서도 직접적이고 활용사업을 위해 다수의 인천시민이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유산을 인천광역시 행정관청의 정량적 분석과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위원회 심의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선정

다) 인천 지역유산 보존 활용 기본원칙

■ 지역유산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 지역유산은 특정한 형태의 유형적 대상에 인천의 근·현대시기를 함께한 시민들이 공유하는 기억과 감정 등 무형적 가치가 복합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유·무형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관리의 필요성을 다음 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물리적 훼손 및 멸실을 예방하고 원형을 남겨, 주민들이 공유하는 무형의 가치가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유산의 목적과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유지

■ 시민 생활 속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지역유산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동결보존이 아닌 지역사회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유산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이후 2024년 9월 시행 예정인 「근현대문화유산법」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보호 체계, 국가유산 활용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경직된 규제 중심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을 원칙으로 해당 지역유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보존 의식 고취와 민간 주도적 지원 등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체계 구축

■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유산 보호

- 시민사회의 동의와 참여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일반 시민들이 기억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유산의 사회 기여가 가능함
- 물리적 형상만을 중시하는 기존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시민들이 지역유산 가치에 주목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

라)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의 의의

■ 문화재 중점보호주의에서 대장주의 전환에 따른 포괄적 보호 방식 본격화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는 인천 지역유산의 합리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프로세스
- 인천 근대 개항시기를 기점으로 유·무형의 모든 유산을 포괄적 목록 및 관리 추진

■ 규제 없이 보호할 수 있는 수단 강구

- 인천 지역유산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선정 불가, 사유재산권의 침해 배제

■ 기존 건축자산, 미래유산 등 전문가 위원회 심의·의결 제도의 한계 보완

- 활용을 고려한 계량적 지표 도입 및 추상적 가치의 계량화와 단계별 조사 도입
- 보존과 개발에 따른 갈등관리 지원방안으로 중립적 공론화 과정 마련

■ 관 중심의 관리 및 활용 최소화

- 기존 규제 정책과 달리 시민참여로 지역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직접적 참여
- 지역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일종의 시민운동·활동, 미래지향적인 제도로써 의의를 지님

나. 인천형 지역유산의 관리방향, 보존, 재현 및 기록화 기준 및 방법

1) 인천형 지역유산의 관리방향

가) 지역유산의 유·무형 가치 유지 및 전승

-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유형적 가치와 더불어 시민들이 공유하는 기억과 감정 등의 무형적 가치를 모두 포함
- 지역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고 전승하도록 해야 함
- 훼손을 예방하고 원형을 보존하며,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가 지속하도록 지역유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

나)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 원형 보존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발전
- 적극적인 지역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로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되는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방안 도출

다)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유산의 보호

- 일반 시민들이 지역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유산의 사회 기여 가능
- 국가유산청의 포괄적인 유산 보호 정책을 반영하여 시민 친화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방안 마련

라) 객관적 평가와 환류 과정, 갈등관리 과정을 통한 차별화

- 비지정유산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보존과 개발의 첨예한 갈등 사이에 놓여 있음
- 의사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활용 지표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 발생하는 갈등의 심화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 절차 도입

2) 보존, 재현 및 기록화 기준 및 방법

가) 활용 지표를 활용한 기준 설정

(1) 가치 기반의 지역유산 활용

- 활용이란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산이 지닌 가치나 기능을 살려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
- 지역유산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사회적 가치나 기능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당 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 속성을 지표화하여 반영하는 일련의 방법론 도출이 필요함

(2) 활용 지표 평가의 정량화

- 인천 지역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인천시민이 공유하는 기억을 지닌 유산이지만, 보존·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 및 수단으로 활용 지표를 정량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지역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주요 갈등이 되는 사항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가치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보다 구체화·객관화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요구됨

(3) 기대효과

- 유산 가치와 활용 가치로 대별되는 활용 지표를 정량화하여 보존 및 관리방향, 활용 방안 도출을 위한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
- 인천 지역유산의 활용 우선순위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가치 기반의 실효성 있는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의의

나) 인천형 지역유산 활용 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1) 관련 조사·연구

- 학계의 근대유산의 가치와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은 가치 판단을 위한 지표 도출 또는 특정 근대유산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근대유산을 포함하여 유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주로 유산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기존 연구에서 근대유산 가치 판단을 위한 지표는 크게 유산 가치와 활용 가치로 대별되며, 유산의 가치 지표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유산(문화재) 개념에서부터 다루어진 예술적, 역사적, 건축적, 미학적, 희귀성, 경관적 가치 등이 있음
- 활용과 관련된 가치는 특히 근대유산에서 두드러지는 가치이며, 사회문화적, 활용적, 경제적, 교육적, 도시맥락적 가치 등이 있음

연구자·기관/ 연구명	가치 판단 지표											
	예술적	역사적	건축적	사회 문화적	미학적	희귀성	지역성	활용적	경제적	교육적	도시 맥락적	경관적
홍순연·김기수(2008)/ 부산지역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사례에 나타나는 특성에 관한 고찰	●	●	●				●					●
김성조·김영태(2012)/ 근대건축 문화유산의 보전가치 기준에 관한 연구		●	●	●					●		●	
박재민·성종상(2013)/ 근대문화유산의 평가 기준과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			●	●			●	●	●		
최장락(2013)/ 근대 산업유산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		●		●	●	●			●	●
경기연구원(2019)/ 지자체의 근대건조물 조사 및 활용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	●	●		●	●	●	●				●

근대유산의 가치 판단 지표 항목

(출처: 남지현·조희은, 2019, 지자체의 근대건조물 조사 및 활용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3), 5-24쪽.)

(2) 건축자산 기초조사 가치 판단 기준

- 건축자산 기초조사에서 조사하는 건축자산의 가치 기준은 우수건축자산의 가치인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 4가지 가치 기준을 참고 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가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축자산 기초조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치 기준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각 기준간 구분이 중첩될 여지가 매우 많아 보다 세부적인 지표를 제시하거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건축자산 제도의 근본이 되는 가치 기준을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³⁴⁾
- 또한 근대건축물은 예비문화재로서 ‘보존 가치’와 건축자산으로서 ‘활용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어느 한쪽의 가치가 중요시되면 다른 한쪽의 가치의 중요성은 비교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보존 가치’는 현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활용 가치’는 현재보다는 미래 시점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며,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하여 새로운 평가 방법론이 요구됨
- 2019년 수행한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기준 외에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과 인천시의 건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징성과 원형성을 추가하여 총 7가지 가치 기준을 도출
- 전문가 설문조사로 가치 기준의 우선순위를 역사성, 경관성, 예술성 가치 순으로 도출하였고, 정량적 점수 합계가 동일한 경우 역사성이 높은 것을 우선 선정하였음

구분	가치기준	배점기준		
		2점	1점	0점
국토부 가치기준	역사성	50년 이상	30년 이상	해당사항 없음
	경관성	매우 우수한 경관	우수한 경관	
	예술성	전국 단위공모전 수상작	인천 지역공모전 수상작	
	인지성	전국/인천 단위 사회문화적 가치 정도	지역단위사회문화적 가치 정도	
	희소성	전국/인천 단위희소성보유	지역단위 희소성 보유	
인천시 가치기준	상징성	전국/인천 단위 최초/최고 건축물	지역단위 최초/최고 건축물	
	원형성	원형 유지	부분 유지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가치 평가 기준

(출처: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계획 수립)

34) 건축공간연구원, 2017,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4쪽.

가치 기준		평가 내용 및 세부지표	
역사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사건/인물/정책 관련성 판단 세부지표: 역사적 사건, 인물, 정책, 30년 이상 건축자산, 50년 이상 건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은 국토교통부 지정 건축자산 후보군 최소 기준, 50년은 지정문화재로 검토하는 최소연도 역사적 사건: 한일합방, 3.1운동,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등 인물: 정치인, 건축가, 예술인, 문화가 등 정책: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인천 경제자유구역개발, 국가산단개발 등
경관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산 형태, 구조, 재료, 디자인, 색채 등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주변지역과의 조화성, 미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 세부지표: 건축자산구조/재료, 건축자산 디자인/파사드, 오래된 도시조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 구조, 재료, 디자인, 색채 등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거나,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자산 형태, 구조, 재료, 디자인, 색채 등이 특색 있는 장소성을 만들고 있는 경우
예술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산의 미적/기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세부지표: 건축자산형태/디자인, 건축자산 구조/시공기술, 전국단위 공모전, 지역단위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 구조, 디자인, 시공기술의 우수성 판단 기준은 건축자산의 미적 가치,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함 수상작품: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지역/전국단위 공모전에서 입선, 장려, 가작을 수상한 작품과 최우수, 대상, 우수상 수상작을 구분하여 평가
사회문화적 가치	인 지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산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세부지표: 지역단위 언론매체, 전국단위 언론매체, 지역단위 장소성, 전국단위 장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매체 노출 빈도를 기준으로 3단계(없음, 지역단위 인지도, 전국단위 인지도)로 판단 건축자산 가치와 특성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사설, 기사, 소개 글 등 포함, 일상과 개인사 등의 글은 제외 인지도 없음: 신문, 블로그 등 언론매체 연 2회 이하 소개 군·구 단위: 언론매체에 연 3회 이상~50회 이하 소개된 것 전국(인천) 단위: 언론매체에 연 51회 이상 소개된 것
	회 소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산의 양식, 용도, 형태, 구조, 시공법, 재료 등이 드물고 적은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역(군·구)단위 회소성과 전국(인천)단위 회소성으로 구분하여 평가 세부지표: 건축자산 양식/형태, 건축자산 구조/재료, 시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 한옥, 일본식, 중국식, 근대, 현대 등 용도: 관사, 학교, 종교, 창고, 기념관, 향만 등 형태: 초고층, 비정형 등 구조: 벽돌, RC, 철골, 트러스, 캔틸레버 등 시공법: 물막이공법, 프리스트레싱공법 등 재료: 나무, 흙, 석재, 벽돌, 강철, 콘크리트, 유리 등
상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산의 상징성을 의미하며, 최초, 최고, '최대, 최장 등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세부지표: 지역(군·구) 단위, 전국(인천)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인천)단위 상징성: 인천 갑문, 인천대교처럼 광역단위 최초, 최고, 최대, 최장 등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지역(군·구)단위 상징성: 갯벌타워, 수봉공원처럼 지역단위 최초, 최고, 최대, 최장 등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원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산의 원형(형태, 기능, 구조, 용도,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세부지표: 원형상실(30% 이하), 원형 부분유지(50%), 원형유지/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형 상실: 신축, 철거,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을 통해 원형이 상실된 경우 원형 부분 유지: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을 통해 원형 일부가 유지/보전된 경우 원형 유지: 개축, 재축, 대수선, 복원을 통해 원형이 유지/보전된 경우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가치 평가 세부 기준

(출처: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계획)

(3)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잠재적 가치 평가³⁵⁾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의 잠재적 가치 평가는 전수조사한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화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 정책의 중점 보호주의에서 대장주의로의 전환과 향후 전문성 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심화조사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음
- 잠재적 가치가 상당한 경우 혹은 조사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일유형 일반 조사표를 작성한 후 형상정보, 증·개축, 일괄 및 부속시설, 관련 연구, 추가정보, 가치 평가의견 등을 추가 기입
- 종합적 가치 평가는 주요기준인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사회문화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참조기준인 희소성, 보존상태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심화조사대상을 선정
- 주요기준과 종합적 가치평가의 점수 사이에 일정한 정량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요기준 점수가 높더라도 참조기준이 낮고, 주요기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종합적 가치평가는 주요기준만을 고려한 점수보다 낮게 책정하는 점수 산정 방식을 도입함
- 주요기준 중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은 기존 국가유산의 가치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해당 역사문화자원의 해당 수준을 국가유산과 비교 판단하여 결정하기 위함
- 사회문화성은 국가지정·등록유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역사문화자원(비지정유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며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이 통상 국가지정·등록유산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지역 특색, 문화경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사회문화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므로 현재 상태뿐 아니라 향후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종합	주요기준				참조기준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사회문화성	희소성	보존상태
5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가치 평가 기준

35) 문화재청, 2022,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요약·정리.

구분		점수(5점)	기준
주요 기준	역사성	5, 4점	유적건조물, 인물, 사건이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3점	유적건조물, 인물, 사건이 지역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2, 1점	유적건조물, 인물, 사건이 지역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가치가 미흡한 경우
	예술성	5, 4점	건립 당시의 예술적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경우
		3점	건립 당시 예술적 표현이 변형된 경우
		2, 1점	건립 당시의 예술적 내용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학술성	5, 4점	시대적 배경을 잘 표현하고 있고 당시의 기술이 잘 남아있는 경우
		3점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기술을 표현하고 있으나 변형이 된 경우
		2, 1점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기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회문화성	5, 4점	고유한 문화경관을 형성하여 집단기억을 되살려 주고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
		3점	고유한 문화경관으로서는 미흡하나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2, 1점	고유한 문화경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
참조 기준	희소성	5, 4점	동종의 문화재 중 연대가 오래되거나, 전래되는 문화재가 유일하거나 적은 경우 혹은 동종 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우
		3점	지역 동종의 문화재 중 연대가 오래되거나, 지역에서 전래되는 문화재가 유일하거나 적은 경우
		2, 1점	지역 동종문화재 중 연대, 전래수량에 있어서 특별하지 않은 경우
	보존 상태	5점	제작 당시 원형이 변형, 훼손되지 않고 보존상태가 우수하며, 사용 용도와 환경적 구성이 변화하지 않은 경우
		4점	제작 당시 원형이 변형, 훼손되지 않아 보존상태가 유구하나, 사용 용도가 변화되었거나 환경적 구성이 원형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된 경우
		3점	제작 당시의 원형이 변형, 훼손되었으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2, 1점	제작 당시의 원형이 크게 변형, 훼손된 경우
종합		5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시·도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향토문화재로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지정대상 건조물은 아니지만 보존의 가치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지정대상은 아니지만 건조물 중에 장기적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1점	장기적 유지 보존의 가능성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가치 평가 기준

다)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의 활용 지표 및 기준 적용 방안

(1) 지역유산의 활용을 고려한 지표 마련

- 학계와 행정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산 가치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유산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크게 전통적인 유산 보존 가치와 활용을 고려한 가치로 대별됨
- 또한 보존과 개발, 활용의 논의에서 가치 판단을 위해 유산 관리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등의 비지정유산과 관련한 유사 연구에서 정성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정량 평가를 시도한 바 있음
- 기존 연구의 가치 평가는 외부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어 유산을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참여적 주체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다양한 연구에서 비지정유산의 가치에 대한 여러 지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 여전히 전통적 개념의 국가유산 가치 기준이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비지정유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비교적 현재와 가까운 시기에 형성되어 예술성, 학술성 등 전통적인 유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근대시기의 비지정유산은 사회문화적 가치에 비중을 둔 관점이 필요하며, 현재 상태 뿐 아니라 향후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함
- 또한,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의 근본적 목적은 비지정유산을 가치 순으로 줄 세우기 위한 서열화가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갈등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가치 평가’ 혹은 ‘가치 판단’ 등의 용어 표현을 지양하고 ‘활용 지표’와 같은 활용을 고려한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함

지표		세부지표 및 내용 ³⁶⁾
역사성		최초 설립일 기준
유산 지표	예술성	심미성: 미학적으로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진 것
		시대성: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
		희소성: 수가 적고 드물어 희소가치가 있는 것
		원형성: 원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우수성: 저명한 설계자, 기술자 등과 관련되거나 시상제도를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또는 기존 국가유산 지정·등록 추진 대상
	경관성	진정성: 주변환경까지 포함하여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상징성: 주요한 도시계획 및 가로, 공원 등 타 지역과 구별되는 랜드마크로 지역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관
		독특성: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결합되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 경우
		조화성: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진 경관
		집합성: 선·면 단위 공간을 점유하며 특정 시설이 밀집한 장소와 유사한 유형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설
	사회성	지역성: 인천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
		장소성: 기억, 추억 등 장소에 대해 공통된 기억과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공동체: 주민 간 교류 활성화 기여, 지역 커뮤니티 거점이 되는 것
		경제성: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교육성: 과거의 해석을 통해 얻은 지식을 미래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보존관리 현황		보존상태의 양호성, 관리 및 수리를 요하는 정도
연계성		반경 500m 내 지역유산 건수
접근성		공공 교통수단 이용 시 대상지까지 도보 거리와 시간
활용가능성		대상의 개방 및 활용 여부
시민인지도		빅데이터 활용, 최근 1년간 대형 포털사이트 키워드 연간 검색량 반영

인천형 지역유산 활용 지표

36) 각 세부지표의 정의는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2019), 문화재청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022), English Heritage 등 선행연구 조사·분석을 통해 반영함

(2) 정량적 기준 적용 방안

- 기존 조사연구에서 이루어진 지역유산의 가치 평가, 판단 등의 배점 기준은 각 지표에 정성적 점수를 부여하는 배점 방식으로, 조사자의 주관에 의존성이 큼
- 이에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의 활용 지표의 배점 기준은 정량적 점수화가 용이한 보존관리 현황, 연계성, 접근성 등의 지표를 제외한 예술성, 경관성, 사회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지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 합계 점수를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함
- 각 지표는 우월을 가리는 목적이 아닌 관리·활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절대불변적 기준이 아니라 향후 조정 가능한 유연한 체계로 활용하여 산재한 인천의 지역유산 관리·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사결정의 지원 도구로써 적용하도록 함

지표	기준	배점					적용 대상
		5	4	3	2	1	
역사성	최초 설립일 기준, 대상 유산 역사성	개항 (1883~1909)	일제강점기 (1910~1930)	일제강점기 및 광복 전후 (1931~1950)	한국전쟁, 산업발전기 (1951~1970)	산업 발전 시기 (1971~1993)	부동산
예술성	각 세부지표 충족 여부의 합계	5개 충족	4개 충족	3개 충족	2개 충족	1개 충족	부동산/동산·무형
경관성							부동산
사회성							부동산/동산·무형
보존관리 현황	활용을 고려한 보존·관리 여부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태	간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태	경미한 수리,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긴급하거나 상당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특성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 심한 상태	부동산
연계성	반경 500m 내 지역유산 수	39~52건	27~38건	15~26건	6~14건	1~5건	부동산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 거리와 시간	100m 이내, 3분	500m 이내, 8분	1km 이내, 15분	2km 이내, 30분	4km 이내, 1시간	부동산
활용 가능성	개방 및 활용 여부	전체 상시 개방	개방	특정 시기(주말) 개방	특정 프로그램 운영 시에만 개방	외부 관람만 가능	부동산
시민 인지도	빅데이터 활용, 2022년 키워드 검색량 반영	5만 건 이상	2만 건 이상	1만 건 이상	5천 건 이상	5천 건 미만	부동산/동산·무형

인천형 지역유산 활용 지표의 배점 기준

다. 인천형 지역유산의 유형화 방안

- 유산 특성상 하나의 대상에서 다양한 가치와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근·현대 시기의 다원화되고 복잡화되는 시대에 형성된 인천의 지역유산은 유형을 한 가지로 단일화하여 구분하기는 어려움
- 이에 인천 지역유산의 유형을 하나의 분류에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치와 속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중복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제시함

대분류	소분류	내용
역사	개항기	인천 개항 시점인 1883년부터 한일병탄 전까지 관련 깊은 사건, 인물, 장소 등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마을이나 방공호, 항일 및 독립운동 관련 인물이나 기념물 등
	한국전쟁 및 산업화 시기	한국전쟁부터 산업화 시기의 관련 장소, 기념물 등
산업	농업	농업 관련 장소 및 시설(양수장, 저장고 등)
	어업	어업 관련 장소 및 시설(염전, 양식장 등)
	상업	상업 관련 장소 및 시설(은행, 상점, 판매소 등)
	공업	인천 성장에 기여한 공업시설, 업체(기업, 공장, 단지 등)
	교통, 통신	산업 발전과 연관된 교통, 통신시설(전차, 철도, 역사 등)
	식료, 특산품	인천 특성이 반영된 향토 식품, 특산품 등
도시	토목	도시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석축, 터널 등의 토목구조물
	마을 및 가로경관	도시의 역사 및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마을 및 주변 구조물
	공원	도심의 휴게공간 및 만남의 장이 되었던 공원 및 집합장소 등
	항만	개항지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방파제, 등대, 호안, 기타 시설물 등
생활 문화	의식주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양복점, 식품, 가옥 등
	시장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재래, 수산 시장 등
	의료	지역 대표 의료시설 및 인물 등
	교육	학교 및 교육 관련 공공시설물, 자료 등
문화 예술	음악	지역을 기리고 알리는데 기여한 음악 및 관련 인물
	미술	인천에서 활동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가 혹은 작품
	문학	인천 지역의 생활상, 장소를 기릴 수 있는 작가 및 작품활동
	시설	인문, 문화예술 등을 향유하기 위한 시설물 혹은 장소
	문화축제 등	인천을 대표하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제, 행사 등

인천 지역유산의 유형별 분류 방안

5

인천형 지역유산 후보 선정

- 가.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자산 등 비교분석을 통한
부동산 지역유산 후보 선정, 목록화
- 나. 동산·무형 지역유산 후보 선정, 목록화
- 다. 우선 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활용 방안

5. 인천형 지역유산 후보 선정

가.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자산 등 비교분석을 통한 부동산 지역유산 후보 선정, 목록화

1) 조사 방법 및 기초조사 자료

가) 조사 방법

- 일반적으로 국가지정유산의 시간적 범위는 100년 이상을 연한으로 두며, 국가등록유산의 시간적 범위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것을 대상으로 함
- 인천형 지역유산은 지정·등록 국가유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대 이후 형성된 비지정유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1883년 인천 개항연도를 기준으로 형성된 지 30년이 경과한 것을 후보로 선정
- 본 과업에서 수행한 인천형 지역유산 후보 선정 및 목록화는 인천형 지역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조사로, 절대적인 목록이 아니며 향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함
- 후보 선정 및 목록화는 2019년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자료, 2021년 문화재청에서 수행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문헌자료 등을 반영함
-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206건의 관련 문헌자료,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는 135건의 관련 문헌자료를 취합하고 보완하여 정량평가 및 가치평가를 통해 조사·정리된 자료로써 기존의 조사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건축자산 기초조사대상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1988년 이전 건축물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대상 : 1975년 및 그 이전에 조성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건조물

발행기관(조사연도)	제목	조사대상
문화재청(2019)	건축자산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후보군 819건 • 최종 선정 인천건축자산 492건
인천광역시(2021)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원 2,176건 • 심화조사대상 127건

인천형 부동산 유형 지역유산 예비조사 주요 기초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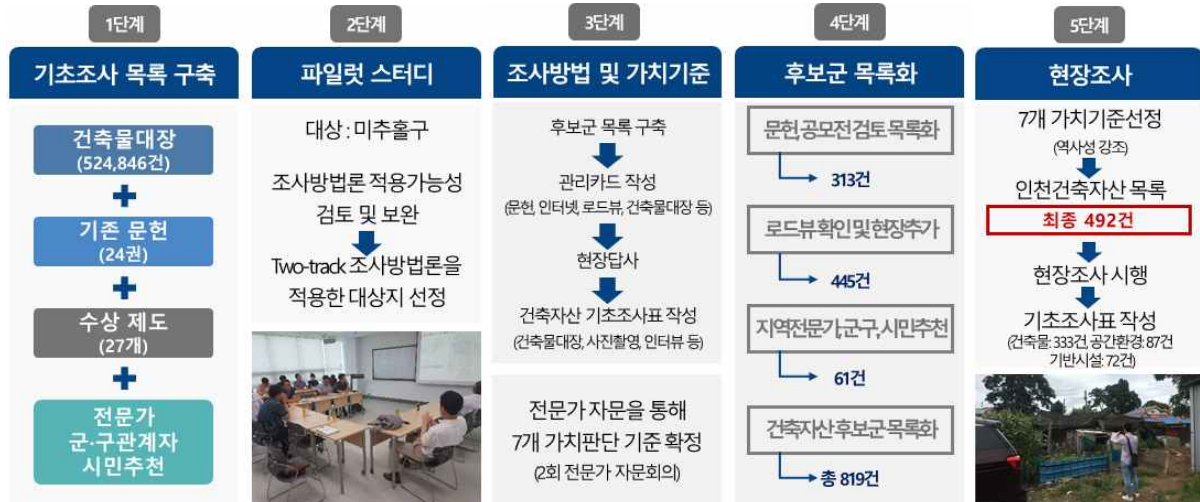
발행기관(조사연도)	제목
국립민속박물관(2018)	• 인천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문화재청(2008)	• 비지정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
문화재청(2014)	• 근현대건축시설 일제조사
문화재청(2022)	•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스페이스빔(2015)	• 골목길 숨은 보물찾기
인천광역시(2019)	• 까치발로 본 인천
인천광역시(2019)	• 인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4)	• 인천남부종합학술조사 • 인천북부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12)	•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14)	• 관영주택과 사택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2008)	• 인천 근대건축의 재발견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2009)	• 건축으로 보는 도시 인천
남지현·장희숙(2014)	• 인천 정미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유산군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인천형 부동산 유형 지역유산 예비조사 추가 문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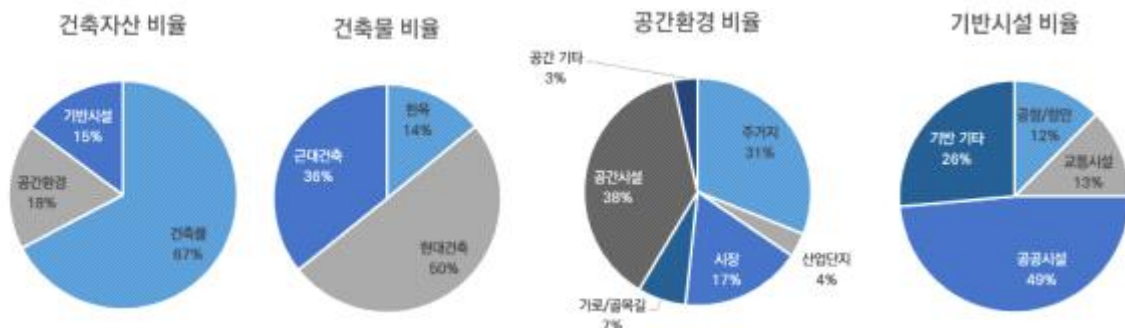
-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화를 실시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에 명시된 법적 기준인 역사성, 경관성, 예술성, 인지성, 희소성 등 5개 기준과 인천 지역 건축적 특성을 고려한 상징성, 원형성 등 2개 기준을 더한 총 7개 기준별로 0~2점으로 가치를 정량평가하였으며, 이후 건축자산 가치 기준을 정량평가 점수와 전문가 의견 등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최종 인천건축자산을 선정하였음
- 인천건축자산은 모두 인천형 부동산 유형 지역유산 후보로 포함하고, 819건의 건축자산 후보군 중 가치판단 점수가 합산 5점 이상으로 높게 산정된 대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함

구분	내용	조사대상
건축자산 후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공모전 수상작 검토, 로드뷰 확인 및 현장 추가, 추천 등의 절차를 통해 목록화 • 국토부 가치기준(역사성, 사회성, 경관성, 예술성)과 인천시 가치기준(희소성, 상징성, 원형성)을 0~2점으로 정량평가 	후보군 819건 (정량평가 5점 이상 115건)
인천건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기준 정량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의견 등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판단하여 최종 선정 	492건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조사대상 목록 작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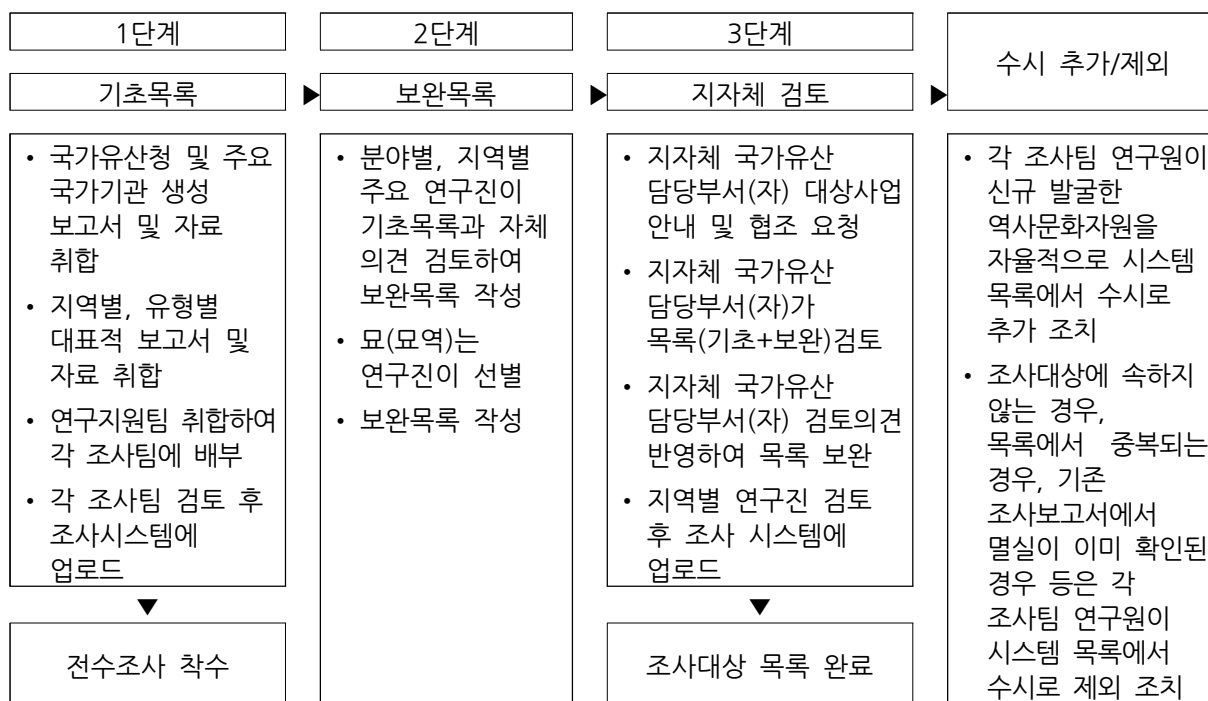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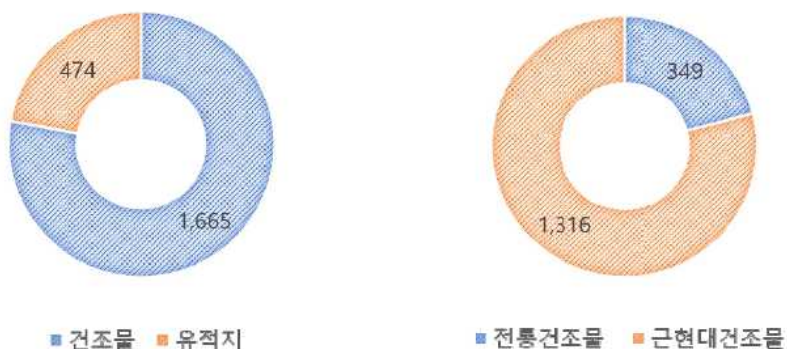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는 역사문화자원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주요기준인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사회문화성을 중점으로 희소성, 보존상태 등 참조기준을 고려한 종합적 가치평가를 통해 잠재적 가치가 상당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심화조사를 실시
- 역사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평가는 기준별 5점으로 정량평가하였으나, 국가유산 정책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대장주의로의 전환과 향후 전문성 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심화조사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공개된 보고서에는 노출되지 않았음
- 이에 인천형 지역유산 후보에는 심화조사가 이루어진 단일심화 역사문화자원, 집합 및 복합 역사문화자원, 역사문화공간 유형을 모두 유형 유산의 후보로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2,049건의 일반 역사문화자원 중 조사자 의견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대상을 추출하여 반영함

구분	내용	조사대상
단일일반 역사문화자원	• 점 단위의 개별 역사문화자원	2,049건
단일심화 역사문화자원	• 단일 역사문화자원 중 잠재적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자원 • 단, 소유주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72건
집합 역사문화자원	• 동일한 유형의 개별 역사문화자원이 집합되어, 면 단위로 분포하는 경우	47건
복합 역사문화자원	•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된 단일 역사문화자원이 면 단위로 분포하는 경우	1건
역사문화공간	• 복합 역사문화자원보다 광의적인 개념 • 여러 유형의 역사문화자원들을 가로, 마을, 지구 등의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경우	7건

인천광역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유형별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조사대상 목록 작성 과정



2) 후보 선정, 목록화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부동산 지역유산 예비조사 결과, 총 187건 목록이 작성되었음
- 지역별로는 강화군 13건, 남동구 8건, 동구 19건, 미추홀구 25건, 부평구 12건, 서구 4건, 연수구 9건, 옹진군 11건, 중구 86건 등으로 중구에 가장 많은 부동산 지역유산이 위치하고 있음
- 조사대상의 명칭은 기존 조사자료에서 기록한 명칭으로 작성하고, 과거 명칭 또는 이칭, 현재 별도의 상호로 이용 중인 경우 상호를 병기함
- 인천 부동산 지역유산이 밀집한 중구, 미추홀구, 동구를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멸실 및 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목록을 보완

※인천 부동산 지역유산 예비조사 목록은 별지로 제출

나. 동산·무형 지역유산 후보 선정, 목록화

1) 기초조사 자료

- 인천광역시 동산·무형 지역유산 예비조사 및 목록화는 인천광역시 관련 기관에서 동산·무형 지역유산을 주제로 발행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실시
- 인천을 배경으로 하거나, 근·현대 시기 인천 지역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무형의 유산, 인천 출신 작가의 작품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발행기관(조사연도)	제목
인천광역시(2005)	인천 역사문화총서 16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인천광역시(2015)	인천 역사문화총서 74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인천광역시(2020)	인천광역시사 11 인천의 민속
인천문화원(2001)	인천의 생활 민속
인천문화재단(2012)	문화의 길 총서 시공간을 출렁이는 목소리
인천문화재단(2014)	문화의 길 총서 은막에 새겨진 삶
인천문화재단(2015)	문화의 길 총서 세월을 이기는 힘
인천광역시부평문화재단(2018)	20세기 인천부평 대중음악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2021)	인천의 향토음식
이희환(2010)	문학으로 인천을 읽다

인천광역시 동산·무형 지역유산 예비조사 대상 문헌자료

2) 후보 선정, 목록화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동산·무형 지역유산 예비조사 결과, 총 40건 목록이 작성되었음
- 동산·무형 지역유산은 주로 문학, 영화, 노래 등의 예술작품과 먹거리 등 인천시민의 추억이 담긴 대상이 대부분이며, 근·현대 시기의 역사적 사건, 예술단체 등이 일부 포함됨
- 조사대상에는 인천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노포도 포함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전, 폐업 등으로 현황 파악이 명확하지 않고, 상업시설은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지역유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동산·무형 지역유산 조사 목록에서 배제하였음

※인천 동산·무형 지역유산 예비조사 목록은 별지로 제출

다. 우선 관리 대상 선정 및 개별 관리·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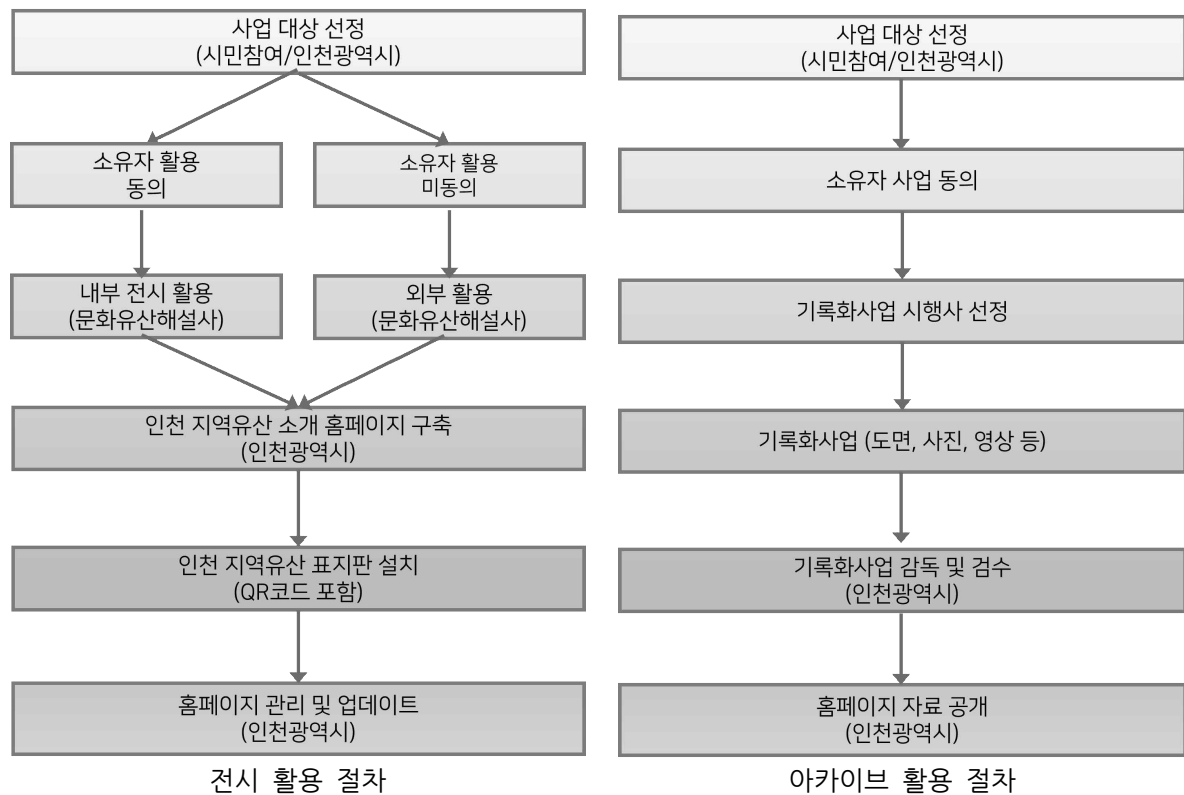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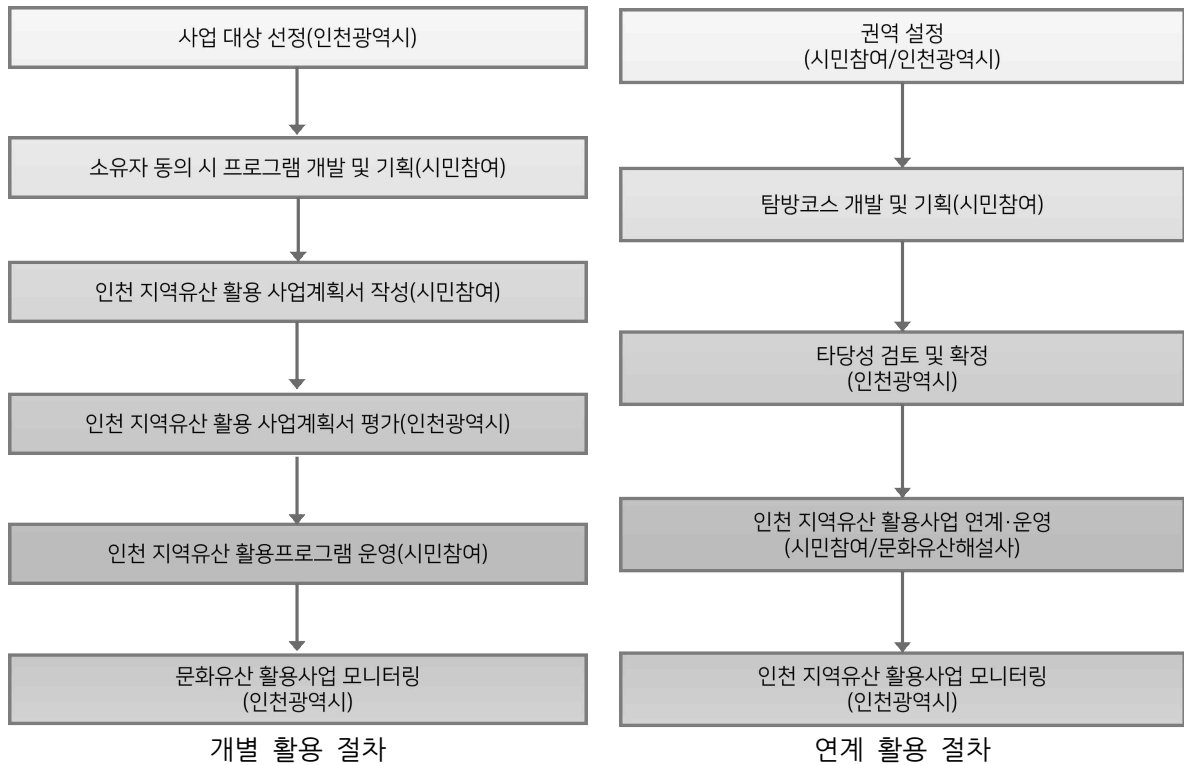
1) 우선 관리 대상 선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부동산 지역유산 예비조사 목록을 바탕으로 활용 지표의 기본 배점 기준을 검토하여 우선 관리 대상을 선정하였음
- 향후 관리 및 활용사업 추진 시에는 활용 지표에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우선 관리 대상을 선별할 수 있음

※인천 지역유산 예비조사 목록에서 선정한 우선 관리 대상은 별지로 제출

2) 관리 및 활용 방안

- 지역유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유산의 가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인 정밀조사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관리 및 활용 방안의 개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활용 지표 기준에 따라 관리 및 활용 유형을 구분하되, 유연한 활용을 위해 각 유형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개별 활용 : 인천광역시에서 개별 가치를 특화한 자체적인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연계 활용 : 개별 활용 가능성이 다소 낮으나 접근성, 연계성이 높은 지역유산으로 권역 단위로 활용
 - 전시 활용 : 예술성이 높아 랜드마크로써 가능성이 크나, 민간 소유로 개방되지 않아 종합적인 활용 가능성이 낮고 인접 유산 수가 적어 연계성이 낮은 것
 - 아카이브 활용 : 유산 가치가 높으나 민간 소유로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아 활용 가능성이 낮은 대상
- 관리 및 활용 사업 추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지역유산의 소유 현황이며, 공공 소유의 지역유산은 관리 및 활용 사업에 관한 의사 결정과 추진 절차가 용이하게 전개될 수 있으나, 민간 소유의 사유재산인 경우 이해관계자의 갈등 관리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소요됨
 - 공공 부문 : 시도 지정·등록유산 및 예비문화유산 검토 / 중앙정부 국가유산 활용 사업 매칭 신청 / 인천광역시 지방비 지원
 - 민간 부문 : 시민참여 및 활동가 지원 / 지역유산 해설사 / 지역유산 활용 사업 위탁운영 / 크라우드 펀딩
- 이후 지역유산의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세부 사업 계획 : 지역유산의 중요성을 유지하거나 드러내는 조치,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안 포함
 - 전문 계획·설계 실행 : 활용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실천 사항을 확정하여 실행,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화방안 실시



인천 지역유산 유형별 관리·활용을 위한 기본 절차

6

인천형 지역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가. 인천형 지역유산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요소

나. 인천형 지역유산 보존 및 관리 방안

6. 인천형 지역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가. 인천형 지역유산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요소

1) 외부적 요소

-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점보호주의 정책에서 지정·등록 여부를 막론하고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 정책 기조의 변화
- 훼손되고 소멸되어 잊혀지는 지역유산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과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이해관계자 또는 생활권 내 지역주민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정주환경 개선 등 보다 경제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갈등 발생
- 지역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적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공공 부문에서 모든 지역유산을 관리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

2) 내부적 요소

- 인천의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국가유산 혹은 비지정유산 등 ‘유산’ 중심적 관점만이 아닌 도시재생과 환경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유산의 가치가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다각적 접근 필요
- 단, 지역유산을 발전이나 개발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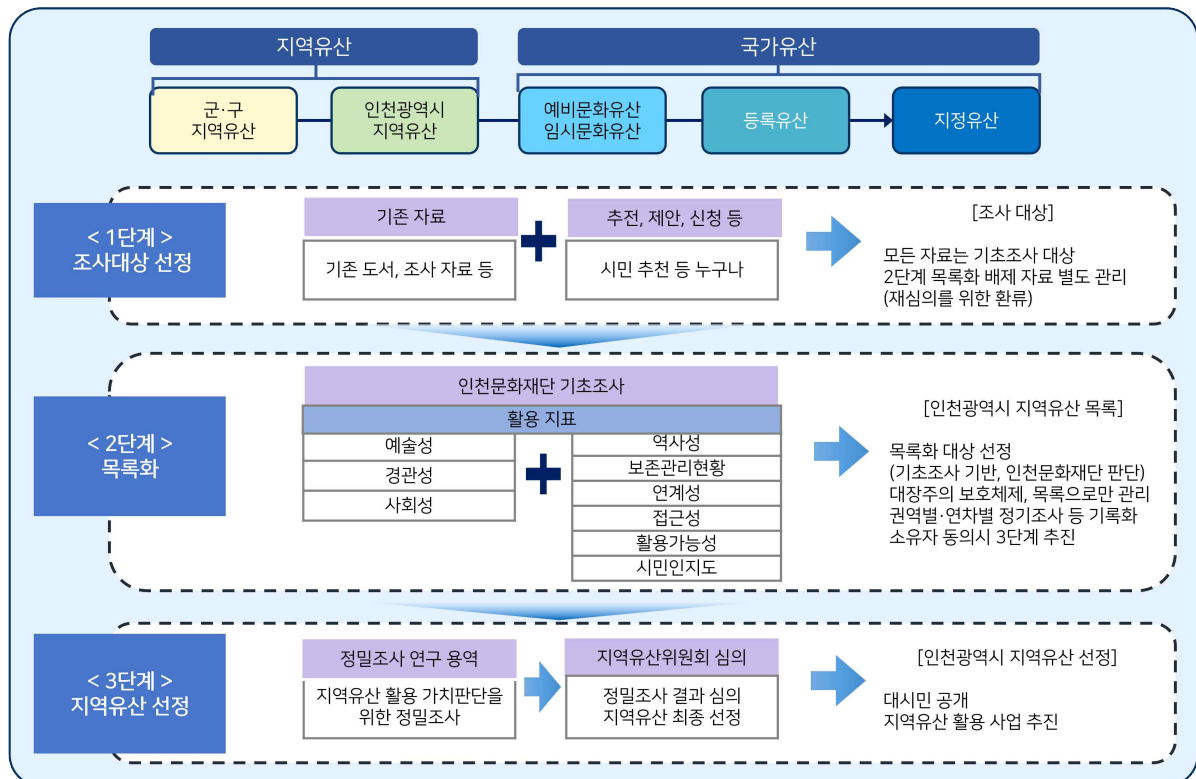
소유자 및 관리자	관리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산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해 방치 및 멸실 • 소유자 및 관리자의 보호 제도 이해 부족으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선정 거부, 무단 철거·훼손 • 도시재생 등 개발 압력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지역유산 선정 및 활용 과정에서 이권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산 선정에 그치고 지원 미비하여 방치·훼손 • 단기성의 계획에 치중, 지속적인 조사·연구 부족 • 지역유산의 관리를 위한 인력 및 방향성 부족 • 지나친 활용 중심의 계획으로 진정성 훼손 우려 • 획일적 지원이 아닌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인천형 지역유산 관리 및 활용에 미치는 소유자·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점

나. 인천형 지역유산 보존 및 관리 방안

1) 인천 지역유산 선정 절차

-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에서 관리대상인 지역유산의 개념은 세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 ‘지역유산 조사대상’은 기존자료와 시민 누구나 추천을 통해 지역유산으로 신청하는 단계로, 모든 조사대상은 이후 단계인 목록화를 위한 대상에 해당함
- ‘지역유산 목록’은 조사대상 자료를 토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인천 지역유산’ 정의에 부합하고, 활용 지표를 고려할 때 목록화하여 대장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출한 대상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은 지역유산 목록에서 소유자 동의를 얻고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활용 사업 추진
- 마지막 단계에서 보존 및 관리 활용에 관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충돌로 갈등 조정 및 보다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개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검증 절차 수행



인천형 지역유산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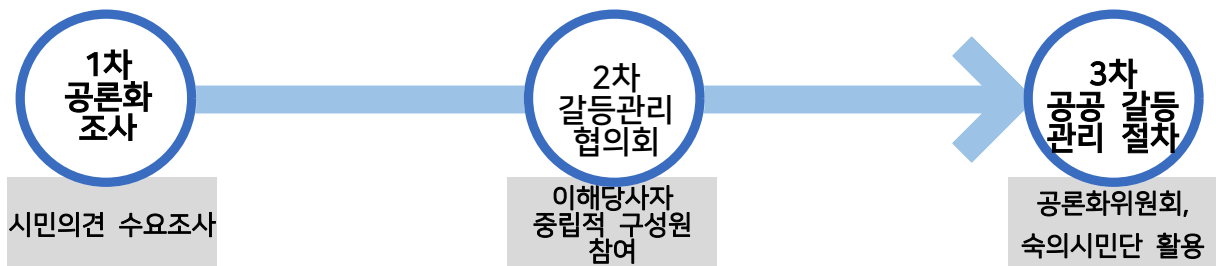
절차		내용	주체
조사대상 (접수·신청·추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신청 시 '지역유산 조사대상' 관리 • 대장주의를 원칙으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 대상 및 이력 관리 • 인천광역시 조사대상 DB 작성 항목 : 명칭, 소재지, 신청일자, 신청자, 소유자 동의 여부 등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기초 조사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지역유산' 정의 부합 여부 판단 • 역사적·예술적·경관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 • 인천광역시를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기억하며 인천시민의 애환, 생활과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보존·활용가치가 있는 것 • 조례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건축자산,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등 유사 연구 내용 검토 및 기초조사 실시 • 조성연대, 물리적 형태, 소유자/관리자, 건립용도, 현재용도, 연혁 조사 	인천문화재단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결과 보존 현황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실시 • 활용 지표인 보존 현황, 연계성, 접근성, 활용가능성 조사 • 보존 유형, 보존상태, 주변 시설, 교통 편의성, 이용 현황, 개방 여부 조사 	
지역유산 목록 (대장주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동의 등 이해관계자 의사,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밀조사 여부 판단 • 정밀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유산 목록'으로 관리 • 이후 소유자 설득, 가치 증진 방안 등을 통해 재심의 여부 판단 등 필요 조치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정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목록 대상으로 정밀조사 연구 용역 추진 	별도 연구기관
지역유산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에 의해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최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공개 및 활용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인천 지역유산 선정 절차의 주요 내용 및 주체

2) 인천 지역유산 갈등 조정 방안

가) 지역유산을 둘러싼 갈등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 인천의 지역유산과 관련한 주요 갈등은 개항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근대유산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 기존의 국가지정·등록유산과는 달리 보호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유산은 보존가치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며, 토지매입 등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기 어려워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개발 목적의 철거 주장에 부딪혀 지역사회의 갈등을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이 됨
 - 갈등내용: 개발사업에 의한 지역유산의 훼손 및 멸실, 보존 결정 시 향후 활용 방향
 - 이해관계자: 공공과 민간(행정관청과 시민단체), 민간과 민간(유자와 시민단체)의 대립
-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구조에서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갈등 자체를 회피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 방안이 요구됨
- 숙의를 통한 민주적 갈등관리 절차를 도입하여 지역유산 보존·활용 이슈를 공개적 논의의 틀로 들이고,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포함한 일반 시민까지 갈등에 놓인 양방향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적 갈등을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갈등 주체	주요 내용
공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종의 여론조사 형태 •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100~500명의 참여자 대상 • 대규모의 참여자가 숙의하는 과정을 거친 여론 조사
시민배심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사법배심원 제도 기반 • 무작위추출로 선발된 시민배심원 12~25명 대상 • 이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사법배심원의 평결과 유사하게 공동으로 정책을 권고
합의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위로 추출된 10~25명의 시민 대상 • 2주간 준비모임에서 선발된 전문가와 이익단체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세션을 가진 후에 공동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숙의 민주주의 의사 결정 도구

나) 공론화 조사

- 공론화 조사는 일종의 여론조사 형태로 수행하나,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갖춘 의견이라는 점에서 직감적인 의견인 '여론조사'와 차별성을 지님
- 공론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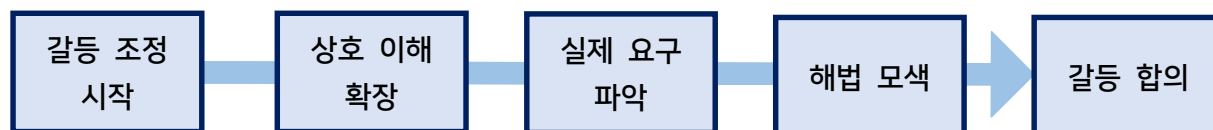


구분	방법
개념	• 설문→학습 및 토론→2차 설문
방법	• 과학적 표본추출기법 • 학습 및 토론 필수, 능동적 참여
결과	• 학습 및 토론을 거친 선호의견 변경
장점	•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 결정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및 시간 소요 • 복잡한 절차, 적은 표본집단 • 집단 내 다수의견 동조 현상 발생

공론화 조사의 주요 특징

다)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³⁷⁾

- 인천 지역유산의 갈등관리를 위해 1차적으로 대립하는 갈등 주체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자체적인 처리 프로세스
- 기존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는 중립적·공정성을 위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위주 구성, 실리적인 해결책 도출 미흡
- 갈등관리에서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모두 참여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최종 합의안의 수용도를 높이도록 함
- 이해관계가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협상이 어려울 수 있고, 마감 시한을 넘기는 경우 공론화를 위한 시 공공 갈등관리 처리 절차로 이관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준비	• 행정관청에서 대립하는 갈등 주체의 의견 조회	• 이해관계자 및 주요 갈등내용 파악 등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
구성	• 갈등당사자 :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 중립적 구성원 - 지역주민(공개모집, 10명) - 중립적 공공갈등 전문가(2인) - 인천광역시청 담당공무원(1인)	•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중립적 구성원 중 선정 • 대립하는 갈등 당사자 참가 시 동일한 인원수로 구성 • 과반수 의결이 아닌 합의를 통한 결정
조정	• 3개월간 월 1회 회의 개최 • 갈등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공갈등 관리 절차 이관 - 매입/매각 의사, 평가액 협의 - 인천 지역유산 활용 지표 기준, 개별 대상의 보존활용 방안	• 마감 시한이 정해진 경우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 대결보다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³⁸⁾
합의	• 합의 후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관계자 간 최종 합의서 형식으로 문서화·공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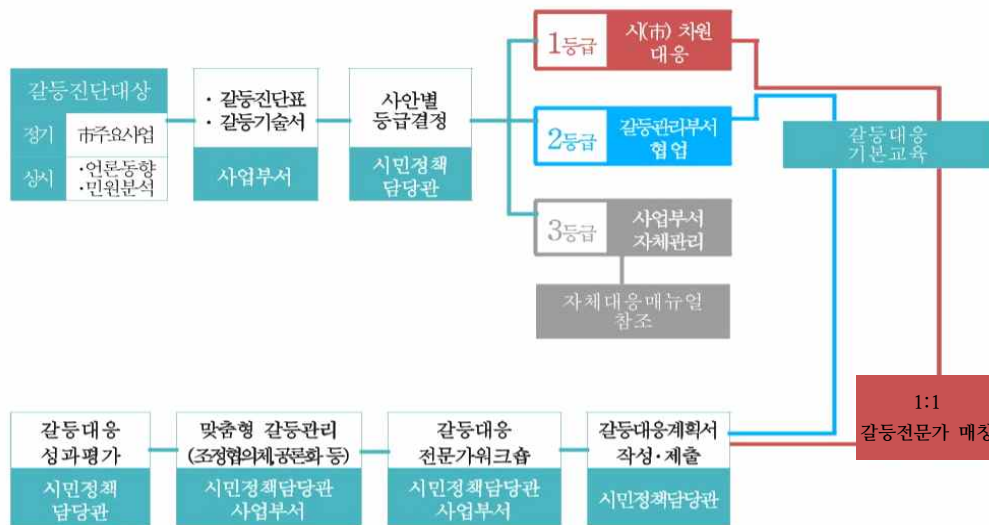
갈등관리 협의회 추진 단계

37) 국토연구원, 2006,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실, 2014,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6, 갈등관리 매뉴얼

38) 황기연·나태준, 2005,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시연구 6(4), 169-190쪽.

라) 인천광역시 공공 갈등관리 절차

- 인천 지역유산 갈등관리협의회로 갈등 조정 불가 시 인천광역시 공공 갈등관리 절차 이관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점갈등관리 대상 선정, 단계별 갈등관리 절차 이행
- 인천시 숙의시민단을 활용하고, 숙의토론회를 통해 정책 권고문을 제안하여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결, 갈등의 사안별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 자문 활동
- 중립적 시민 숙의로 갈등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면 50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 후 중·소규모 숙의



구분	주요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화 :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 • 공공갈등 :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관련된 민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 •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3/15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공공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 임시회는 위원 1/3 이상 요구 시 개최 •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 유형별 보존 가이드라인 제시

가) 부동산 지역유산

- 부동산 유형 지역유산은 인천시민의 공통적인 기억을 간직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소유자가 본래의 목적 및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훼손 및 멸실의 위험성이 높고 소유자에 의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거나 매입을 통해 유산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는 대책 검토
- 매입 및 위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상시 운영·관리가 가능한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매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 근거 마련

나) 동산 및 무형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 동산 및 무형유산은 당시의 형식을 유지하도록 하고 전승자 또는 전승단체에 의해 이어지는 무형유산은 기록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승하되, 가치를 드러내는 전형(典型)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승자 및 전승단체의 자율성을 보장

다) 아카이빙 및 기록화

- 지역유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원활한 보존·관리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등의 연구자료 수집 및 기록화가 필수적
- 인천 지역유산의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기본적인 현황 정보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보다 정밀한 가치조사와 규명, 가치 증진을 위한 활용 사업의 원천자료로 활용
- 기록화 사업은 사진, 영상 등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예술성, 경관성 등의 유산 지표가 높고 훼손 또는 멸실이 우려되는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실측 및 도면화 등 정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

라) 주변 시설 및 환경 정비

- 인천 지역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전승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 또는 정비 사업 실시
- 지역유산의 물리적 구조를 보존하기 위한 방재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훼손을 미연에 방지
- 주변 환경 관리 또는 정비는 지역유산을 둘러싼 환경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마) 상시 모니터링

-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여건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훼손 범위에 대한 보존·수리와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정비를 통해 멸실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바) 홍보 및 교육

- 인천 지역유산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천 지역유산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
-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천시민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존·관리 의식 고취

사) 관광 및 마케팅

-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해 인천 지역유산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시장전략, 관광 홍보, 이벤트 유치 등 활용 극대화
-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시 대상별 최적 이용 허용량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 시간제 등을 적용한 적정 범위 내에서 운영
- 관람객 대상으로 인천 지역유산의 이용 및 보호, 관람 안전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관광으로 인한 훼손과 안전사고 최소화

4) 보존 대상 지역유산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가)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지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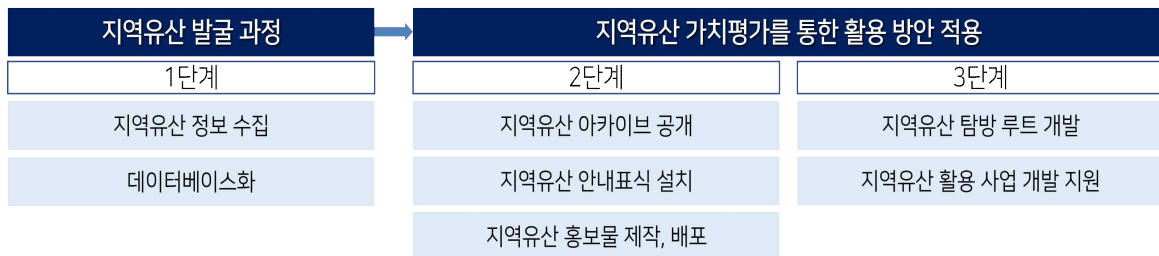
- 인천 지역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존 및 전승하여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함
- 국가유산에 비해 비지정유산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은 낮으며, 특히 2024년 국가유산 제도 개편과 맞물려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천 지역유산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을 우선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가치 홍보 및 활용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
- 훼손·멸실의 위기에 처한 부동산 지역유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에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가능한 대상에 한하여 긴급한 수리·보존 예산 지원

구분	대상	사업	세부 사업
가치 홍보 및 활용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기록화	기초자료 수집 및 DB화
			아카이브 공개
		홍보 및 마케팅	지역유산 표지 설치
			지역유산 홍보물 제작·배포
			지역유산 탐방 루트 개발
			지역유산 활용사업 개발 지원
수리·보존 예산 지원	전문적 관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부동산 지역유산 중 「건축자산법」 지원가능 대상	「건축자산법」에 의한 지원 (협약 체결, 일정기간 유지, 시민 개방 조건)	

인천 지역유산 지원사업

나) 인천 지역유산 홍보 및 활용 사업 지원 절차

- 가치 홍보 및 활용 사업은 지역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대중들에게 홍보·교육함으로써 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인천 지역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일반시민과 지역사회의 보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적인 정보와 가치의 공유, 홍보 등 전반적인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에 대한 홍보를 우선하여 시행
- 후보군 발굴 및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관리대상 목록화 이후 최종 선정된 인천 지역유산에 대한 아카이브 공개, 표식 설치, 탐방코스 개발, 개별 활용 사업 개발 지원 등의 활용사업 추진



인천 지역유산 홍보 및 활용사업 지원 절차

다) 인천 지역유산 기초자료 DB

- 인천 지역유산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여 지역유산의 과거 이력 등 연혁부터 현재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정보의 갱신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 수집 대상이 되는 자료는 지역유산의 이칭 등 명칭, 위치, 사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이력, 보고서 및 도면, 조사연구 자료 등의 학술자료, 지역주민의 인터뷰 등 유·무형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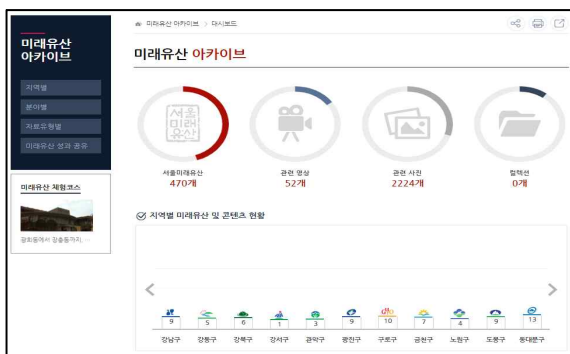
부동산 유산 실측화 등 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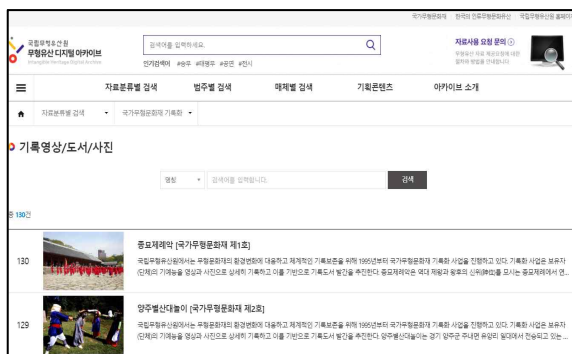
무형 유산 인터뷰

라) 인천 지역유산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 앞서 기초자료 기록화를 통해 축적한 지역유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 지역유산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누구나 쉽게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유산의 중요성 및 보존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인천 지역유산 아카이브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나아가 지역유산과 관련된 시민들의 기억과 생활문화를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오픈형 아카이브를 지향



서울 미래유산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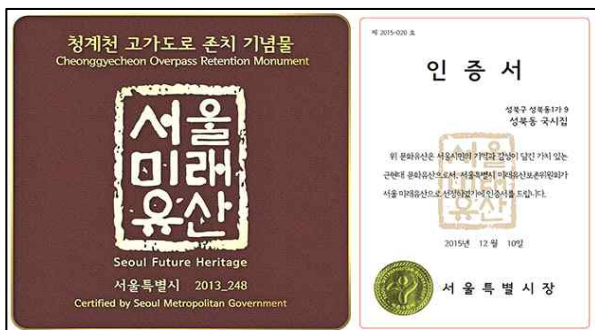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마) 인천 지역유산 홍보 및 활용 사업

■ 인천 지역유산 안내표식 설치 사업

- 인천 지역유산으로 선정되었음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기념할 수 있는 안내표식을 설치하여 소유자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보존을 유도
- 안내표식은 지역유산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및 양식, 색상 등 일관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명칭 및 간략한 선정 사유를 병기, 정면 또는 입구, 관람객의 눈높이에 설치하여 쉽게 인식되도록 배치



서울 미래유산 표식 및 인증서



전주 미래유산 안내판

■ 인천 지역유산 홍보물 제작

- 지역유산에 대한 안내와 관광지도 등을 포함한 지역유산 안내 팸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지역유산의 가치 및 의의를 꾸준히 알리고 인천 지역유산 탐방을 장려
- 온라인 언론매체,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과 소규모 이벤트 등을 지속해서 운영하여 인천 지역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보전의식 강화



대구 근대골목 투어 홍보물



부산 역사문화지도 홍보물

■ 인천 지역유산 탐방 구간 개발

- 지역유산과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도보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산 보존·관리에 기여
- 개발한 탐방 루트는 인천 지역유산 공식 홈페이지 플랫폼, 지역유산 홍보 팸플릿,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탐방 구간을 중심으로 정기 도보 답사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 소셜미디어 공유 이벤트 등 활성화 방안 적용



서울 미래유산 도보답사 프로그램



부산 원도심 스토리 투어

■ 인천 지역유산 개별 활용 사업 개발

- 민간 주도의 지역유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역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유산의 발굴 및 다양한 지역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
- 지역유산의 활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원활한 활용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 민간 주도의 지역유산 활용은 경직되기 쉬운 관 주도의 활용사업과 달리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용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기획을 바탕으로 지역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구분	주요 내용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물포구락부(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인천시민애(愛)집(시 등록유산), 신흥동 옛 시장관사(비지정유산) • 제물포구락부 아트갤러리, 전시·체험 콘텐츠, 차담이 있는 시민강좌, 제물포정원 프로젝트, 전시관, 관람객 쉼터, 재현, 탐방로 거점공간 등 운영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국가등록유산) • 인천에 소재한 국가등록유산 중 민간이 소유한 유일한 건물로, 카페와 전시관으로 활용 • 근현대 시기 마을과 관련된 기록물, 옛 근대개화기의 소품, 일제강점기 사진엽서 전시



신흥동 옛 시장관사, 긴담모퉁이집
공공 소유의 비지정 지역유산 활용 사례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카페
민간 소유의 지역유산 활용 사례

7

관광자원화 및 제물포르네상스 지원 등 활용방안

- 가. 시민 친화적, 참여형 활용 방안
- 나. 지역유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
- 다. 제물포 르네상스 검토 및 연계 활용 방안
- 라. 국가유산 및 타 관광 상품 등 연계 활용 방안

7. 관광자원화 및 제물포르네상스 지원 등 활용방안

가. 시민 친화적, 참여형 활용 방안 제시

1) 시민참여 의의

- 시민들은 동시대의 기억과 감성을 바탕으로 지역유산을 발굴하고 그것에 담긴 보전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유산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음
- 기존 중점보호주의 개념에서 발전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서로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통해 지역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공감이 공유되고 확대된다면 주도적으로 참여 가능
-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며, 인천광역시 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과 연계 가능한 업무를 공유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 보조적 역할 필요
- 기존의 제도처럼 보존을 원칙으로 원형 그대로를 고집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유산의 가치를 찾아내고 지역 정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감과 소통의 창구를 구축하여 시민참여 독려

2) 시민참여 방안

-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는 인천시민이 주체가 되는 제도이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지역유산의 가치를 찾고 활용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 필요
-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고, 지역유산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지속적인 가치를 재창출하고,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보존·관리가 가능함
- 나아가 보존과 개발 갈등 상황에 놓인 민간 소유의 지역유산에 대해 시민활동가의 소유자 설득 활동 등을 통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보존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제안
- 시민의 일상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유산을 직접 소개하는 시민해설사 활동 등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의 정착과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해설가 활동 참여

나. 지역유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1) 다양한 스토리텔링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애니메이션 사업백서」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애니메이션 콘텐츠 이용빈도는 주 1회 이상(63.2%)이고, 이용 매체로는 스마트기기(74.4%)를 사용함
- 인천 지역유산은 인지도가 낮아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역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제작하고, 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함으로 인지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인천 지역유산과 관련된 역사, 인물, 유형 및 무형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다양한 홍보 애니메이션을 통해 인천 지역유산의 인지도를 상승시킴으로써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인천 지역유산 관련 스토리텔링 공모전



인천 지역유산 여행 스토리텔링 콘텐츠(출처: 국가유산채널)

2) 교통서비스 개선 및 관광자원 개발

- 국토교통부에서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유치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하고, 투어상품 개발 등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고급 관광 기반 조성 목적으로 인천공항 내 비즈니스 항공기 전용터미널 신설 계획 마련
- 주요거점과 관광지 간 대중교통체계 개선, 다양한 이동수요 충족을 위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확대 및 UAM 도입 추진
- 인근 관광자원, 지역개발 및 인근 산업 연계 계획 등을 고려한 ‘관광도로’ 지정(법률 개정)과 도로구역 내 정비사업 등 교통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투어상품 개발을 통해 환승형 관광자원 개발
- 주요 교통거점인 공항, 터미널과 인천 지역유산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인천관광공사 인천 레트로노선과 바다노선 시티투어 노선 운영 경로

3) 문화시장·문화거리 조성 및 상품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궁화호를 팔도장터 관광열차 전용 열차로 이용하여 시장별 희망 일정을 고려한 전용 열차 상품 운영
- 시장의 지속적 방문 요구에 대비하여, 운영시장 및 일정에 따라 정기 열차 및 지역 열차를 선별적으로 이용
- 최근 유행인 체류형 일정 반영 및 장거리 위치시장 혹은 야시장 운영시장의 콘텐츠 활용을 위한 1박 2일 상품 추가 운영
- 인천 전역에 분포하는 인천 지역유산 후보에 해당하는 시장 또는 인접한 시장을 문화시장,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문화시장 및 문화거리에 적합한 관광상품 개발과 동시에 지역특산물 발굴 및 확대

명칭	이칭	주소(지번)
대룡시장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483
배다리 시장 터	배다리 헌책방 거리	동구 금곡동 87-6
중앙시장	혼수시장, 그릇상가, 양키시장	동구 금곡동 92-6
송현시장	송현자유시장, 중앙시장	동구 송현동 90-36
송의평화시장	송의자유시장, 자유평화시장	미추홀구 송의동 124-171
신기시장		미추홀구 주안동 1336-7
부평시장 일대	부평강시장, 부평진흥시장	부평구 부평동 360-1
정서진중앙시장		서구 가정동 501-31
신포시장		중구 신포동 3-2
수인곡물시장		중구 신흥동3가 28-4

인천 주요 시장 현황



부평구 부평문화의 거리



중구 개항장 역사문화거리

다. 제물포 르네상스 검토 및 이와 연계한 활용 방안

- 2023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을 목표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원도심을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 문화·산업·관광의 융합을 통해 사람 중심의 원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문화·관광 분야 사업 중 지역유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으로는 자유공원, 상상플랫폼 1883 개항광장을 조성하는 글로벌 앵커시설 조성사업, 제물포 웨이브 개항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연계확충 사업, 친수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역사문화지구 특화지구 사업 등이 있음
- 앞서 제시한 스토리텔링 개발, 교통서비스 개선, 문화시장·문화거리 조성 방안을 제물포 르네상스의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구분	지역유산 관련 사업내용
원도심	중구·동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핵심 앵커사업 전면 재검토
문화·관광	원도심의 문화, 관광자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산업·경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원도심 스마트시티 조성,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첨단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원도심 산업생태계 혁신
내항 재개발	상상플랫폼 준공 및 1·8부두 시민 우선 개방

2023 제물포 르네상스 분야별 지역유산 관련 사업



제물포 르네상스 문화·관광 분야 주요사업 개요

- 관광자원화를 위한 거점시설 지정 및 건립과 더불어,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유산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 거점시설 : 자유공원~제물포구락부, 인천중구청~인천 개항박물관 등
 - 관광상품 : 대표 먹거리(짜장면, 감자탕) 확대 및 개발, 염전 관련 상품개발 등
 - 방문객 편의시설 : 방문자센터 및 홍보관 건립으로 거점시설 연계, 기존 주차장 개선 및 공용주차장 확대, 화장실 등 기타 편의시설 확충



제물포 르네상스 인천 지역유산 연계 방안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인천 지역유산 연계 방안
개항장(제물포 구락부) 중심으로 한 거점시설 선정 및 기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시설 : 인천 내항, 월미도 일대, 인천 내항 동측 웅진군청 별관 일대 등 개항장(제물포구락부) 지근거리에 방문자센터(홍보관 포함) 건립 계획 추진 개항장 및 거점시설 주변 기존 주차장 개선사업 및 공용주차장 건립 계획 추진 개항장 및 거점시설 주변 화장실, 휴게공간, 공원시설 등 기타 편의시설 개선사업 및 건립 계획 추진
활용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항장 및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활용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스토리텔링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활용프로그램 운영 조직 구성
먹거리 확대 및 관광상품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상품을 위한 대표 브랜드 개발 먹거리 : 인천 짜장면, 인천 감자탕, 갯벌 건강밥상(갯벌에서 채취한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먹거리) 관광상품 : 염전(소금) 관련 상품(소금선물세트, 소금치약, 미용·건강 상품 등), 갯벌 체험 패키지 세트 등

2023 제물포 르네상스 인천 지역유산 연계 방안

라. 국가유산 및 타 관광 상품 등과 연계한 활용 방안

1) 국가유산 활용사업 연계

- 현재 국가유산청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세계가 만나는 곳, 인천 개항장’,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인천 개항장 밤마실)’이라는 문화유산 야행 활용사업을 시행 중으로, 지역유산을 연계한 활용 영역을 확대함
- 인천 지역유산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이미 별도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민간 소유로 지정·등록이 어려운 지역유산은 인천광역시에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향으로 활용 유도
 - 대상 예시 : 인천아트플랫폼, 차이나타운, 구 일선해운 사옥, 동인천역 등
- 인천 지역유산 중 선별을 통해 활용대상을 선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단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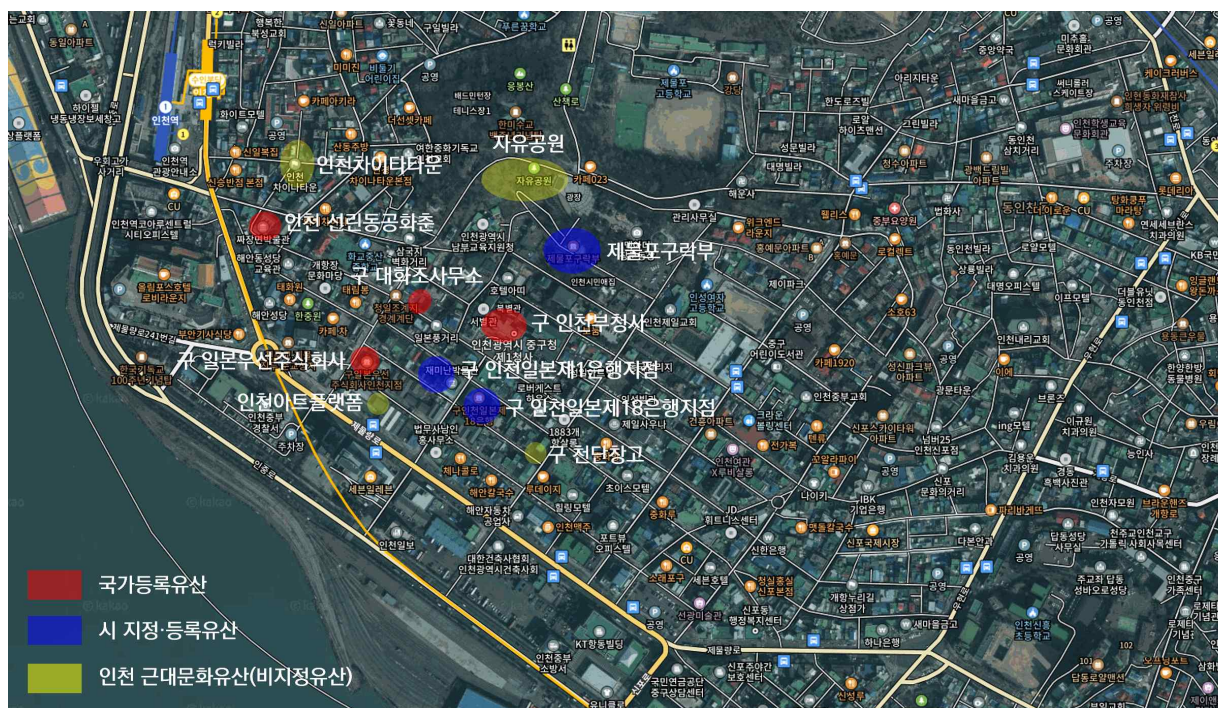
국가유산 주요 활용사업 현황

아홉 분	내용
예산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공고 접수	매년 6월 공모계획 공고 / 매년 7월 신청 및 접수
심사 일정	매년 8월 공모 심사 (매년 9월 결과 발표)
사업 기간	1년 (1년마다 사업계획 공모)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지정·등록유산 및 인천 지역유산

인천 지역유산 활용사업 지원계획(안)

-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세계가 만나는 곳, 인천 개항장’이라는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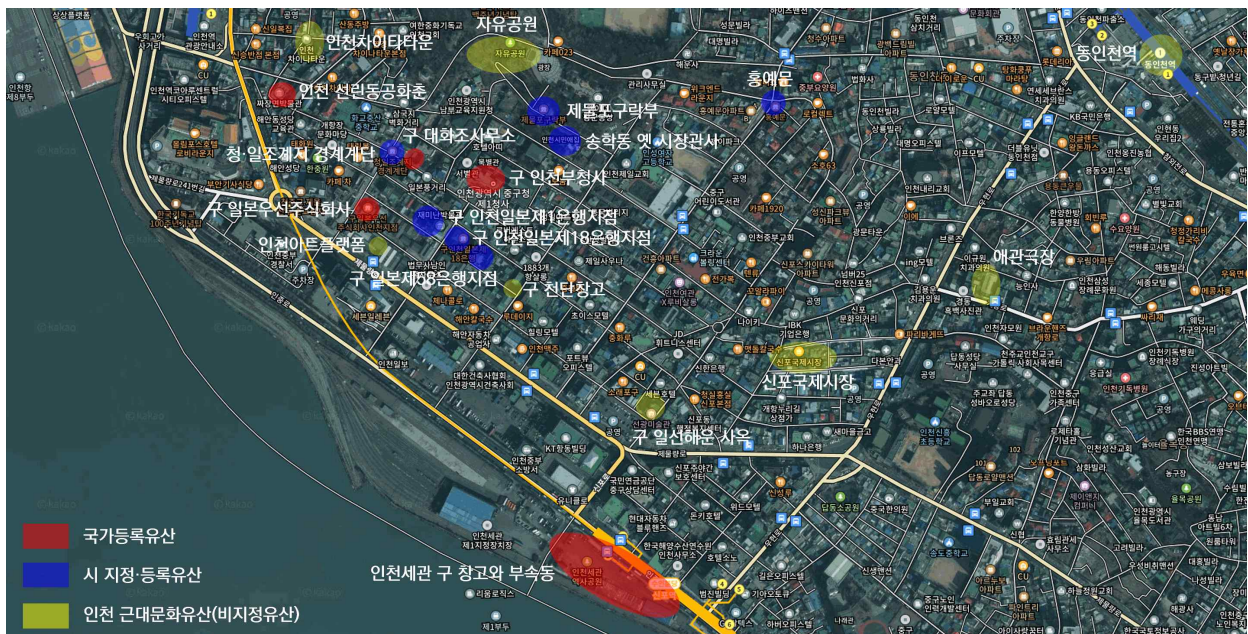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운영 예시 : ‘미션 임파서블! 개항장의 숨겨진 보물’



인천 개항장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주변 연계 인천 지역유산 분포 현황

■ 문화유산야행 활용사업 공모를 통한 활용

-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인천 개항장 밤마실)’이라는 야간 활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상 : 인천 선린동공화춘(국가),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국가), 구 인천부청사(국가), 인천 구 대화조사무소(국가), 인천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국가), 구 제물포구락부(시 유형), 구 인천일본제1은행지점(시 유형), 구 인천일본제18은행지점(시 유형), 구 일본제58은행지점(시 유형), 흥예문(시 유형), 송학동 옛 시장관사(시 등록),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시 기념물)
 - 주요프로그램 : 야경 / 야로 / 야화 / 야시/ 야사 / 야설 / 야식 / 야숙
- 문화유산야행의 대상인 국가 지정·등록유산과 주변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는 인천 지역유산을 연계하여 활용
- 문화유산 야행 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유산 야행 사업 기간 외의 상시적인 활용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운영
 - 야경(夜景) 예시 : 자유공원을 활용한 야간 탐방로를 신설하여 소규모 프로젝션을 통해 미디어 아트 진행
 - 야설(夜設) 예시 : 애관극장을 활용한 추억의 영상(애니메이션, 영화, 단막극 등) 상영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생 활용사업 주변 연계 인천 지역유산 분포 현황

2) 인천 시티투어 상품 개발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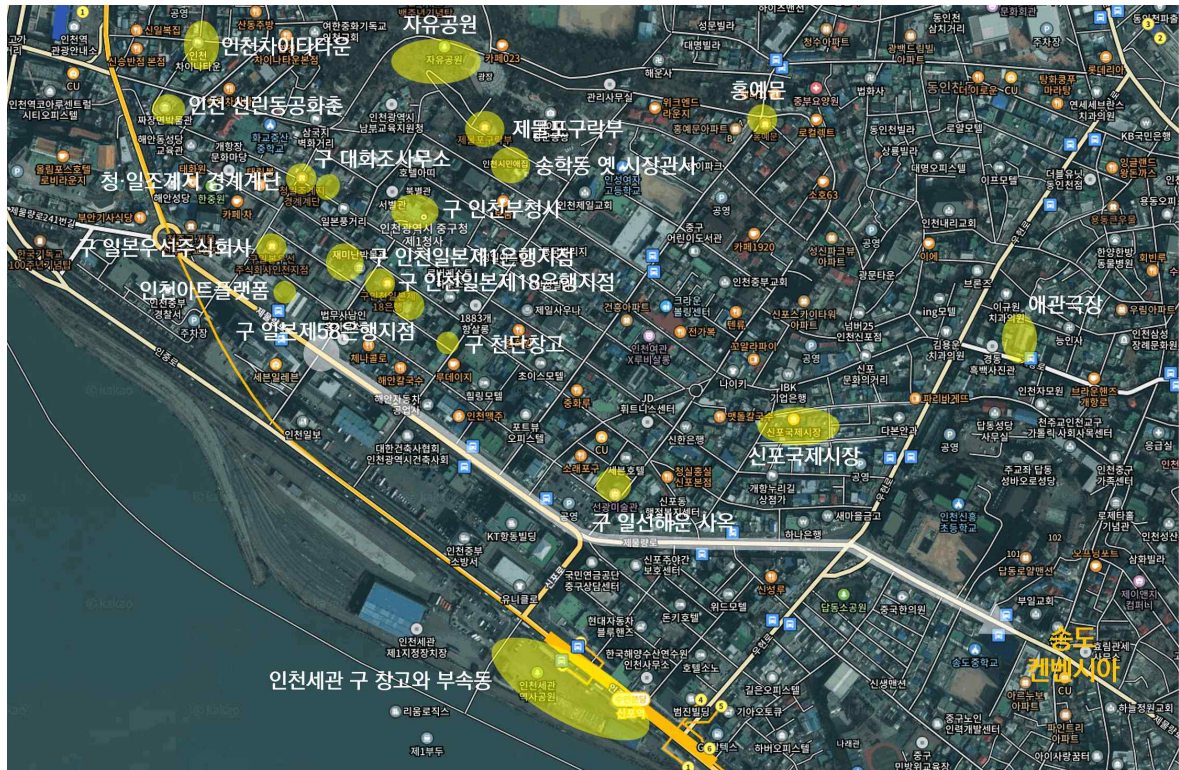
- 기존 ‘인천 레트로노선’과 ‘바다노선’을 활용한 주간투어, 야간투어 등 시티투어 코스 개발 및 기획
- 기존 시티투어 코스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점과 종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하는 시티투어 코스 개발 및 기획하여 인천종합관광안내소를 환승지점으로 활용

노선	시티투어 코스
인천 레트로노선 연계	• 인천국제공항(기점) - 신포국제시장 - 동구 역사문화거리(지역유산) -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인천역(차이나타운, 동화마을) - 송도컨벤시아- 인천종합관광안내소(환승)- 인천국제공항(종점)
바다노선 연계	• 인천국제공항(기점)- 을왕리해수욕장- 왕산마리나 - 개항장(제물포구락부) - 송도컨벤시아 - 인천종합관광안내소(환승) - 아트센터 인천 - 인천국제공항(종점)

인천 시티투어 연계 구간 제시



인천 시티투어 동구 역사문화거리 코스(안)



인천 시티투어 개항장 일원 지역유산 연계 코스(안)

3) 인천 둘레길 연계 활용 프로그램

- 인천 둘레길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 도시와 도서지역 등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16코스까지 마련되어 있음
- 기존 둘레길 코스 중 지역유산의 분포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과 연계한 탐방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하며, 탐방 투어는 주간탐방과 야간탐방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기존 문화유산 야행 시기에 한정했던 야간 투어를 상시적으로 운영
 - 인천 둘레길 11코스 연탄길과 연계 탐방 투어
 - 인천 둘레길 12코스 성창포길 연계 탐방 투어
-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박물관, 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
- 기존의 개괄적인 역사문화해설보다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과 스토리 구성을 위해 교육 탐방 등에 관한 지역유산 전문가와 함께 기획 및 개발
- 장기적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문헌이나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 신규 콘텐츠의 개발 및 기획 필요

코스 안내

1코스

연무역 - 무당골고개 - 철수수목원 - 송발삼터(반딧불서식지) - 피고개 - 중성성지(귀룽나무 삼터) - 정령이고개 - 계양산 산림욕장 (지선사) - 계양문화회관 - 연무정

2코스

경명이고개 생태통로 - 중구봉 - 연희센터 - 안재개발원 뒷길 - 동우약수터 - 동우아파트(시기지길) - 고속도로 연결통로 - 서안공원 - 나비공원

3코스

세월고등학교 주회관 - 인천보건고등학교(구 경인여자고등학교) 뒷길 - 석남약수터(가희여중) - 팔각정 - 나비공원 - 장수산 - 현직산공원 - 원적산체육공원 - 세일고등학교 주차장

4코스

원적산 생태통로 - 보각사 - 장고개 - 일우물약수터 - 경원대로 벽화거리 - 백운공원 - 부평아트센터 - 십정공원 - 신명요양원

5코스

부평산거리역 - 역사사 입구 - 인천사회복지회관 뒷길 - 만월 - 만수산 연결다리 - 만월산티널입구 - 도봉능마루 - 불로약수터 - 만수산(금마산) 정상 - 수원마을길 - 인천대공원 청문

6코스

인천대공원 청문 앞 - 장수천(강수고) - 담방마을아파트 - 서창JC - 연수물재생센터 - 소래습지생태공원 - 전사관 주차장 - 소래포구 시장

7코스

소래포구역 해돋이광장 - 한화메트로아파트단지 앞 해변공원(유수지) - 한화고 - 금계구리서식지 - 고잔물게이트(문전면허 시험장 앞길) - 남동유수지 - 동학역

8코스

동학역 2번 출구 - 송기원 - 선학역 - 법주사 - 문학산(길마재) - 고마리길 - 삼호원

8-1코스

동학역 2번 출구 - 송기원 - 선학역 - 법주사 - 문학산(길마재) - 문학산성 - 삼호원

9코스

삼호원(사조지교) - 연정정 동측계단 입구 - 노적봉 - 송도역 - 청룡공원 - 청량산 봉등버위 - 송유치원 - 청량터널 뒷길 - 봉재산 - 민항환경공단

10코스

민항환경공단 - 세아침공원 - 달빛공원 - 아람도해안공원 - 송원갯마을유수지 - 중구문화회관 - 신선초등학교 - 연화대병원사거리 - 송의공구상가 - 도원역

11코스

도원역 - 우각로 문화마을(구 전도관) - 인천세무서 - 금강동주민센터 - 청영초등학교 - 베다리문화거리 - 송원근린공원 - 수도권산 달동네박물관 - 송인천역 북광장

12코스

송인천역 북광장 - 중앙시장 - 베다리사거리 - 담동성당 - 신포시장 - 흥예문 - 자유공원 - 송월광로교회 - 공화춘 - 개항박물관 - 제물포구학부 - 팔각정 - 삼국지벽화거리 - 인천역

13코스

인천역 - 대한제보 - 월미공원 정문 - 월미문화거리 - 월미테마파크 - 한국인민사박물관 뒷길 - 양전당앞길 - 월미공원 정문

14코스

인천역 - 대한제보 - 북성포구 - 동일양직 - 만석동주민센터 - 화평동농민거리 입구 - 민들레국수길 - 화도전공원 - 안석부두 - 두산 인프라이코어 - 화수부두 - 송원초등학교 - 송인천역 북광장

15코스

매포소 입구 - 천사계단로 - 참성단 정상 - 372계단 단군로 - 매포소 입구

16코스

신학창 - 송암구릉다리 - 팔각정 - 예원원 - 구름다리 - 거미지산 - 송원해수욕장 - 주차장 - 청룡신학창

인천 둘레길 전체 16코스

프로그램	대상	내용
스탬프 투어	어린이	스탬프를 활용한 지역유산 투어 상시 운영
야간탐방 르네상스	일반	인천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함께하는 야간 투어
테마 전시	일반	지역유산, 무형유산, 관련 인물 등 인천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야외 전시
백(Back) 투 더 인천	일반	인천의 문화관광자원을 탐방하는 투어

인천 둘레길 탐방형 프로그램(안)

인천 둘레길 11코스 연탄길 연계

인천 둘레길 12코스 성창포길 연계

110

8

시민 소통형 지역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가.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유산 기준 설정 및 후보
발굴

나. 시민 소통과 참여형 보존·활용 및 관리 방안

8. 시민 소통형 지역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가.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유산 기준 설정 및 후보 발굴 등

1) 단계별 시민참여 방안

-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시민 인식과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담보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시민참여는 실질적인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 하락과 더불어 정책 수용성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시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시민참여의 질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단계별로 발전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시민참여를 다루는 연구에서 주로 ‘참여의 사다리(Arnstein, 1969)’ 모형을 통해 시민참여를 분석하고, 시민참여 과정을 비참여와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의 3가지로 대분류하고 세부적으로 8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음

구분	단계	세부내용
비참여	1단계 조작 (manipulation)	• 공무원의 일방적 교육과 설득 • 참가서명
	2단계 처방 (therapy)	• 행정의 일방적 지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의 지원
형식적 참여	3단계 정보제공 (informing)	• 행정의 일방적 정보 제공,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보제공 • 환류와 협상의 기회 제공 미흡
	4단계 협의 (consultation)	• 형식적 공청회와 집회, 의견조사, 반상회 등 • 의견조사 후 피드백 미흡
	5단계 회유 (placation)	• 낮은 수준의 참여자 영향력 행사 • 소수자 중심 위원회 운영, 소수자 다수결 방식의 최종의사결정
실질적 참여	6단계 공동협력 (partnership)	• 시민과 협상(협상의 기본원칙 공유)하여 행정이 최종결정권 • 기획, 의사결정의 공동협력과 책임
	7단계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 시민 중심 결정권, 시민지배적 의사결정 • 공공계획에서 시민결정권 부여, 거부권(veto) 부여
	8단계 시민통제 (citizen control)	• 실질적 시민 통제 수준 • 공공계획이나 제도의 주도성 보장획득 • 입안, 결정, 집행, 평가단계에 직접적 참여 및 통제

시민참여의 사다리 8단계 모형

(출처: Arnstein,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조은영·강지선·김광구, 2018, 도시재생 시민참여과정 비교분석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2(2), 165-189쪽, 재인용)

- 1, 2단계는 행정에서 정한 정책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로 시민참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임
- 3단계는 일방적인 정보제공, 4단계는 형식적인 공청회 등 의견수렴으로 최소한의 시민참여 진행, 5단계는 일부 시민들과 행정이 사전에 협의하는 단계로 소수에 의한 최종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형식적 참여로, 정부가 주도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짐
- 실질적인 시민참여인 6, 7, 8단계에서는 행정기관의 정책과 집행과정에서 시민 영향력이 높아지며,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거나, 시민이 의사 결정 주도권을 갖고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 관리하며 나아가 정책을 통제하는 단계까지 도달
- 이러한 시민참여 단계를 반영하여 인천 지역유산의 발굴 및 기초조사부터 활용 지표를 고려한 활용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인천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
- 현재 인천 지역유산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해도가 저조한 상태에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교육과 설득 등의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설문조사 등 시민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
- 이후 수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시민 포럼, 라운드테이블 등 인천 지역유산 주제로 한 시민 그룹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 태도 형성
- 인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 추진 시, 시민활동가와 시민해설사 등 주요 활동의 주체로서 직접적 참여



인천 지역유산 단계별 시민참여 과정

단계	목표	세부내용
1단계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 인식 증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천 지역유산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초기 과정
2단계	의견조사와 피드백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존 가치 및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등의 소극적 참여
3단계	협의·소통 과정의 의사 반영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인천 지역유산을 주제로 한 시민 포럼, 공개토론회, 설명회 등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4단계	시민활동으로 주체적 참여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활동가 및 해설가 활동 등 참여 주체로서 역할 수행

인천 지역유산 단계별 시민참여 목표와 내용

나. 시민 소통과 참여형 보존·활용 및 관리 방안 제시

-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와 시민의견 수렴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인천 지역유산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접수
 - 대면 : 시청 및 군·구청, 도서관, 문화예술체육 시설 등 공공기관 오프라인 공간
 - 비대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인천 지역유산 플랫폼(향후 개발) 등 온라인 창구 활용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천 지역유산의 개념 및 정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의 비전 및 전략 등 적절성 및 타당성, 개선 방향 등 토론회 추진
- 지역공감대 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각계 전문가 및 원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민활동가와 시민해설사 등 궁극적인 시민활동이자 시민사회 운동(Movement)으로 전개

프로그램	내용
시민 대상 지역유산 콘텐츠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민의 지역유산에 관한 다양한 기억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 인천 지역유산과 관련된 경험이나 기억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개
시민참여형 지역유산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지역유산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 및 능동적 주체로써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개최 •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시민활동가 및 시민해설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민활동을 통해 시민활동가·시민해설사 등 시민 서포터즈 형태로 모집·운영 •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시민에 의한 지속적인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 도모

시민참여형 보존·활용 및 관리 방안

1) 시민 대상 지역유산 콘텐츠 공모전

- 근·현대 시기의 지역유산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통적인 유산처럼 문헌이나 기록으로 남아있기보다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기억과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공통된 경험이나 기억을 인천시민이 공유하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구분	내용
대상	인천시민
내용	지역유산 관련 사진
	지역유산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음악 등 미디어
	지역유산 관련 에세이 등
선정방법	인천광역시, 전문위원, 시민 투표 등

지역유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요



공모전 콘텐츠를 등록하시기 전에, **[공모전 준비하기] - [참여유형별 업로딩 방식안내]**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등록은 1인 1작품이 인정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인천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사례

2) 시민 참여형 지역유산 포럼·라운드테이블

- 시민 주체적으로 지역유산의 보호 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유산의 발굴 및 관리·활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 포럼 개최
- 인천 지역유산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 및 능동적 주체로써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라운드테이블 진행
- 포럼 또는 라운드테이블의 참석 대상은 지역유산 활용·관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소유자, 전문가, 인천광역시 관계기관 공무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 지역유산 시민 활동 주체로써 참여 가능한 시민으로 구성
- 주제는 인천 지역유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기억을 공유하는 지역유산의 발굴, 관리 및 활용 아이디어,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으로 지역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설정
-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경직된 행사가 아닌 누구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시민포럼 및 라운드테이블의 내용은 장기적으로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보존·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함

구분	내용
참석대상	인천시민, 지역유산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등
포럼 주제	인천 지역유산의 개념, 차별성
	지역유산 발굴 및 시민기억 공유
	지역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
	지역유산 관리 및 활용 아이디어

지역유산 시민포럼 개요



인천 남동구 100인 원탁회의 사례



세계시민교육 포럼(출처: 반기문세계시민센터)

3) 시민활동가 및 시민해설사 운영

-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직접적인 시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활동가와 해설사 등 시민 서포터즈 형태로 모집·운영
- 지역유산 및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상향식으로 주민의견을 모아 직접적인 행정 정책으로 연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발굴하고 시민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시민에 의한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 도모
- 시민활동가 및 시민해설사의 대상은 인천 지역유산의 보호 관리 시민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또는 시민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경비보조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기대
- 시민활동가는 보존관리 활동을 중점으로 하며, 지역유산 선정에 대해 소유자·관리자를 설득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갈등을 공론화하여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
- 시민해설사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인천 지역유산 홍보, 관련 콘텐츠 제작, 탐방 투어 프로그램 안내 등의 활용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참여



마을활동가 매뉴얼 제작 사례
(출처: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3 익산시 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송리마을 재도약의 꿈

송리 근대역사 마을해설사 교육생 모집

교육비 무료
수료시 활동비 지급

모집기간
2023. 5. 22. (월) - 6. 2. (금) 18:00까지

교육일정
2023. 6. 09. (금) ~ 2023. 8. 18. (금)
14:00~17:00 (매주 금요일, 총 11회)

신청방법
전화신청 후 이력서 제출 (이메일)
010-4758-2975 / hys6107@naver.com

모집대상
익산시민 총 20명 내외
* 우선선발기준(인화동 거주민,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참여자, 문화관광해설 관련 경력자)

교육장소
구시장고객지원센터 2층 교육실

특전
수료후인화동마을해설사 활동(활동비 지급)

교육내용
인화동 마을해설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이론 및 실무 교육

기타
교육비 전액 무료 / 문의: 010-4758-2975

익산 마을해설사 교육생 모집 사례
(출처: 익산 인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9

AI 첨단기법 등을 활용한 장기 미래 목표

- 가. 국가유산청 장기 사업추진 방향, 관리정책 분석
- 나. 인천시 지역유산 정책 방향과 목표, 비전
- 다. 단계별 실행계획, 자원확보 방안, 국비연동 방안

9. AI 등 첨단기법 등을 활용한 장기 미래 목표 제시

가. 국가유산청 장기 사업추진 방향, 관리정책 등 분석

1)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방향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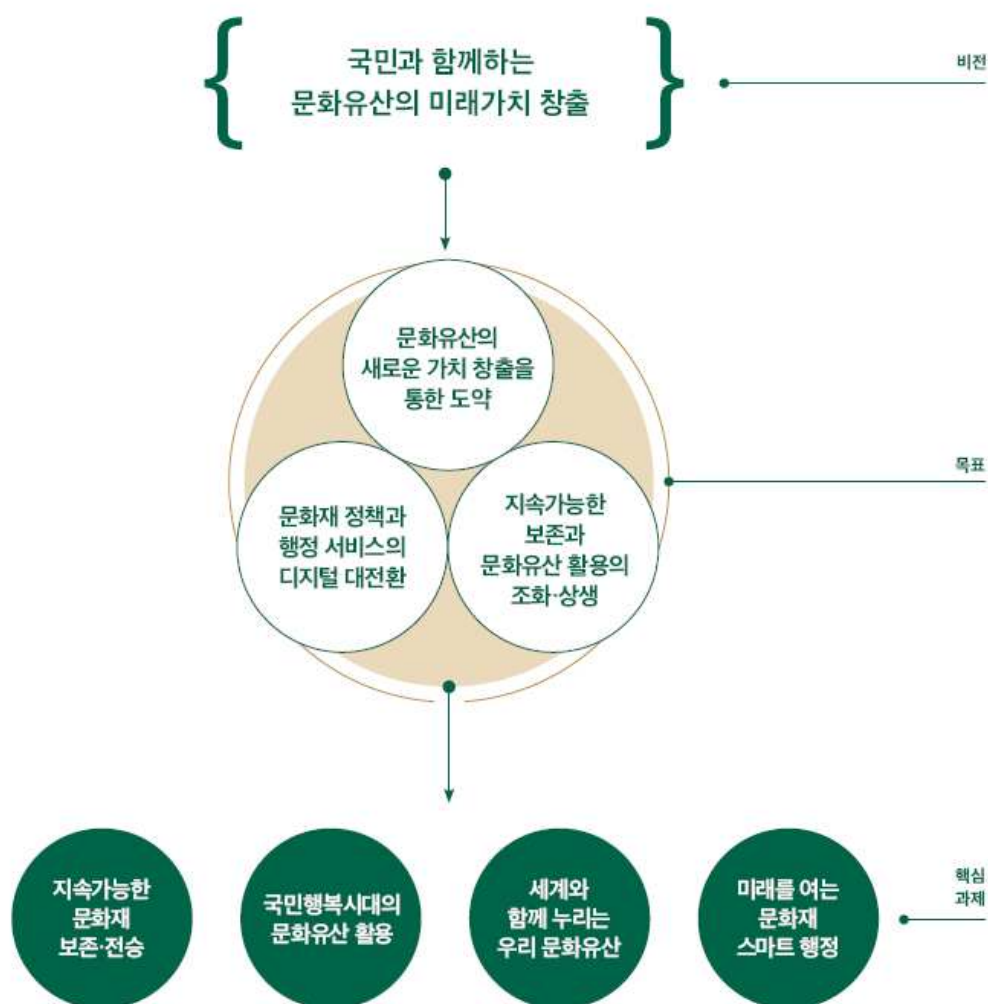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이자 시·도지사의 연도별 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임
- 국가유산 정책 관련 환경의 변화는 크게 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급성장에 따른 디지털 전환, 지진과 호우·태풍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국가유산 향유 욕구 증대 및 경제적 가치 인식 확산, 가상공간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방식,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제적 갈등 등의 변화를 들 수 있음
- 지역유산과 관련하여 지정·등록되지 않은 비지정유산에 대해 보호 대상이 되는 유산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인력의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유산·해양유산 등 타 부처의 ‘유산’ 관련 사업 증가로 인해 정책 대상의 중복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향후 5개년 문화재 행정 추진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본계획의 긍정적 성과는 강화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더욱 고도화되고 미래 지향적인 문화재 정책 방향 제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보존에서 나아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 국제사회 속 한류의 중심에서 문화재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강화, 국제적 선도국가 역할 수행 등 새로운 문화재 행정 추진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확대 및 문화수요에 부응한 국민친화적인 문화재 정책 추진 • 문화재의 활용·보급·교육 정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방향

39) 문화재청, 2021,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 요약·정리

- 지난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관련 환경의 변화와 정책 여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4개의 핵심과제를 도출
 - 문화유산 보존원칙을 구체화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상호 조화 방안 모색 필요
 -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체계 강화 등 문화재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전문인력 확충 및 관련 전문가 양성
 -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문화유산 활용사업 다변화를 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제공
 - 문화유산 원천정보를 활용한 고품격 콘텐츠를 기반으로 비대면·디지털 관련 사업 확대 필요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문화유산에 접목시킴으로써 문화유산 산업 육성·지원 강화 필요
 - 세계 속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섭력 강화 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



2022~2026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핵심과제

- 4대 핵심과제 중 지역유산과 같이 지정되지 않은 유산(미지정유산)의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계획은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부문에서 다루고 있음
-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해 문화재 보존·전승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전환 부문에서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 체계 추진, 문화재 지정·등록의 다양성 확보, 부처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보존·활용 도모 등의 세부계획 수립
- 활용과 관련된 계획은 ‘국민행복시대의 유산 활용’ 과제에서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지역문화유산의 특색 있는 활용사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다양화하여 자생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시함

단위과제	목표 및 세부 사업계획	
문화재 보존·전승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전환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체계	<p>대장주의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호 방식 논의 및 보호 범위 확장을 위한 대장(목록) 기재 방식의 도입 추진 • (기존) 중점 보호[지정주의] → (미래) 중점 보호 + 포괄적 보호[대장(목록)주의] • 문화재보호법 개정(비지정문화재 보호체계 도입) 또는 「역사문화자원 보호·관리 법률(가칭)」 제정 추진 <p>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비지정문화재의 기초현황 파악 및 목록 DB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방안 마련 • 2021년~2024년 전국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지역별 특화된 관리방안 도출
문화재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존·관리 범위 확대	문화재 지정·등록의 다양성 확보	<p>근현대문화유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보건·항일독립·미군기지 등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유산 조사·발굴 • 미군기지 시설물 조사, 학술·기술연구 등을 통해 역사적·상징적·건축사적 가치 등을 고려한 보존방안 검토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부처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 문화재 보존·활용 도모	<p>근대역사문화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관련 사업주체* 간 협업과 지역별·유형별 특성을 살려 이국적인 볼거리와 체험 기회** 등 제공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농림부 등) **근대산업유산 관광 코스 개발, 커뮤니티 시설, 전시관, 체험 장소 활용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세부 계획

2) 국가유산 연구개발 기본계획⁴⁰⁾

- 그간 국가유산과 관련한 연구 개발은 순수 학술 연구 중심으로, 과학적·산업적 측면에서의 로드맵과 정책이 부재하였고, 신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유산 산업 진흥과 일상 생활에서의 문화유산 향유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요구되는 여건
- AI, 디지털트윈 등 축적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가유산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활용하고, 유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 국가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종합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미래 변화를 견인하는 국가유산 과학기술 연구 및 육성 전략을 수립
 - (기술발전) 축적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대
 - (환경변화) 불확실한 기후변화, 지진, 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피해 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 등 환경 대응역량 제고
 - (부가가치) 새로운 경쟁 원천으로서 문화유산 지식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산업 발전 모색
- 국가유산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첨단과학과 함께하는 국가유산 안전관리, 국가유산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원형 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추진하여 국가유산기술의 획기적 발전 및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과학기술이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추구
- 전통 기술 또는 재료 재현·복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재해재난 예방 기반 확충 및 피해 저감 기술 개발 등의 국가지정유산 보존 관련 기술개발 계획이 주를 이루며, 향후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에도 적용가능한 기술 개발 계획
-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전략에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정보자원을 자동화하여 수집하고, 수집·생산된 기록정보자원의 변형·가공을 통해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는 세부 계획은 인천 지역유산의 발굴과 기초자료 수집, 아카이브 및 기록화 사업과도 밀접히 관련됨
- 국가유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여 정보자원을 개방하고 공유를 강화하여 인천광역시와 각 군·구에서 생성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민간에게 오픈 플랫폼 형태로 제공, 학술적·교육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민간이 다시 가공한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 정보공유를 인천 지역유산 플랫폼 구축 방안에 적용할 수 있음

40) 문화재청, 2020,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 요약·정리

비전

인문 지식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 된 오롯한 우리 국가유산

목표

국가유산 기술개발을 통한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기술수준 향상

74.6% → 90.0%
문화체육부 전통문화자원
기술수준 조사 기준

재료의 국산화

문화유산 보수·복원재
국산화 3종

산업 기반 마련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

문화유산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 문화유산 비파괴 진단·분석 기술 고도화
- 문화유산 복원 전통재료 개발
- 현장 맞춤형 문화유산 수리 기술 확보

첨단과학과 함께하는
국가유산 안전관리

- 문화유산 예방 보존 기반 확충
- 재해·재난 SMART 대응
- 국가유산 피해 저감 기술 개발

기초가 탄탄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국가유산

국민을 위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국가유산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 개발
- 문화유산 빅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강화
- 무형유산 맞춤형 활용서비스 확대

원형 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 원형 보존 기술 산업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
- 원형 보존 기술 실증·사업화 지원

제1차 문화유산(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3) 국가유산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⁴¹⁾

- 구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새로운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하면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각각의 법률 제·개정 완료
 - 국가유산기본법(‘23.5. 제정),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23.3. 제·개정), 무형유산법(‘23.8. 개정)
- 2024년 출범하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국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유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잠재적 유산까지 보호 대상 확대,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산업 육성 등 정책영역 확대기반 마련
- 기본원칙으로 “가치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향유,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지역발전”을 내세우고 보존·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 실현에 필수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미래가치 증진을 목표로 함



- 특히 지역유산과 같은 지정·등록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까지 포함하여 미래의 국가유산의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설정
- 비지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 조사 목록화 사업을 토대로 관리·활용 방안 마련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과는 달리 지역유산에 대한 보호 법령은 없으나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하여 새로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4. 9.)에 맞춰 운영기반 마련
- 국가등록유산의 일반적인 연한은 50년 이상으로, 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지역유산은 비교적 역사적 가치가 낮은 대상으로 판단되었으나, 50년 미만의 가치 있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미래 전승가치를 선제적 보호·활용하는 방안 마련

41) 문화재청, 2024,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요약·정리



2024년 국가유산청 주요 업무계획 비전, 핵심 추진 과제

나. 인천시 지역유산 정책의 방향과 목표, 비전 등 설정

■ 비전 및 목표

- 인천 지역유산 정책 비전은 “인천 지역 정체성이 담긴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
-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절차적 과정,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유산의 활용, 개항도시 인천 문화 성장력 발전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함
- 활용 지표와 같이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 평가 도구를 마련하고, 갈등이 심화하기 이전부터 갈등관리 절차를 통한 선제적 협의를 통해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유산 활용과 더불어 개항도시로서 정체성을 담보로 한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비전

인천 지역 정체성이 담긴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제도

목표	중점 과제	기대 효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민주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을 고려한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한 표준 절차 구축 • 보존과 개발 갈등에 관한 효율적인 조율 체계 마련 	객관적 평가 도구와 선제적 협의로 갈등 관리
시민이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 강화 • 소비·향유에서 보존의 주체로써 시민 참여 방안 	시민주도형 근대문화유산 활용
개항도시 인천 문화 성장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정책에 발맞춘 근대문화유산의 연계 활용 • 인천 근대문화유산 맞춤형 활용을 통한 도시의 문화력 증대 	문화 정체성을 담보로 한 도시 활성화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 인천 지역유산 정책 방향

- 인천 지역유산의 정책 방향은 우선적으로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 과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천 맞춤형 지역유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선정
- 지역유산의 관리와 활용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보호 인식 부족과 불분명한 관리 주체이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치조례를 시행하여 보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다. 단계별 실행계획, 자원확보 방안, 국비연동 방안 등 제시

1) 단계별 실행계획

■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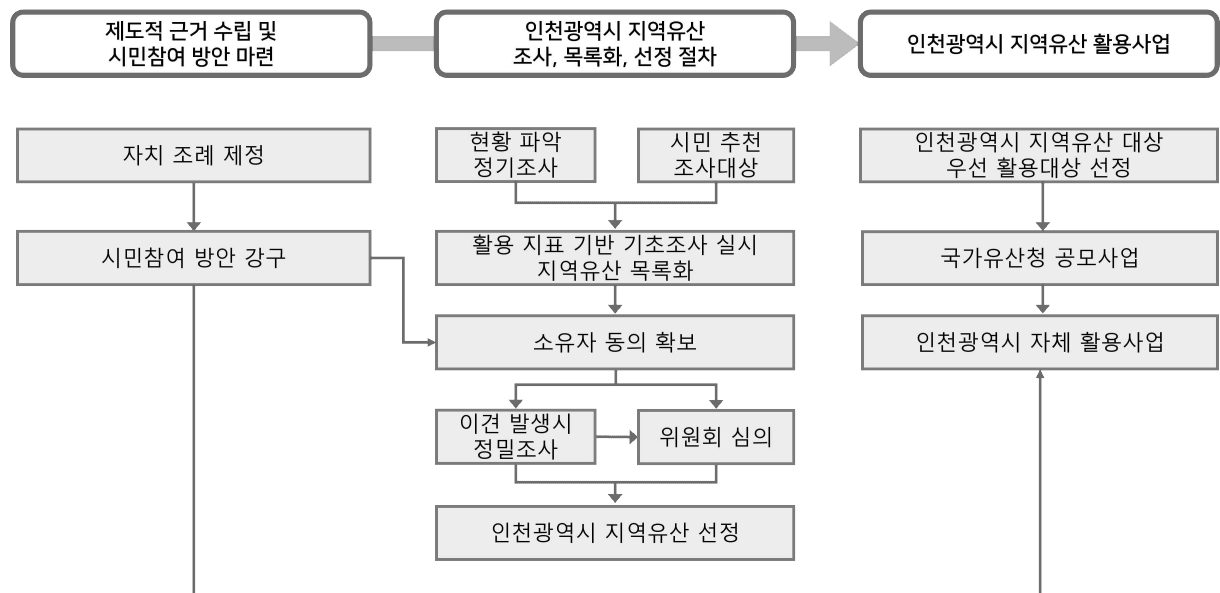
- 인천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유관기관 및 민관 협동 공공 및 민간 거버넌스 구축

■ 인천 지역유산 현황 파악을 위한 연차별 정기조사

- 누락되거나 신규 발굴을 위한 문헌·현장 조사
- 훼손, 멸실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모니터링
- 지역유산 선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갈등 발생 시 정밀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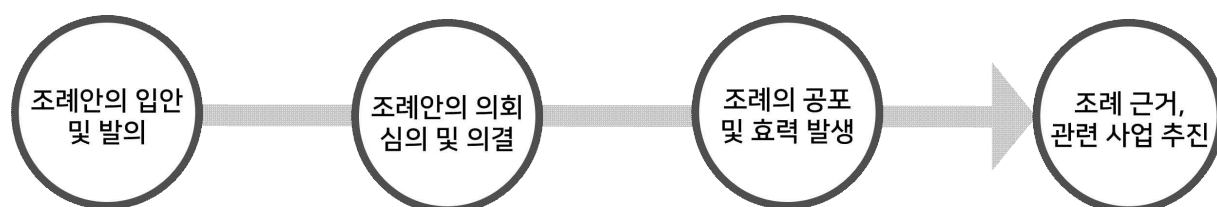
■ 지역유산의 특성과 활용 지표를 고려한 활용 사업 추진

- 활용 지표의 정량적·정성적 판단을 고려하여 객관성·합리성 확보
- 환류 과정, 시민참여를 통한 보완 절차 수행
-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사업 우선 대상 선정
- 대상 유산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인천광역시 자체 활용)



가) 인천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조례의 입안 주체는 인천광역시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발의 가능하며, 입법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입안 및 발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통과한 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 조사·연구부터 시민활동가·해설사 지원, 개별 활용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예산이 투입되므로 재원관리를 위한 특별 회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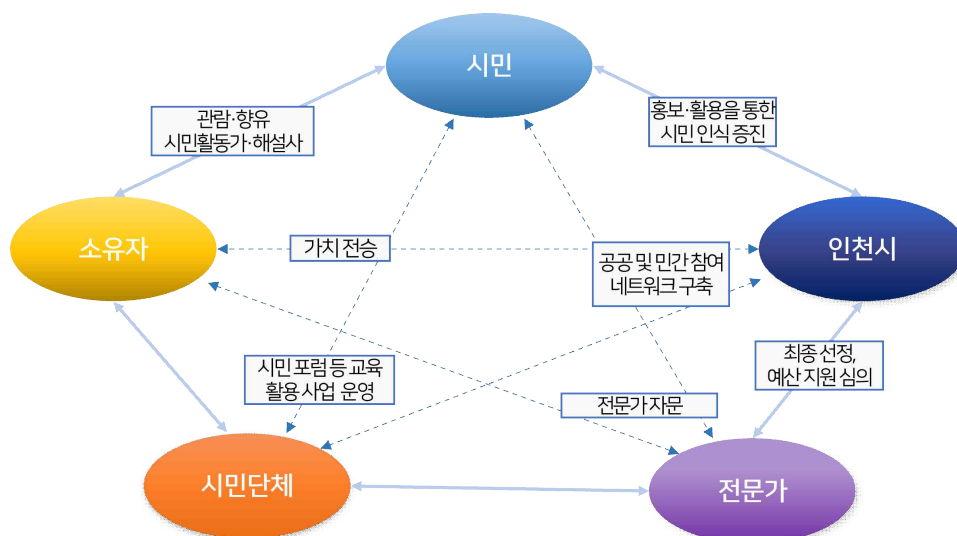
조례 제정 추진 절차

구분	내용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목적 • 용어의 정의 • 기본원칙 •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제척·기피 등, 해촉 • 위원장의 직무 • 위원회의 운영 • 수당과 여비 • 의견 청취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의 관리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절차 • 선정의 취소 • 조사 및 연구 • 기록 및 홍보 •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례의 구성과 주요 내용(안)

나) 공공 및 민간 참여 방안 강구

- 공공 및 민간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사회변화를 고려하면, 인천광역시와 시민단체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참여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반 유산 조직·기업·시민단체·지역공동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인천 지역유산의 보호하고 활용하는 상향식 관리 방식을 추구
- 인천광역시와 비영리시민단체 간 민관협력 네트워크 분석결과,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주요한 협력의 목적으로 나타났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을 넘어서 다양한 정책 도구를 통해 공공에서 네트워킹의 지원, 역량개발, 기금의 조성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⁴²⁾
- 또한 인천광역시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비중이 낮고, 비영리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하지 않아 공공과 민간의 정기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현안과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 필요
- 앞서 살펴본 공공 부문의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및 유관부서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시민 인식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지역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활동 관계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공공 및 민간 참여 구축 체계

42) 김정욱·송영현·여관현, 2020, 인천광역시 민관협력 네트워크 분석: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1), 269-289쪽.

다) 시민활동가 및 시민해설사 활동 지원

-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유산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활동가 및 해설사의 활동비를 경비 보조하여 행정력의 한계 지원
- 시민활동가는 행정기관보다 유연하고 친밀한 태도로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접근 가능하며,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제도를 설명하고 지역유산 선정 및 활용 동의를 구하는 역할 수행
- 시민해설사는 지역유산이 밀집한 지역을 거점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지역유산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을 기반으로 활동 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의 근본적인 도입 취지는 전문적인 관광 해설을 위한 지역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설 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대가나 임금의 차원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실비 보조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이해⁴³⁾
-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 등 기존 해설사 운영을 연계하여 활용 가능
 - 2023. 12. 29.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서울 문화관광해설사(지역유산) 운영 사례



인천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4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23,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라) 인천 지역유산 조사·연구 정기화

(1) 기초조사

- 지역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지역의 잊혀진 자원을 발굴하여 목록화를 위한 기초 조사와 목록화한 지역유산의 가치를 보다 면밀히 판단하기 위한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기초조사는 인천 전역의 모든 지역유산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대장주의 원칙 아래에 활용 지표를 검토하여 지역유산 목록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상을 선별함
- 이와 더불어 훼손·멸실 등 현황 파악 및 점검 등 모니터링 목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한정된 예산 및 시간 내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내에서 연차별로 권역 또는 지역별로 조사 실시

(2) 정밀조사

- 정밀조사는 기초조사 이후 개별 지역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조사
-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역유산 목록 중 이해관계자 간 보존·관리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기초조사 단계에서 적용한 활용 지표와 검토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다 면밀하게 가치를 검증하고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수행하되 반드시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고 실시
- 조사 방법은 문헌연구 및 고증을 통해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며, 대상 지역유산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해 조사

구분	사업내용	산출기초	사업비(천원)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조사·연구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50,000원 ×350개	17,500	5,000	5,000	2,500	2,500	2,500
	정밀조사	10,000,000원 ×40개	4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50,000

마) 활용 사업 추진

(1) 중앙부처 공모사업

- 국가유산청에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국가유산 유유자적’은 국가지정·등록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용사업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함
-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장을 중심으로 생생국가유산과 문화유산야행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으나, 중구를 제외한 지역은 지역유산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거나 지역유산 활용사업이 미진한 실정
-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를 통해 발굴하여 최종 선정된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을 기존의 지정·등록유산과 연계하여 국가유산청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공모
- 생생국가유산 및 문화유산야행 등 기존 활용사업의 주요 거점인 국가지정·등록유산의 주변의 건축물, 공원, 도시기반시설 등 산재하고 있는 지역유산과 연계

(2) 인천광역시 활용 프로그램

-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지역유산은 인천광역시 자체적인 활용 사업을 추진함
 -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긴담모퉁이집’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
- 지역유산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스토리텔링, 활용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등의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운영단체에 위탁

구분	사업내용	산출기초	사업비(천원)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활용 사업	탐방, 표지제작 등 운영	50,000,000원 ×1식/연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 자원 확보 방안

가) 국비 연동 방안

-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에서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에 대한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 문화산업 진흥 육성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됨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
 2.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주변 건조물의 규모, 배치 및 경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절차와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국민이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예비문화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지방비 예산 확보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소유자 등의 신청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예산 편성 시 지역유산과 관련된 분야별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유산과 관련된 분야는 교육,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에 해당하는데 이중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기준보조율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보조할 수 있음
-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 대부분 공적 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반대급부로 원형 보존과 같은 규제가 발생하므로, 원상 유지를 위한 물리적 보호보다는 비교적 규제 강도가 낮은 활용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3.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	기준 보조율	비고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40%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문화·체육 사업	30~70%	인천광역시

정부 및 지자체 지역유산 관련 예산 기준 보조율

다) 민간 부문 자원 확보

(1) 문화유산국민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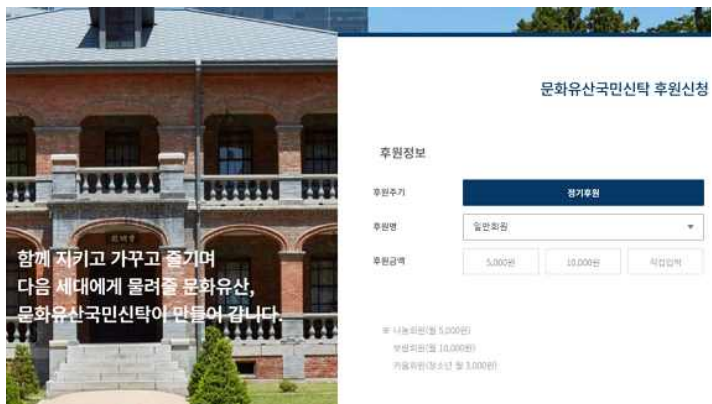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근거로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전·관리·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하는 특수법인 단체임
- 영국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을 전신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 출범
- 민간의 기부·증여·성금 및 모금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 매입·관리와 소유자·관리자와 계약(지정)을 통한 문화유산 위탁·관리로 문화유산의 영구 보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음
-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으로 국고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나,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취지는 국민들의 기금으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매입관리	민간의 기부·증여·성금/모금 등을 통한 문화유산 매입·관리
위탁관리	소유자·관리자와 계약(지정)을 통한 문화유산 위탁·관리
조사연구	보전대상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
보전협약	소유자·관리자와 협약을 통한 문화유산 보전·관리·활용 지원
교육홍보	국민신탁운동의 확산·발전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사업
협력사업	국민신탁운동의 확산·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추진(기업 사회공헌활동)

문화유산국민신탁 주요 활동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국민신탁 개인 정기후원

(2) 시민 크라우드 펀딩

-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등의 매체를 기반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을 지칭
- 자금 후원자가 보상을 받는 방식에 따라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나뉘며,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는 다양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개인 다수의 소액 자금을 운용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민참여 활동에 해당함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호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반 시민이 인천 지역의 지역유산을 인지하는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마을기업, 협동조합, 문화단체 등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⁴⁴⁾
-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자금 모집하고, 사업 추진 절차부터 직접 자금을 투자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사업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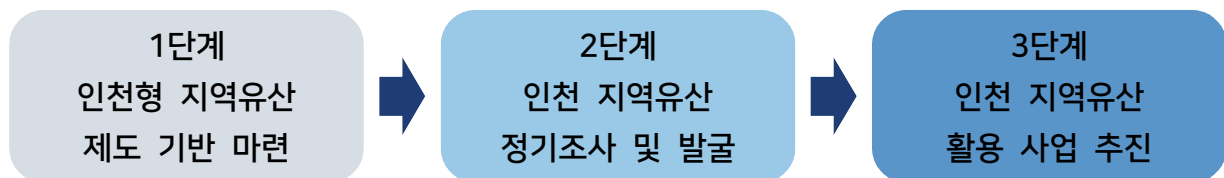


지역유산 크라우드펀딩 사업 사례

44) 인천발전연구원, 2016,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인천시 지역유산의 활용 및 보존 방안

3) 사업 추진 계획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부터 관리 및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활용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단기·중기·장기 3단계로 사업 단계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 도모
-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유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후속 절차로 정기적인 기초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지역유산을 발굴하는 과정 필요
- 이후 인천시민이 지역유산을 일상에서 향유함으로써 미래세대까지 지속해서 전승되도록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체적으로 인천 지역유산 활용 확대



인천형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 마련 및 활용사업 추진 단계

구분	사업내용	산출기초	사업비(천원)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697,500	161,000	161,000	158,500	108,500	108,500
조사연구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50,000원 ×350개	17,500	5,000	5,000	2,500	2,500	2,500
	정밀조사	10,000,000원 ×40개	4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50,000
활용 사업	탐방, 표지제작 등 운영	50,000,000원 ×1식/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등	200,000원 ×15명×2회/년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 추진 절차에 따른 사업 예산안

10

인천형 지역유산 실행 제도 정비 방안

- 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제정안
- 나. 지역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다. 지역유산 관련 조직 및 인력 정비 방안
- 라. 유관기관, 민관 협력 방안

10. 인천형 지역유산 실행 제도 정비 방안

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제정안

-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지역유산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 지역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총칙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관리의 기본원칙,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의 관리 및 활용 부문에서 지역유산 선정 절차, 조사 및 연구, 기록 및 홍보,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부문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목적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목적 • 용어의 정의 • 기본원칙 •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정의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지정절차,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지정서 등의 발급, 효력발생 시기, 지정의 해제, 가지정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의 관리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절차 • 선정의 취소 • 조사 및 연구 • 기록 및 홍보 • 행정적·재정적 지원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 현상변경허가 등 허가 사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매입 보조금, 손실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 위원의 제척·기피 등, 해촉 • 위원장의 직무 • 위원회의 운영, 수당과 여비, 의견 청취
시 문화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구성과 직무,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와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구성과 주요 내용 비교

1)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유산”이란 「국가유산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이 아닌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경관적·예술적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
2. 인천광역시를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기억하고, 인천시민의 애환, 생활과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는 것

② “인천 지역유산”이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 동의를 받아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유산 중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역유산을 말한다.

③ “소유자 등”이란 지역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천 지역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인천 지역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지역유산의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인천 지역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인천 지역유산의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산정책 업무 담당자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의 관리 및 활용

제13조(선정 절차)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인천 지역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 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인천 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천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4조(선정 취소)

-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천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를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 취소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지역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인천 지역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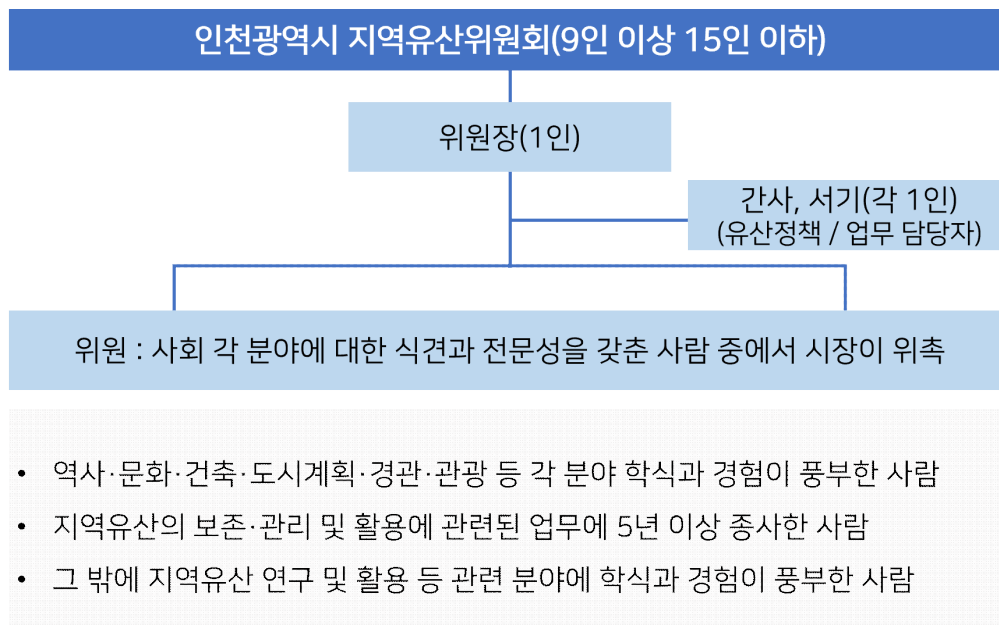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인천 지역유산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의 최종 선정과 인천광역시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개별 지역유산의 관리 및 활용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주체로 다양한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의 선정과 해제,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
- 관계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함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민주적·합리적인 의사 결정 절차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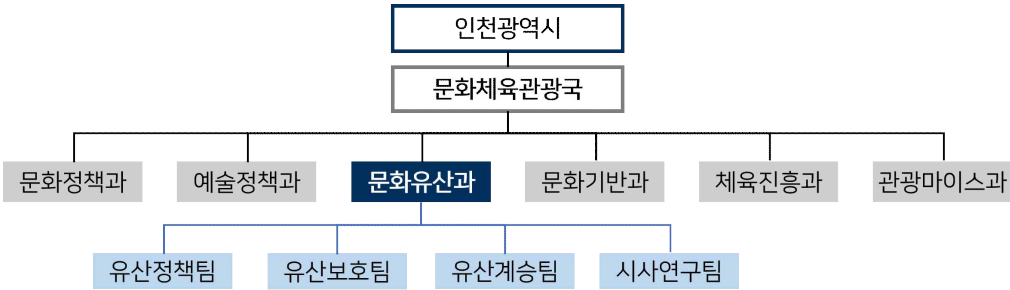
다. 지역유산 관련 조직 및 인력 정비 방안

■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관련 조직 현황

- 인천광역시의 국가유산 관련 조직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총괄하며, 직접 관련된 부서는 문화유산과의 유산정책팀, 유산보호팀, 유산계승팀에서 업무를 담당
- 유산정책팀은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와 함께 국가유산 시행계획 등 포괄적인 국가유산 정책에 관한 업무와 더불어 구)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신흥동 옛 시장관사, 인천우체국 등 개별 지역유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담당함
- 이외 공립박물관 추진, 비영리단체 지원, 계양산 국악제 및 원도사제 등 전통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도 단일팀 단위 조직과 인력에서 맡고 있어 지역유산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유산보호팀, 유산계승팀은 지정·등록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유산 체제에서 다른 국가유산 유형을 반영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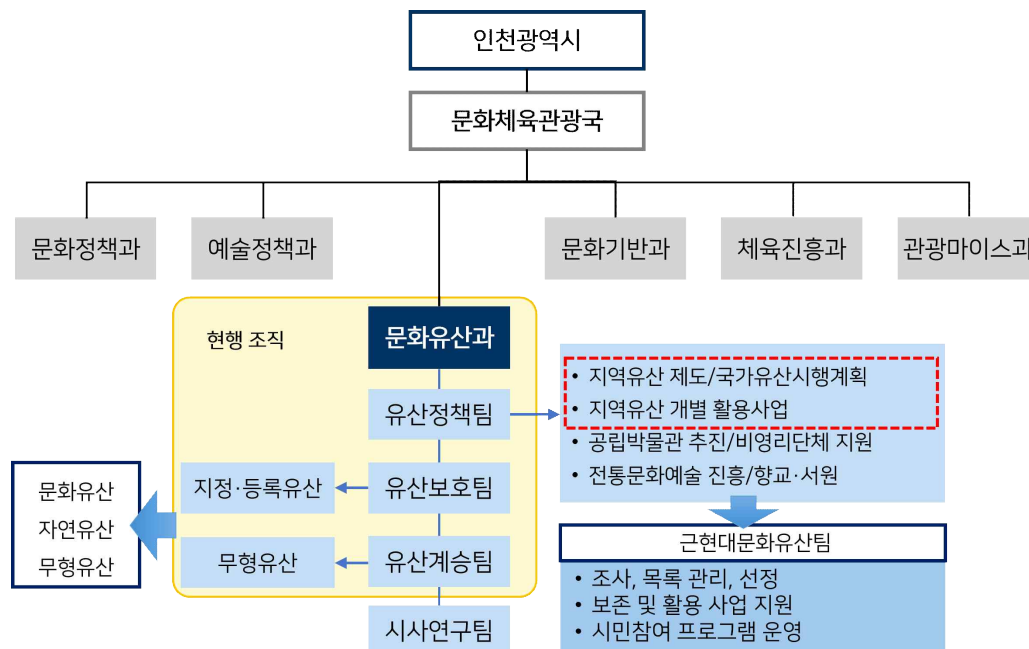
국가유산청 조직 현황(출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2024. 5. 기준)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관련 조직 현황(출처: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2024. 5. 기준)

■ 조직 및 인력 정비 방안

-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역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비롯하여 다각도의 행정 지원을 수행할 전담 부서를 추가한 조직 개편 방안 제시
 - 조사, 목록 관리, 선정 : 지역유산 조사대상 발굴, 기초조사 이후 목록화 관리, 지역유산 소유자 등의 동의 취득, 정밀조사 필요 시 연구 용역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존 및 활용사업 지원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유산 활용사업 외에 향후 추가될 지역유산 대상 활용사업의 관리·운영
 - 공공 및 민간 참여 추진 : 갈등관리를 포함한 공공·민간 소통 및 시민참여 사업 추진 등
- 국가유산 제도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와 함께 2024년 9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을 반영한 조직 개편 검토
- 초기 단계에는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최소 인원으로 운영, 이후 지속적인 활용사업을 위해 지역유산 활용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운영
- 그 외 국가유산 개편에 따라 지정·등록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산보호팀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각각 구분하고, 유산계승팀은 무형유산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하는 개선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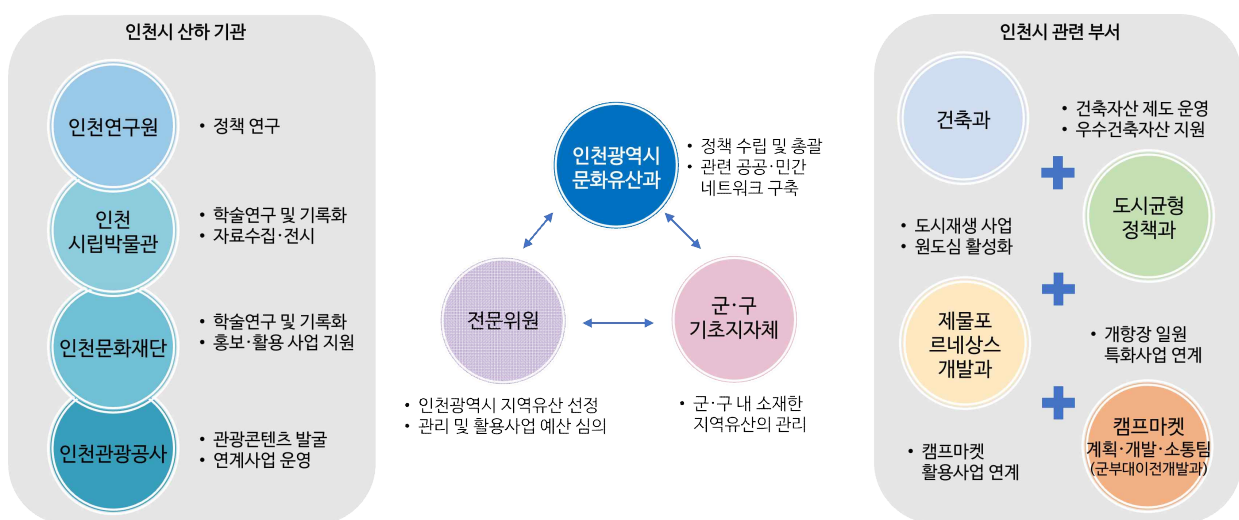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조직 및 인력 정비 개편 방안

라. 유관기관, 민관 협력 방안

■ 공공 부문

-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는 원형보존 원칙에 따라 규제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법 제도 보다 완화된 유연한 제도로써 인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유관기관과 부서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에는 인천연구원과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을 비롯하여 문화관광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산하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내부적으로도 건축자산 제도를 운영하는 건축과,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균형정책과 등의 기본 전담부서를 비롯하여 제물포르네상스와 캠프마켓 등 지역유산 정책에 특화된 부서가 운영되고 있어 행정 조직 및 인적 자원 인프라는 상당 수준 갖추어져 있음
- 다만 유관부서 및 군·구 단위 사업이 각기 추진되어 유관기관과 부서의 면밀한 연계와 소통,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 및 예산 투입이 요구됨
- 지역유산의 유형 및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맞춤형 지원을 위해 건축자산, 도시재생, 제물포 르네상스 및 캠프마켓 사업 전담부서 등 관련 주체 간 협력 강화
- 개별 지역유산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간 업무 공조 강화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유관기관·부서 협조 체계

■ 민간 부문

- 지역유산 관련 의제 발굴 및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민간 기업, 자영업자, 시민단체, 시민 개인 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는 의사소통 또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형성 가능
- 민간의 지역유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시민모니터링, 교육·관광프로그램 운영, 위탁 관리, 주민 의견수렴 등 역할 분담
- 시민단체에 소속되거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을 시민활동가 또는 시민해설사로 양성하여 직접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는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보호를 목표로 하므로, 필요 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검토
 - 거버넌스(Governance) : 주요 문제를 다양한 지역사회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제, 최근에는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문제들에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제의 모색⁴⁵⁾
 -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 : 정부 이외에 다양한 공공·민간 주체가 신뢰와 상호의존성에 기반하는 자율적·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과 자원의 경계를 초월하여 공공 정책과 사회 문제 해결의 공동 의사 결정·계획·집행·관리·지원 또는 새로운 해결 방식과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와 과정⁴⁶⁾

구분	역할	비고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선정 심의 •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검토 • 민·관 갈등 중재 	인천 소재 대학 교수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및 시민 인식 및 관심도 제고 • 지역유산 활용 사업 운영 • 시민 활동 후원 	인천 소재 국가유산지킴이 비영리민간단체
시민활동가 시민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산 가치 공유를 위한 활용·홍보 지원 • 시민활동가 소유자 동의 활동, 모니터링 참여 • 시민해설사 등 활용 프로그램 주체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민간 분야 역할

4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1쪽.

46) 장영기, 2021,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체계 연구, 문화재 54(1), 184-205쪽.

부 록

가. 보고서 주요의견 및 자문의견서

나. 참고문헌

부 록

가. 보고회 주요의견 및 자문의견서

1) 중간보고회

가)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3. 9. 19. 10:30~12:00, 부평문화센터 문화공간 시소
- 참석자
 - 자문위원: 손장원 인천시립박물관장, 정일섭 인하대학교 교수, 홍인희 인천문화재단 문화유산센터장, 이연경 인천대학교 교수
 - 인천광역시청: 김진석 유산정책팀장, 한규복 주무관
 - 용역사: (주)신화엔지니어링 조양근 책임연구원, 신은재 연구원



나) 주요의견

■ 정일섭 인하대학교 교수

- 보존 활용계획에서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가장 큰 관심사임. 소유자 입장에서 활용 계획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원만한 협력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
-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듯함

■ 홍인희 인천문화재단 문화유산센터장

- 과업내용 1~10번 중 4번 정도까지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남은 5~10번이 가장 중요하고 계획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
- 목록 후보 선정이 역사문화자원 2194건에서 유형 186건과 무형 56건으로 정리되었는데, 목록 작성에 대해 공력을 들이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보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방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마련에 대한 제시 필요
- 만약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제시,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수립하고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과업 내용 9번의 장기 미래 목표를 담아줬으면 함. 인력 구성도 들어가면 좋긴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솔직히 힘들 것으로 보임
- 민간 소유일 경우에는 선정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방향을 제시 바람. 근대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이 얼마나 큰 위상을 갖게 되는지도 연동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고민이 필요함
-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건조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국가유산제도에 의해 무형이나 자연유산도 포함될 수 있음.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갈 것인가, 그렇다면 개항 이전의 전근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임
- 목록화의 맹점일 수도 있는 것이 목록화를 하다 보면 그 목록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데, 그 이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함

■ 이연경 인천대 교수

- 지금 어떤 지표나 기준 등이 정해지면 추후 고치기 어려운 부분들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임
- 첫 번째로 목록에 대한 것인데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건축자산 조사, 다양한 책이나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목록 선정의 이유 혹은 근거가 분명해야 함. 예를 들어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1~5점까지 평가했고, 3점 이상에 대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1~2점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판단을 했고 건축자산 조사에도 그러한 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봤을 때 두 조사 혹은 둘 중 하나라도 몇 점 이상이면 포함을 시켰다든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의미가 있음. 지금 목록은 빠진 것이나 불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목록은 한 번 선정하면 나중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목록 작성 필요
- 분류 체계를 역사, 상업, 도시, 생활문화, 예술로 구분했는데 근대문화유산은 하나에만 해당하지 않음. 애관극장 같은 경우 문화예술로 분류했지만,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혹은 여러 시기에 걸쳐 있고, 지금 건물은 50년대 이상이니 한국전쟁 산업화시기

에 해당하므로 중첩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넣기보다는 여러 개를 오히려 중첩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주택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서 역사 분류로만 판단할 수 있지만, 도시의 마을,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도 볼 수 있음. 하나로만 분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 가치 평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것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주관적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점수화를 하는 것은 항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함. 현재 부평지하호나 인천항 갑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점수가 낮고, 등록문화재 추진 중인 미쓰비시 제강도 점수만으로는 보존할 가치가 없게 됨. 그 이유 중 하나는 가치 평가 지표 7개의 지표 중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는 것은 사실 역사성, 문화유산적 가치 2개뿐이고 나머지 지표로 전체 35점에서 25점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임. 연계성은 별도로 두더라도 접근성이나 활용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문화유산적 가치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나 역사문화자원 평가 시 판단하는 건축적, 문화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등의 4개 지표, 건축자산의 지표 3개 등을 반영하에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음.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존 조사에 있었던 점수를 그대로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함.
- 또 하나는 접근성이 낮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유산은 아니라는 점임. 이 경우 어떤 지표가 절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조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가치평가 이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 부분인데, 지금은 점수별로만 나와 있지만 공공 소유와 민간 소유는 다를 수밖에 없음. 건축자산 제도에서도 특례를 주는 것은 소유주 동의하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에만 특례를 주고 있음. 활용 방안은 오히려 2 Track으로 구분해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 의아한 것은 아카이브 활용인데, 접근성, 활용가능성이 떨어지고 전체 점수가 낮은 대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물리적으로 보존이 어려운 대상, 혹은 이미 사라져서 터밖에 남지 않은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함.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너무 점수에 의해서만 자르기보다는 점수들을 크로스체크해서 볼 필요도 있음. 연계성 점수 3점 이상, 미만 이런 기준을 두었는데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해당 유산이 접근성, 활용가능성이 너무 떨어지지만 실제로 역사적 가치에 있어서는 5점이나 4점을 받는 대상이라면 아카이브라도 활용을 해야한다던가 보조적인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무형유산 중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의 배경은 성남 공장단지로 알고 있는데 인천 만석동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검토 필요
- 목록을 이렇게 많은 수를 하기는 샘플링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과업 기간의 한계도 있음. 차라리 수를 줄여서 누구나 중요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목록, 예를 들어 20개를 보되 대상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파악해보는 것. 결국 목록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각 유형에 따라 혹은 점수에 따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목록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 왜냐하면 이미 목록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며, 공공/민간으로만 나눠서 목록을 만드는 것도 방법임

■ 손장원 인천시립박물관장

- 대체적으로 이연경 교수와 동일한 의견으로, 활용도 평가에서 항목을 선정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나 점수 부여의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높은 점수를 획득한 유산이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활용가능한 방법이 없으므로 항목별 점수와 방식은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지금 열심히 항목을 설정하고 점수를 매겼지만 왜 그 항목이 되는지, 그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알 방법이 없음.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큼.
- 오히려 실질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공공과 민간 소유로 분리하고 특히 민간 소유같은 경우는 참여 유도를 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 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근거도 부족한 항목만으로 점수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을지, 보고서는 그럴싸하게 나와도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함
- 목록에는 누락된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제외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유산도 포함되어 있어 목록 선정 기준과 기준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목록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기존의 것을 모아놓은 것뿐이고, 건축자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도서지방 인천이라고 하지만 사실 도서와 관련된 자산은 포함된 것이 없음. 그런데 조사결과 모도에 1907년 지은 장귀틀 마루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옥집도 있고, 자월도에 1881년 지은 건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누락된 상태에서 만든 목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
-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인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인데, 인천의 특성이 뭐냐고 할 때 이에 대한 정의부터 이루어져야 함. 발표에서 인천의 선구적인 것, 역사성, 유일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결국은 역사성으로 귀결되고, 역사성을 보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 지금 현재 인천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이 누락되어 있고,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군산, 서울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우리는 인천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살려 나가겠다는 것이 인천형이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세관 창고 같은 경우는 무너지기 직전의 창고를 문화재도 아닌데 벽을 다 뜯어서 옮기고 그대로 다시 세운 것인데 이게 정말 인천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선구적이다, 유일하다, 오래되었다, 이런 것은 역사적인 것만 본 것이고 그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판단됨. 역사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천형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역사로 따지면 국내에도 다른 우수한 곳이 상당함. 그래서 인천형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 그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고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종합하자면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타당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다른 용역 보고서에서 만들어진 목록을 대상으로

목록을 만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고 전문가 그룹에 의해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점, 점수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천 근대문화유산만이 갖는 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지금 이대로는 기존 보고서와 차별성이 전혀 없음

- 연구진에서 보완할 사항으로는 인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해박한 이해가 있는 연구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야만 조금 더 용역다운 보고서가 나올 것임
 - 애경사 최초 비누공장이 아니고 조성연대 다름, 조일양조장 1919년, 인천아트플랫폼은 4개 동만 근대건축물, 구 미츠코시 백화점/구 산본 포목점 명칭 혼용, 구 경기도립병원장 가옥은 70년대 새로 지은 양옥
- 목록은 오히려 전문가들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리스트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기존에 나와있던 것으로 목록을 만들어도 누락되는게 생길 수 있고 현재도 멸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기존에 있던 목록들 중 계속 목록화되는 것을 다 놓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쪽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시 몇 명이 모여서 보고 오히려 모집단을 줄여 놓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도움이 됨. 모집단의 표본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는 점수화로 높은 점수가 나와 보존 필요성이 높아도 소유자가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이상 소용이 없음. 애관극장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부분이 매우 많고 다 답없는 얘기가 될 수 있음. 점수 주고 객관화시킨다고 프로젝트 진행해도 현장에서 써먹을 수 없다면 의미없을 수 있고, 차라리 점수가 낮더라도 의지있는 소유자,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임

2) 자문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4. 4. 8. ~ 24. 4. 12, 개별 자문
- 자문위원 명단
 - 김경배 인하대학교 교수, 손장원 인천시립박물관장, 정일섭 인하대학교 교수,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연경 연세대학교 교수, 홍인희 인천문화재단 문화유산센터장

나) 자문의견서

자 문 의 견 서	자 문 의 견 서
■ 검토 내용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	■ 검토 내용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
■ 검토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 지역유산과 근대문화유산의 명칭 문제 "국가유산"의 상대적 개념으로 "지역유산"을 쓰는 것은 적절하나, 용역의 범위는 근대 시기의 유산이므로 "지역유산"의 하위개념으로 "지역근대유산"으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 "지역유산"으로 통칭하는 용어 사용의 문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함 2. 가치평가 지표와 시민 참여의 한계점 누구나 동의할만한 객관성을 위해 점수화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작위적으로 판단됨 시민참여는 이상적이지만 전문가 그룹도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포함한 주체가 늘어남다는 게 반드시 긍정적 효과를 낸다고 보기는 어려움 1단계 목록화에서 인천문화재단을 활용한다고 하나 학예연구사 2명 등의 인력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인천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FGI 기법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권고 3. 근대문화유산 보호 보상 체계 우선 개인소유의 자산이 대부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매입을 요구하게 되거나 평장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유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증진시키고 공공성 홍보, 교육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한 대안 마련 필요 4. 상시적인 갈등관리와 전문가의 참여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일상적 갈등관리 필요 근대문화유산 전문성은 자치하더라도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가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역할이 강조되는게 중요함 	■ 검토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여지점과 도록이 필요함 - 인천 근대문화유산의 체계화 필요 (서적, 사진, 유물, 문헌 등) - 인천 근대문화유산 인지도도, 자원조례 신속 및 활용 필요 - 활용방안 구체화 필요 (관공사원, 관공사원, 관공사원, 관공사원) 2. 인천 전역각각 기관에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필요 있음 - 개시, 미리 시정, 전역각각 기관에서 배민 근대문화유산은 쉽게 도록할 수 있음 - 평가년도 증명하게 사용 가능함 - 전역각각 기관에서 개시, 전역각각 기관에서 배민 근대문화유산에서 전역각각 기관에서 개시, 전역각각 기관에서 배민 근대문화유산에서 3. 인천전역 각 기관에서 개시, 전역각각 기관에서 배민 근대문화유산에서 전역각각 기관에서 개시, 전역각각 기관에서 배민 근대문화유산에서
상기 안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4. 8.	상기 안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4. .
참 석 자 자 문 위 원 <u>김경배</u>	참 석 자 자 문 위 원 <u>김경배</u>
인천광역시시장 귀하	인천광역시시장 귀하

자 문 의 건 서

■ 검토 내용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

■ 검토 의견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은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근대문화유산의 성격 및 가치에 대한 분류가
이론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기 안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4. . P

참석자 자문위원 박영선 (서명)

인천광역시청 귀하

자 문 의 건 서

■ 검토 내용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

■ 검토 의견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용역인데, 지역유산이라는 것을 제목에 넣는다면
과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지역유산은 전 시대적이고, 자연유산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목보다는 내용에서 지역유산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근대문화유산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지역유산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의 목록에서 점수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듯함.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것, 그리고 가치를 매기는 것은 자칫 주관적인 것인데 이것을 객관적 지표로 점수
화하는 것은 맞지 않음. 점수는 자칫하면 유산의 가치를 순서 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매길 수는 없음. 목록만 제시하고 그 목록에 왜 이 유산이 들어갔는지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나
을 듯 함. 목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정해줄 수 있기 때문.
-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음. 서울 미래유산 담당자, 부산 미래유산
담당자를 만나거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시행했으며, 시행하면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 문
제점 등을 들어봐야 함. 검색을 통한 조사에서는 좋은 점, 잘하고 있는 점만 부각하기 때문에 시
행하면서 문제점 등은 드러나지 않음. 그러나 시행해야 하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점을 중
점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미리 대비 해야함.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유산의 소유자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 명제가 들어가
는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고, 예산도 반영해야함. 그렇지 않고서는 개인 소유의 유산을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으로 선정 동의받기 어려움. 박물관의 유물 기증자 예우, 타 시도 미래유산 선정자
예우를 명제와 예산 지원 두 측면에서 홍보해야 함.

상기 안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4. 12.

참석자 자문위원 홍인희 (서명)

인천광역시청 귀하

자 문 의 건 서

■ 검토 내용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

■ 검토 의견

- 본 과업의 내용에 없었던 "지역유산"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여 연구내용에 추가하는 것은, 국가
유산청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과업에서 수행하기에는 큰
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유산의 발굴, 보존, 관리 결정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는 장치와 근거 제안은, 근현대 도시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내용이라 생각됨.
- 보존 대상물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조사연구 성과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
하여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 연구내용에서 본 과업 종료 후 관계전문가가 평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연구기간 내에 관내 전문가(근현대 문화재위원, 담당부서 공무원, 학예사 등)
와 정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여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결론 도출을 시행하는 것이 본 과업내용의 실질적 초기 적용이 가능해지는 방안이라 생각함.
(지금까지 여러 법에 따른 비슷한 목록화 작업은 수 차례 있어 왔으나 실질적인 현행화 작업은 아직
전척이 없음)
- 본 과업에서 제안하는 단,중,장기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시청의 관련 부
서별 부과 업무내용과 소요예산(인력) 등을 매트릭스로 작성하여 향후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무
준하게 파악하고 이어나 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근대 유산(건조물)의 보존, 활용정책이 지속가능하면서 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류와 같이
"명실각기제"를 도입하여 도시주민들의 집단적 기억과 유산을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해안 근대 개항도시(부산,목포,군산 등)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보존 대상 건물들을 인천시 관할 지도에 표시하고 지금까지 답사 루트에 들어 오지 못한 위치의
중요 건물들을 (자동차 이용해서라도) 역을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제안할 필요도 있음.

상기 안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4. 11 .

참석자 자문위원 윤인식 윤인식 (서명)

인천광역시청 귀하

자 문 의 건 서

■ 검토 내용

-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

■ 검토 의견

1. 사업 총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지역유산으로 전환하여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 보임. 근대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춰 현 사업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
으나, 향후 지역유산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 정도를 부가하면 좋을 듯.
2.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 점수화하는 방식이 객관적으로 보이나 실제 평가는 공감대를 얻
기 어려움. 기존 조사에서의 평가 점수 등을 확인하거나, 전문가들의 점수 부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혹은 목록화 및 점수 부여 등은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는 우
속 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음.
3. 사업 목표에 따라 전체 성과가 분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음. 기존 사업들의 내용들을 모
아 두는 것보다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관리 체계의 확립, 조례안 작성, 시민협
의체 등 갈등관련 기구 마련, 무분별한 멸실을 막기 위한 대책, 문화재 혹은 우수건축자
산 등록을 권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정리될 필요 있음
4. 조례안 작성이 중요한 결과물로 파악되는 바, 조례안 작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조례 (항
토유산, 건축자산, 혹은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성이 두
드러져야 할 것임. 또한 조례안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로의 지정, 등록 추진 의 우수건축자산으로의 등록 등도 모두에 둘 필요가 있으
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상의 경우 문화재로의 지정, 등록을, 활용 가치가 높은 대상의
경우 우수건축자산으로의 등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활용 방법, 푸어 프로그램 등은 기존에 시행하던 내용 의 새로운 방법 등을 총 세 탐색
할 필요 있음

상기 안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4. 11 .

참석자 자문위원 이연경 이연경 (서명)

인천광역시청 귀하

3) 관계공무원 설명회

가)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4. 4. 16 10:00 ~ 11:15,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다목적실
- 참석자
 - 인천광역시청 및 군·구 공무원, 유관기관
 - 용역사: (주)신화엔지니어링 조양근 책임연구원, 신은재 연구원



나) 질의사항 및 주요의견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재 담당

- 지역유산이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면 기존에 운영하던 향토 유적과 지역유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토유적조례를 지역유산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답변> 지역유산이 향토유산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해야 할 제도라고 보고 있음. 비지정유산에 문화재청 차원의 제도가 마련된다면, 지역유산과 상충되거나 수정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 거버넌스를 통해 조율할 수 있음

- 국가유산 체제에서는 향토유적을 포함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들었는데, 비지정문화재의 향토유산과 지역유산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지금 인천형 지역유산 관리방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임

답변>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지역유산 등 비지정된 유산을 문화재청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재 담당

- 군·구 지역유산과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이 병렬로 간다면, 중복으로 지정이나 관리되는 경우는 지원 문제 등이 발생할 것 같음

답변> 공공 협력 체계 중 공공 부문에서 중구와 시에서 협의를 통해 기초조사와 활용 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부서간 협력에 대한 부분을 조례의 규정사항으로 담아야 할지는 의문이지만 공공 협업 체계 내에서 시와 중구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문화재지킴이 시민단체

- 지역유산의 관리활용 방안 중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재 지킴이 단체가 150개 정도, 활동 인원은 약 6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인천에는 활동 인원이 3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음. 문화재지킴이, 즉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은 국가유산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해서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는 문화재지킴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에는 조례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음. 이번에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강제사항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등 활동단체들이 추가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비영리단체와 시민들이 지역유산을 보존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좋은 쪽의 관리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람.

■ 부평문화원

- 부평에는 캠프마켓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음. 시민 주도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캠프마켓 같이 민간 주도로 개입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
- 거버넌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는 캠프마켓과도 있는데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답변> 캠프마켓 관련부서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서 누락된 사안으로 보완 예정, 다만 조례상으로 어떤 과를 특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음. 어떻게 보면 권고하고 활성화를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제안할 수는 있지만, 조례나 법적인 규제, 어떤 강제사항으로 두기에는 어려움.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보면 공론조사를 1차적

으로 실행하고 2차 단계에서 갈등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 구성단계에서 인천시가 나서고, 갈등 당사자인 양측 참여를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갈등 협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관심있는 분들은 공론화조사 단계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꼭 시민단체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목적이어서 조례상의 근거를 통해 차별화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함

■ 홍인희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실 과장

- 비지정유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인 소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가장 첨예한 문제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찬국 중구 문화관광 주무관

- 원도심 주민들은 부정적 생각이 상당히 큰데, 지역유산은 규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 방안 강구 필요

나. 참고문헌

■ 논문

- 김종수, 2019,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손갑진, 지역적 연계를 고려한 인천역사 증축 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현정, 2020, 서울미래유산과 일본 프로젝트 미래유산의 한일 비교연구, 비교일본학 50, 27-50쪽.
- 김건, 2017, 지역자산을 커뮤니티 소유로, 영국의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제도, 건축과 도시공간 26, 70-75쪽.
- 김용철, 2020,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 미술사학연구 제 408호, 220-224쪽.
- 김정옥·송영현·여관현, 2020, 인천광역시 민관협력 네트워크 분석: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1), 269-289쪽.
- 남지현·조희은, 2019, 지자체의 근대건조물 조사 및 활용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3), 5-24쪽.
- 장영기, 2021,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체계 연구, 문화재 54(1), 184-205쪽.
- 전대욱, 2015, 지역공동체 소유권과 자산화 전략, 지방자치FOCUS 103, 2쪽.
- 정민섭·박선희, 2006,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향에 관한 연구, 컨벤션 연구 14, 38-39쪽.
- 조은영,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까? - 서울미래유산 사업의 사례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2), 2016.
- 조은영·강지선·김광구, 2018, 도시재생 시민참여과정 비교분석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2(2), 165-189쪽.
- 주강원, 2023,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홍익법학 24(2), 220-224쪽.
- 안대환, 2021, 도시별 건축자산의 가치판단 기준 특성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의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12), 223-234쪽.
- 윤선자, 2011,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방안 연구, 한국근현대사 연구 2011(57), 195-221쪽.
- 이수진·류제현, 2019,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1913~2016, 문화재 52(2), 94-111쪽.
- 황기연·나태준, 2005,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도시연구 6(4), 169-190쪽.

■ 보고서·단행본

- 국무총리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2014.
- 국토연구원,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 2006.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1.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2017.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문화재청, 2019.
- 남지현·조희은, 경기 및 인천의 철도변 근대건조물 보존과 지역적 활용방안, 경기연구원, 2016.
- 단국대학교·미디어콘텐츠연구원,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연구, 문화재청, 2011.
- 문화재청,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2007.
- 문화재청, 주요국 문화재보호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2010.
- 문화재청,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2014.
- 문화재청, 근·현대산업시설 목록화, 2018.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국보·보물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8.
-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법제화 방안 연구, 2020.
- 문화재청,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2021.
- 문화재청,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22.
- 부산광역시, 부산 미래유산제도 연구 용역 보고서, 2019.
- 부산광역시,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2020.
-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목록화 최종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 2017.
- 서울특별시,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세부 보존관리방안, 2015.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2003.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인천광역시, 2005.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인천광역시, 2008.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2019.
- 인천발전연구원,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인천시 지역유산의 활용 및 보존 방안, 2016.
- (재)인천문화재단,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 2009.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유형문화재 국보·보물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8.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 야행사업 평가체계 개선 용역 최보고서, 문화재청, 2019.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충청남도, 2016.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202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2006.
- 행정자치부, 갈등관리 매뉴얼, 2016.

■ 누리집

- 국가유산청 <http://www.khs.go.kr>
-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 <http://www.iha.go.kr>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서울 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 월미도 <http://wolmido.allplaces.kr>
- 인천광역시청 <https://www.incheon.go.kr>
-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 기타

- 서울연구원, 2023, 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발표자료(2023.09.07.)
- 인천광역시, 2023, 2023년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